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

더불어 사는
삶

학습하고 실천하는
삶

활동가가 쓴

민주시민교육 안내서

활동가가 쓴 민주시민교육 안내서

글쓴이 조철민
조양호
권복희
서미화
이필구
이 호

펴낸날 2017. 12. 26.

펴낸이 문성근

펴낸곳 서울특별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03086)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22, 3층
(02) 747-2020 | seoulminjucenter.kr

이미지 제공 (주)에스폼(표지) | Flaticon(이모티콘)

Copyright©서울특별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 이 안내서는 서울특별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민주시민교육 연구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센터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안내서는 비매품입니다. 자료요청 등은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활동가가 쓴
민주시민교육 안내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를 필요로 한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초대 대통령이던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말은 아직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민주적인 헌법을 가졌지만 나치라는 괴물을 탄생시키고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왜 민주주의가 실패했는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해 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의 유지에 따라 설립된 에버트 재단은 전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을 접했던 것도 약 20여 년 전 에버트 재단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에버트 재단의 인권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시민의 역량이 크게 성장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적이지 않은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광장민주주의를 경험한 시민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가 우리 삶 속에서 펼쳐져야 한다는 열망을 키웠습니다. 그 열망은 정책과 제도, 시민사회의 실천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시민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화두를 시민·시민사회·서울시와 함께 나누어 짊어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뭐예요?”

정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 파랑새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과 시민이 만나 함께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모습 속에 희망을 봅니다.

이런 희망을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도록 작은 책을 준비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모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채워가겠습니다. 시민에게 친구와 같은 안내서가 되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센터장 문성근

차례

머리말

안내서 사용법

1장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왜 민주시민교육일까요?	11
한국 사회는 민주사회인가요?	14
민주주의는 민주제를 운영할 시민이 있을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18

2장 민주시민교육의 이모저모

민주주의	23
시민	36
교육	44

3장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기술들

1. 마음열기, 자기이해, 공감	57
2. 아이디어, 상상, 발표	64
3. 대화, 소통, 합의, 결정, 문제해결, 갈등해소	70
4. 교류, 참여, 공유(정보, 지식, 경험)	87
5. 회고, 성찰, 마무리	95

4장.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법들

1. 제기하다	99
2. 나누다	106
3. 주인되다	111
4. 감시하다	121
5. 만들다	124
6. 착한 삶(Fair Life)	129

보론: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민주시민교육을 향하여

어떤 시민성인가?	135
어떻게 하는 시민교육인가?	139
한국형 민주시민교육은 가능한가?	142

부록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프랑스)	149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155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158

미주	164
----------	-----

안내서 사용법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한 안내서가 필요해요.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2017년 인권상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수여했습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자신감과 자부심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민주주의란 말이 더없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민주주의를 우리 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다음 발걸음이 되는 것은 당연해보입니다. 자,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해야 해요? 뭐가 달라요?”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본 안내서는 이런 질문들에 답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질문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현장성을 담은 안내서입니다.

본 안내서의 집필진은 시민교육활동가들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더 좋은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시민과 청소년을 만나는 활동가들로서, 수년의 현장 경험 속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본 안내서에 담았습니다. 민주주의가 최고의 제도가 아닐 수 있듯이 본 안내서 역시 표준전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시민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려는 활동가들과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세대마다 다시 태어난다’는 존 듀이의 말처럼, 민주시민교육 안내서 역시 또 다른 경험을 가진 분들에 의해 새로운 내용들이 담기길 기대합니다.

왜 민주시민교육일까요?

우리는 시민으로 태어나지 않고 시민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위기와 전환의 시대를 조망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 민주주의라는 사회체제 안에서 왜 우리가 시민으로 자라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찾아보세요.

2장에서는 민주주의, 시민, 교육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흐름과 제도를 이해하고 그 변화를 살펴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 중요한 가치들 또한 놓치지 않습니다. 민주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시민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되는지 각국의 사례도 보고, 시민이 어떤 관계를 가진 사람들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도 알아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흐름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제도화 경향을 알아봤습니다.

민주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3장에서는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기술을 모았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은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기술을 통해 서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신뢰를 쌓은 후 우리는 더 견고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는 방법들은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까지, 낯설에서 긴밀함까지,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과 성취로 나아가기까지 단계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모든 기술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실천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법들은 생각보다 쉽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4장을 보면 됩니다. 나의 주변,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제기하는 방법에서부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까지, 다양한 순간마다 여러분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공공의 일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감시할 수도 있고, 중요한 일에 참가해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하지만 모르는 일, 모르는 문제를 알리는 일도 중요한 행동입니다.

‘제기하다, 나누다, 주인되다, 감시하다, 만들다, 착한 삶.’

시민이라면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행동입니다.

민주주의를 배운다는 것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첫째, 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행동하면서 배워요.

둘째, 가르치는 사람도 함께 배워요.

셋째, 나, 우리, 사회가 조금씩은 변화하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보면 좋아요.

- 👤 민주주의 한번 배워볼까 생각한 적 있는 사람
- 👤 민주주의를 주제로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 사람
- 👤 민주주의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
- 👤 사회문제, 마을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
- 👤 내 삶과 주변을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

1장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왜 민주시민교육일까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더욱 생각나는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표면적으로만 보면, 선주는 규정된 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인원과 물량을 싣고 배를 출항시켰고, 감독 당국은 그것을 적발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먼저 배에서 빠져나갔고, 해경은 구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정치권과 대통령은 무책임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란 말처럼 물밑에 잠겨 있는 이면은 세월호 참사 직후 유튜브(YouTube)를 통해 절규하는 한 학생의 외침에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침통해 하고 있는 이 사건을 나는 오늘에야 알았다. '중간고사' 기간이 었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는 소위 SKY를 많이 간다. 이렇게 공부해서 외교관, 기자가 되면 뭐하겠느냐. 어른 되기가 무섭다.”

구조될 수도 있던 아이들 수백 명이 찬 바다에 빠져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구조에 제대로 책임지지 않거나, 계속 거짓보도를 한 정부 고위관료, 정치가, 기업경영자, 기자가 우리에게 세월호 참사를 ‘별일 아니’라고 설명하고 규정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신경 쓰지 말고 중간고사나 잘 봐서 경쟁에 승리하라고,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학교교육과 사회가치가 무섭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떠돌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0년 서울에서 열렸던 G20 폐막식장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주최국인 한국기자들에게 마지막 질문기회를 줬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질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기회였고, 질문할 권한을 우선 한국기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지만 질문을 위해 손을 든 한국 기자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기자에게 질문권은 넘어갔습니다. 5분 남짓한 이 영상을 보며, ‘왜 우리는 질문하길 꺼려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 하지마!” “가만 있어라!”는 말은 현재 한국사회 자화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만있지 않는 사회, 질문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시민으로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절로 시민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민주시민교육의 철학이자 원칙인 민주주의를 헌법에 비추어서 풀이하면 이렇습니

다.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가공동체의 정체성인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 성평등, 지속가능성 등 행복한 삶과 좋은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공유가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유가치에 관한 지식을 넘어 그것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삶과 사회를 민주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소통하며 공동체를 가꾸어 가는 이를 시민이라 말합니다.

결국 한국사회 내 절차적, 형식적 민주화의 진전 이후 절제되지 않은 이해관계의 분출, 사회갈등, 공공영역에 대한 경제적 논리의 잠식 등 기존의 시스템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회문제를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민주주의 가치와 생활양식을 배우고 체화하기 위한 사회전반의 교육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이 갈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해 보이네요. <교육기본법> 제2조를 보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을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은 성인교육의 6가지 영역 중 하나로 '시민참여교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 민주제를 운영할 시민이 자연스럽게 양성돼야 합니다. 하지만, 권위주의적 국가체제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관해 학습하고 훈련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은 직업교육, 취미교육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시민교육 환경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의 함양, 그리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형성이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한 불요불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걸까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불확실성의 시대, 위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 자연재앙, 난민과 빈곤,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에도 마스크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과학세계가 21세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평화와 생존의 문제는 지구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세기는 물질의 힘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도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성장해야 하는 무한경쟁체제로 달려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 세계 20여 개국도 안 되는 선진국들의 근대화와 세계화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지구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 세계화 결과로 세계 인구 1%가 전 세계 재산 총액 40%를 차지하고, 가장 부유한 상위 10%가 전체 자산가치 85%를 독점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26억 명이 하루에 채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며, 그 가운데 족히 1/3은 1달러 미만으로 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¹⁾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과 부의 편중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후변화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1962년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으로부터 1972년 로마클럽이 발표한 ‘성장의 한계’ 등까지, 지난 반세기 이상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문제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매년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성장’을 부르짖지만, 세계는 점점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로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탕에는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대 교육은 아는 것이 전부였죠. 어두운 세상에 한줄기 빛을 비추면 밝아지듯이, 무지한 사람을 깨우치면 발전할 것이라는 계몽주의적 사고가 지난 250여 년을 지배해 왔습니다. 데카르트가 등장하기 전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넘는 또 다른 순환질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평생의 삶속에서 깨우치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신비한 존재에 대한 겸허함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과학의 이름으로 커져만 가는 인간의 오만함을 덮어두었던 걸까요? 20세기 들어 과학의 믿음, 성장의 믿음을 기반으로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전 세계가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가난과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죽어 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 가격을 맞추기 위해 곡물을 바다에 버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고기를 먹기 위해 인류가 생산한 곡물의 40%를 소먹이로 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성장에 기반한 산업화의 결과, 인류의 소수는 초호화 문명이라는 혜택을 누렸지만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근본적 고민인 가난과 질병문제를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채, 현재도 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는 가까운 50년 동안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인구 이동이 늘어났고, 지속가능할 것으로 보았던 전통적인 농촌공동체는 급격히 소멸되었습니다.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중요한 삶의 원리인 공동체적 가치마저도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삭막해지고 책임이 국가보다는 개인에게 향하게 되면서 비정규직, 임시직, 다양한 인턴 등 노동착취가 점점 심화되고, 일베와 같은 비상식적인 현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노동착취와 경쟁은 날로 심각해지면서, 단기적으로 돈을 벌어서 쓰고 여행 다니는 삶을 마치 ‘쿨한 삶’이라고 부추기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지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면 경쟁과 소비가 그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고, 국가는 존재만 할 뿐 역할은 하지 않게 됩니다. 김찬호가 쓴 《모멸감》이란 책에서는, 경쟁이 극심하게 되면 이긴 자가 다 가져가고 자신이 점점 지는 상태가 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면 모멸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남을 먼저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자본주의 경제의 생태적 전환, 아울러 물질지향적인 자본주의적 가치와 인식의 생태적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 자연의 메시지임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²⁾ 이렇게 현재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실천이 전 사회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프랑스 정치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에 의하면, 민주주의의 기초는 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판단하는 ‘시민사회’의 성장에 있다고 합니다.³⁾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선 그만큼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한국 사회는 민주사회인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갖는 기본 권리와 덕목의 묶음을 시티즌십(citizenship)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통선거가 확립된 것은 1945년 2차 대전의 종전 이후에야 나타난 일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서구의 여러 나라들도 성, 인종, 소득, 교육, 종교에 따라 투표권 부여에 여러 제한을 두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보통선거권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투쟁을 통해서 힘들게 쟁취되어 왔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마샬은 이런 과정을 통해 영국의 시티즌십이 형성되었고, 시티즌십은 시민권(civil rights), 정치권(political rights), 사회권(social rights)으로 확장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샬에 의하면, 시민권이란 주로 개인의 안전과 권리에 관한 것이고, 정치권은 정치 참여에 관한 권리, 사회권이란 모든 시민이 경제·사회적으로 품위 있는 기본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있어 시티즌십을 알기 위해서는 시민권, 정치권, 사회권이 생활공간인 지역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척도를 알 수 있는 OECD 평가 자료를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꽤 높게 나옵니다. 평가 항목 중 ‘참여제도가 제정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체감하는 민주주의 수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제도,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법·제도상으

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속빈 강정’과 같습니다. 제도는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문턱은 너무나 높기만 합니다.

일상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는 시민으로 성장합니다.

일상에서 주민들이 참여해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주민 참여예산을 처음 실시한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의 주민 활동입니다. 처음 브라질에서 참여예산을 시작한 이유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산이 별로 없다 보니 적은 예산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해 그대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시장이 자신의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 10여 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하면서 시민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처음에는 시장을 보면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고맙다고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 해야지’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여예산의 긍정적인 점은 재정 민주주의로,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측면은 참여과정을 통해 주민의식이 바뀌고,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를 바꾸는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바이오치(Gianpaolo Baiocchi)는 자신의 글 ‘마르코 이야기’ (The Citizen of Porto Alegre)를 통해, 어떻게 한 주민이 참여로 인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는 도시로 이주한 지 8년 정도 된, 잡역부로 살아가는 가난한 주민입니다. 마르코는 초등학교 교육만을 받았고, 고향마을에서 버스를 빌려 포르투알레그리로 들어와 빈민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르코는 이웃 사람의 손에 이끌려 우연히 참여예산제 주민총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내 삶을 변화시킬까?’ 당연하게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그 첫걸음이 마르코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켰습니다.

마르코는 총회에서 이야기되는 대부분의 안전을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문제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마르코는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참여예산제의 진행과정과 그 규칙에 관해 배울 수 있었죠. 이런 과정에 참여하면서 마르코와 동료 대의원들은 자기 동네에 도로를 놓고 하수도를 설치하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 뒤 마르코는 점점 더 열심히 참여했고, 동네모임들을 만들면서 자신의 꿈이었던 무단 점거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전에 한번도 사회운동에 참

여하거나 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었던 마르코는 이제 매주 총회에 참석하고, 때로는 새로 온 참여자에게 참여예산제를 설명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고 합니다. 평범한 주민이 능동적인 활동가로 변신한 셈이네요.

이처럼 브라질의 이 작은 도시에서는 예산을 시민의 힘으로 결정하고 그 과정을 통해 시민이 자연스럽게 양성되지만,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10년 정도 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권력구조가 바뀌고 있다고 실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참여과정이 열린다 해도 ‘정해져 있는 참여’, ‘정부가 열어준 참여’ 수준에 불과해서 형식만 있을 뿐 내용과 과정은 여전히 부실해 보이기만 하네요.

정치학자들에 의하면, 일차적인 민주화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때 달성된다고 합니다. 정권교체가 여당 내부의 교체라면, 그것은 아직 일차적인 민주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야당으로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었을 때, 비로소 민주화의 일단계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민주화는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으로 그 일 단계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 2008년부터 야당이 집권하게 됨으로써 한국은 일단 형식상으로는 여야 정권 교체가 공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사회에 도달하였는지는 스스로 반문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교체는 민주화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선거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정한 선거, 그리고 투표권의 자유로운 행사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합니다. 대표 행위가 이뤄지거나 선거에 강압이 행사되는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란 시민이 주인 역할을 하는 한 가지 방식, 시민 국정 참여의 한 가지 방식일 뿐입니다. 대의 민주주의는 선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와 사안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될 때, 보다 착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크빌이 미국을 돌아보며 주목한 것은 미국 북동부 뉴잉글랜드 타운의 타운십(township) 제도였습니다. 인구 2~3천 단위 타운의 주민들은 행정 공무원들을 투표로 뽑지만, 공공사안에 대한 결정을 공무원들에게만 맡겨두지 않았습니다. 교육, 조세, 치안, 공공사업 등 마을 현안에 대해 마을 회당에 모여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여 해결방안을 찾았습니다. 자치의 힘은 시민들 스스로 다양한 결사체를 만들어 공적 문제에 대해 직접 대응해 나가는 데서 옵니다. 토크빌은 “자치제도 없이는 자유정신을 가질 수 없다”고 하면서, 자치하는 결사체의 전통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묶어주고 있음을 통찰했습니다.

결국 선거만 있고 시민의 직접참여가 없다면 이는 온전한 민주주의라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독재 국가가 선거라는 형식만 있지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시민의 실제 정치 참여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헌법이 강조하는 기본권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시민의 직접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그것인데요. 이러한 기본권 행사를 통해 시민들은 선거가 아닌 일상적 시기에도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하고 이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유, 평등, 정의

민주주의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자유’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기존 질서로부터의 이탈과 일탈을 허용하는 반대와 비판과 창조의 자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탐구(학문)의 자유, 억눌린 자들을 살리기 위한 저항의 자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가?’ 스스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투표할 자유만이 자유가 아니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선택하는 자유만이 자유가 아닙니다. 기후변화 문제, 거대한 권력이 시민의 자유로운 영역까지를 조이고 침해하는 이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무한 경쟁체계 속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 눈 가리고 정신없이 뛰게 하는 교육체제와 학교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자유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제약이 없음을 말합니다. 존 로크는 “법의 목적은 자유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이는 자유를 전혀 거꾸로 이해하여, 바로 자신이 타인의 자유를 폐지하고 제한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지 않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것도 자유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 자유와 평등은 서로 모순된다거나, 자유와 정의는 함께 갈 수 없다거나 하는 잘못된 생각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법이 헌법이고, 여러 가지 권리들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이러한 법의 정신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는 자유를 지키고 확대합니다. 또한 정의는 만인이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민주사회의 평등은 정의의 원칙과 연동합니다. 민주사회의 평등이란 무조건적인 평등이 아니라, 정의라는 원칙 아래서의 평등입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조절하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듯 자유, 평등, 정의가 올바른 방식으로 서로 관계 맺을 때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제를 운영할 시민이 있을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Democracy)’는 ‘시민’을 뜻하는 ‘Demo’, ‘권력’을 뜻하는 ‘Kratia’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시민이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즉 민주주의는 국민이 스스로 정치적인 지위를 결정하고, 경제·사회·문화의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능력에 기반을 둔 제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적정한 민주적 제도와 절차의 확립, 그리고 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시민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능력은 정치적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판의 능력, 그리고 정치사회의 공공선에 대한 헌신과 정치 과정에 대한 참여의지, 그리고 시민 상호간에 요구되는 시민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민의 능력을 키워서 생활 속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민주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실제로 살아 있게 하려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잘 안 보이는 것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권한을 시민들이 갖는 것입니다. 미국 로체스터 시의 ‘마을을 만드는 이웃들’(Neighbors Building Neighborhood) 과정을 보면, 주민들이 주체성·주도성·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로체스터 시장은 단적으로 “마을회의에서 공무원이 할 일이란 장소를 잡고, 행사장의 불을 켜고 끄는 역할”이라고 말했답니다. 주민들이 논의하다 막힐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나 행정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나머지 모든 것을 주민들이 모여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일은 쉽지 않고, 사실 실제로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처음부터 자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런 일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경험해 본다면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예산에 관심이 없다가 예산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본인이 기획하고 돈을 써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름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지역과 예산 배분의 구조에 대해 알고 싶은 것도 생깁니다. 이해관계를 알아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각각의 사안에 대해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으니, 이해관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를 충분히 드러내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함께 구상하는 과정, 그 자체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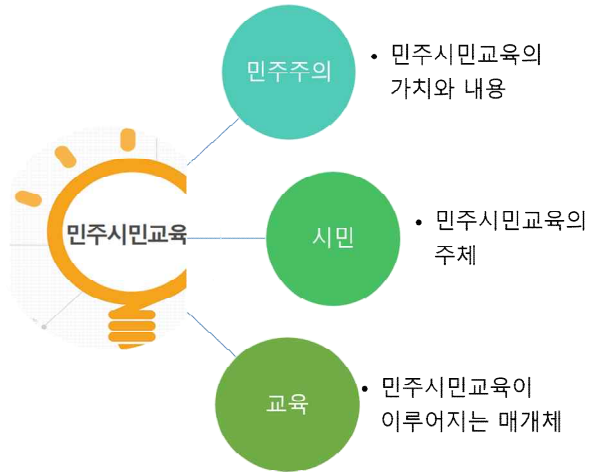
한나 아렌트는 자신을 민주주의자라 하지 않고 정치주의자라 말합니다. 유태계 독

일인이었던 아렌트는 독일 나치즘 시대를 살면서, 유대인을 유럽으로 빼내는 일을 하다가 수용소에서 6개월 정도 갇혔는데요, 그 경험이 평생 그이의 삶을 좌우하게 됐습니다. 끔찍한 수용소 생활에서는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름, 언어, 목소리, 신체 같은 것들—은 사라지고 아무 의미 없는 번호로 불리며 의미 없는 존재로 취급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종당하는 무엇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언어로 소통하고 공동의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관계, 정치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임을 알려주는 속성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렌트는 당시의 수용소 생활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비슷하다고 말하면서, 민주주의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도 옆집 사람을 동료로 마주보고 살고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가 가능한 관계가 맺어지려면 얼굴을 마주하며 대면하고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봐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자신과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만 만나고 있지 않은지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체주의는 개개인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망을 파괴하기 때문에, 결국 서로를 같은 시민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민주주의란 서로를 시민으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한 훈련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망을 잘 형성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면, 민주적으로 어떤 일을 같이 하기 위한 구성방식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민주적 의사소통을 전제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과정에서 들어오지 않는/못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말입니다.

민주주의란 절차와 과정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누구와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간디는 7가지 악덕을 말했다고 하네요. 그 7가지 악덕은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입니다. 민주주의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치에 기반하지 않는 일 중심으로 고민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과나 효율, 효율적인 의사진행이나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어떨까요? 문제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변화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장
민주시민교육의 이모저모



우리는 흔히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사랑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랑에 관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모여 사랑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형성됩니다. 마찬가지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민주 시민교육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를 배우고 훈련함으로써 시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호혜적인 삶의 양식을 형성하기 위한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반의 제도적·사회적 기회와 노력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시민자치와 호혜적 삶의 양식은 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民主)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화(共和)에 관한 것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을 구성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교육의 일반적인 형태는 강의실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나 지식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다양한 학습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토론, 학습공동체, 실천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연구, 정책, 지원 등에 관한 활동들도 민주시민교육의 과정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인 ‘민주’, ‘시민’, 그리고 ‘교육’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으로 다수결 원칙과 그것이 제도화된 선거를 꼽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 표어는 이런 경향을 잘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자연스레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임명되는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을 떠올립니다. 즉 생계를 위해 바쁜 일상을 사는 평범한 시민들을 대신해 공적인 일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떠오릅니다. 흔히 우리가 ‘삼권분립’이라 배운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를 떠올립니다. 이런 요소들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민주주의는 이를 뛰어넘는 좀 더 넓고 깊은 의미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이해를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를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민주주의를 살펴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제도’의 측면, ‘원리’의 측면, 그리고 ‘실천’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흘러 왔는지 간략한 역사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흐름

헤겔(G. W. F. Hegel)은 “인류역사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방향으로 발전해 간다”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즉 왕만이 자유로운 군주제에서, 소수의 특권세력만이 자유로운 귀족정에서, 모든 시민들이 자유로운 상태를 지향하는 민주제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한국에서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서구의 역사와는 다른 양상을 띠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실험 이후 현대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서구 사회는 대체로 제3세계 국가들을 식민지로 경영하면서,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각 나라의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쳐 민주주의를 형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스스로 민주주의를 형성해갈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서구사회로부터 전파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민주주의가 시작됐습니다.

저항 속에서 틈은 싹

한국의 경우 구한말부터 민주주의에 관한 사상이 전파되기 시작했지만, 긴 일제강점기를 거치게 됩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첫 도전은 일제강점기인 1919년 일

어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수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1운동은 일제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전국적인 대규모 독립운동이었고, 임시정부는 독립을 위해 해외에 세운 독립적인 정부였습니다. 해방 이후 불어닥친 세계적인 냉전 흐름 속에 남과 북은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민족끼리 이념의 차이로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한국전쟁을 거친 후, 한국은 전후 사회재건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반민주적인 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 시도에 시민들이 항거한 4.19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씨앗은 '밖으로부터' 들어왔지만, '아래로부터'의 저항 속에서 싹트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져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러한 맥락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시민들의 힘으로 일군 민주화

하지만 4.19혁명 직후 일어난 5.16군사정변을 시작으로 한국 현대사는 긴 군부독재의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공동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민주화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당시 정부의 정권연장 시도와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억압이 이어집니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이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시민들의 민주화를 향한 열망과 운동이 활성화되고,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이에 대한 정권의 반응인 6.29선언을 계기로 본격적인 민주주의 진전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개혁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주의는 고정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확장시키려는 힘과 그것에 역행하는 힘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 오늘도 그 역

사의 나이테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2016년 겨울 일어난 전 국민적인 촛불시위는 민주주의의 이런 성격을 잘 말해줍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제도는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정착된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 등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제도들에 관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일종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컴퓨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운영체제가 장착돼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개발한 윈도우(Window)가 가장 많이 채택되는 운영체제입니다. 흔히 운영체제는 윈도우 한가지라고 알고 있지만, 운영체제에는 맥(Mac)이나 리눅스(Linux), 그 밖에도 다양한 것들이 상황에 따라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체제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제가 나타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운영체제에 문제가 생기거나 새로운 환경 대응에 한계가 드러나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패치(patch)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개선된(Up-grade) 판본(version)의 운영체제로 교체하기도 합니다. 국가 정치와 사회의 운영체제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운영체제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즐겨 채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체제에 대의민주주의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인류가 발전시켜온 다양한 색깔의 민주주의 제도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실제 구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점들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 민주주의의 형태 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민주주의는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변화·발전해 왔습니다.

민주주의 제도의 난점들

많은 나라들에서 그렇듯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적 틀은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대의민주주의는 각 지역이나 집단들이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들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의 문제를 다루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방식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만이 아닙니다. 화백회의, 만민공동회 등 우리 역사 속에서도 직접민주주의의 경험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공공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늘어나고 사회의 범주가 확대되면서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대신할 대의민주주의제가 주된 제도로 채택됐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지닌 여러 가지 유용성을 토대로 다양한 장치들이 개발되고 활용돼 왔습니다. 여기에는 선거, 정당, 삼권분립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포함됩니다.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결과들⁴⁾

1. 전제정치의 방지: 잔인하고 포악한 독재자의 통치를 예방한다.
2. 본질적 권리들: 비민주적 체제가 허용하지 않는 일정한 기본권(참정권, 표현의 자유)을 보장한다.
3. 일반적 자유: 개인의 자유들을 보장한다.
4. 자기결정: 자신이 선택한 법 밑에서 살 수 있다.
5. 도덕적 자율성: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6. 인간계발: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신적 성숙을 기대할 수 있다.
7. 본질적인 개인적 이익들의 보호: 자신의 근본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한다.
8. 정치적 평등: 성원들은 높은 정치적 평등을 누릴 수 있다.
9. 평화의 추구: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
10. 변영: 민주적 정부는 비민주 정부보다 변영하는 경향이 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가진 여러 가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요구되는 지점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먼저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안고 있는 본원적인 문제로, 권력을 위임 받은 대표자와 주권자 즉 시민의 의사 사이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대표자와 주권자 사이의 의사가 완전히 일치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간에 충분한 공통성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표자가 무능하거나 주권자의 의사에 현저하게 반하거나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경우,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왜곡됩니다. 나아가 대표자가 위임 받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시민들을 지배하려 든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비단 논리적인 가정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를 통해 실제로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난점은 사회환경의 변화를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대표자와 주권자 의사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짚어 봤는데, 현대사회의 문제와 욕구들이 점점 더 복잡다양해지면서 대표자들이 그 복잡다양한 맥락을 수렴하고 다루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을 보완한다는 유용성 역시 도전 받고 있습니다. 사회의 각 부분에 자치권을 부여하면, 해당 부분의 구성원들이 기민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대의민주주의의 절차를 밟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의 변화들

최근,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지닌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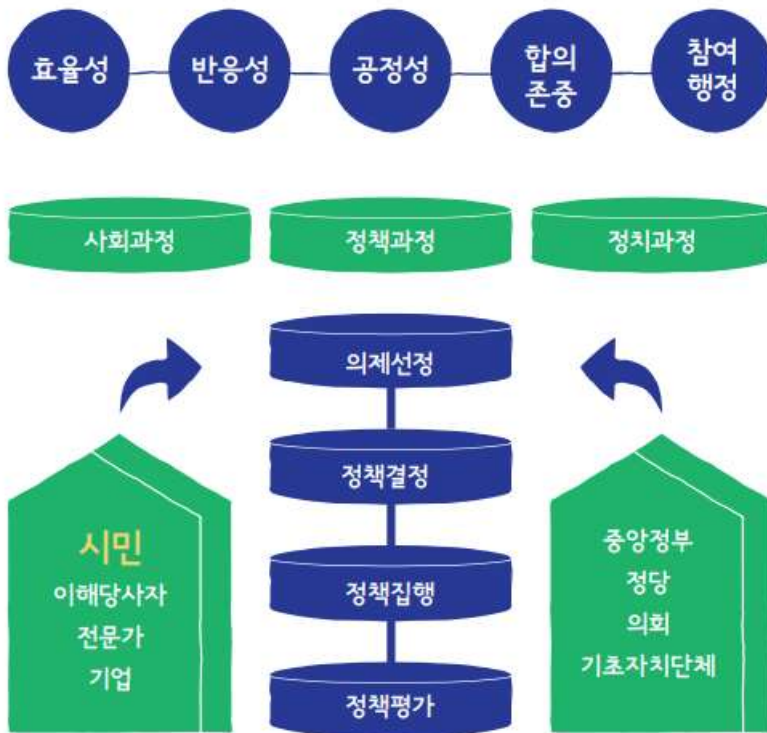
첫 번째는 대의민주주의를 중심에 두되 민주주의의 원형적 성격을 보존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가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투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관해 전 국민에게, 좀 더 정확하게는 유권자에게, 투표를 통해 직접 의사를 묻는 제도로 ‘국민투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⁵⁾ 또한 우리나라는 각 지역의 공공 문제를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수준에서는 좀 더 다양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 등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소환’은 특정 요건을 갖춘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를 소환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주민발안’은 대표자인 의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들의 결정이 바로 조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들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통해 결정한 사안을 의회가 의결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조례개폐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투표’는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중대한 사안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인 집회나 시위를 통한 직접행동도 적극적인 직접민주주의 실현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회와 의회 영문표기가 assembly로 동일한 것을 보면, ‘직접행동’과 ‘의회’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대표자와 주권자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참여민주주의 제도들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진전돼 왔습니다. 참여민주주의 제도들은 정부가 시민들의 의사에 좀 더 잘 부응하기 위해 채택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시민사회의 논의와 요구에 의해 도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민주주의 제도 역시 지방자치 수준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정부의 행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정부의 활동을 통해 생성된 공공정보를 시민들이 요구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정부의 행정활동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들은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주민감사청구), 감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난 경우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주민소송). 한편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민원, 공청회, 여론조사, 자문위원회 등과 함께 좀 더 적극적인 장치들이 모색돼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일부를 의회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편성하는 과정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협치의 흐름

민주주의 제도의 변화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흐름 중 하나는 협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공의 문제해결 주체는 정부였는데, 최근 들어 정부가 공공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시민사회 주체들과의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경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시민사회가 공공정책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시민사회가 감시하고 무언가 요구하던 '소비자'에서 공공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는 '생산자'로 그 역할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흐름을 이전의 흐름과 구분해 '협치2.0'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자와 주권자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또 다른 형태의 변화된 민주주의 제도 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 좋은 협치의 개념 요소6]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은 시민들 공동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인 국가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이 조항을 알고 있지만, 일상 속에서는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군부에 의한 독재정치 시기에 제정된 유신헌법(대한민국 헌법 제8호)의 조항과 비교해 보면, 이 조항이 지니는 무게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국가의 정체성인 ‘민주’와 ‘공화’의 본질적인 의미에 관해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신헌법 제1조

-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현행 헌법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民主)

먼저 ‘민주’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民)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일컫는 집합적 개념입니다. 민주(民主)는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는 느낌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은 우리는 우리의 삶, 즉 사회적 삶의 주인이라는 느낌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모여 사는 즉 사회를 이루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운영하기 위한 틀인 국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民)들이 주인(主)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주(領主)나 군주(君主)의 시대를 거쳐 왔습니다. 조선시대를 돌아보면 왕이 국가의 모든 것을 소유한 주인이며, 모든 백성은 그의 신하, 즉 신민(臣民)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民主)의 시대는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상태를 지향합니다. 모든 시민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가꿔 가고, 공동의 삶 역시 집단으로서 시민들이 함께 운영해 나갑니다. 따라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이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인의 반대말 하면 노예를 떠올립니다. 주인과 노예를 구분하는 근본적인 차이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스스로 자(自)와 말미암을 유(由)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자유는 단지 억압이나 강제가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나의 생각, 결정, 행동의 이유가 나로부터 비롯되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자유(自由)는 자기(自己)의 이유(理由)로 걸어가는 것입니다.”⁷⁾

이에 따라 누군가 나에게 강제로 무언가 시키는 경우 말고도, 우리가 흔히 겪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남들 다하니깐 나도 하는’ 상태입니다. 행동의 이유가 내 안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니까요. 이런 적극적 의미의 자유를 위해 우리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중에 형성된 마음의 습관, 일상적인 선택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생각하는 약간의 노력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시작하고 능력을 키우는 기본적인 기회가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화(共和)

시민들 공동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써 국가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이루는 두 번째 요소는 ‘공화’입니다. 이는 공동체 할 때 공(共)과 조화 할 때 화(和)가 합쳐진 말입니다. 공화의 출발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고 공동의 가치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지표와 사건들이 말해 주듯, 우리 시민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에 관한 심각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삶의 ‘존재’적 측면을 형성한다면, 우리가 다른 동료 시민들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관계’적 측면을 형성합니다. 전자가 민주주의 가치를 설명한다면, 후자는 공화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개인적인 문제, 가정 안에서의 문제라 생각하는 것이 실은 다른 관계나 집단, 그리고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비판적인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판의 사전적인 의미에는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뜻도 있지만, 부분과 전체의 연관성에 기반해 생각한다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나와 타인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 우리의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와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서로의 다름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우리의 곁을 내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다른 점을 수렴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공동의 가치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을 지니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은 서로 기대고 돕는 것임을 이해하고 그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흔히 ‘관용’(tolerance)과 ‘연대’(solidarity)라고 개념화합니다. 이는 자유와 평등과 함께 프랑스 혁명에서 주창되고, 지금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본가치인 ‘박애’(fraternity)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존엄의 가치

시민들 공동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인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두 가지 요소인 민주와 공화를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 그릇의 존재 이유는 제10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존엄의 가치이고 두 번째는 행복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인 ‘존엄의 가치’에 대해 칸트(I. Kant)는, 인간이 목적 그 자체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격이 갖춰진 인간성은 목적 자체로서 ‘비교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인간의 존엄’(Menschenwürde)이라 부릅니다.⁸⁾ 예전에는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특성이 이제 모든 사람(民)에게 부여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받는 대접이다.”⁹⁾

일상 속에서 존엄은 소중히 여김 받는 것, 존중 받는 것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중이 조건부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내가 재산이 많아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잘 생겨서, 학력이 좋아서, 집안 배경이 좋아서 존중 받는 것이 아니라, ‘개·돼지’가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일단 가치를 지니며 존중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니체(F. W. Nietzsche)는 인간을 ‘신(神)과 짐승 사이에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존중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신’의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만큼 단순해 보이는 존엄의 가치는 현실 속에서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고, 심지어 인간이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짐승’의 방향을 향할 때가 많음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양반과 상놈이라는 신분제가 있던 시절, 혹은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던 시절에 비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충분히 지켜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존엄성에 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주화가 진전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차 기본적인 존엄성 역시 진전돼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이나 권력의 논리가 힘을 얻을 때 언제든지 다시 후퇴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일어난 ‘세월호 사건’은 존엄성의 기반이 되는 생명과 안전의 문제도 돈과 권력의 논리 속에 유보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계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사건이 아니라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신이 존중 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누구의 가족, 누구의 친구, 어느 조직의 역할, 자신이 하는 일, 좋아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닌 정체성 중 하나가 존중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모멸감을 느끼고, 사회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테면 음악을 하고 싶은 청소년이 부모님으로부터 “음악을 하면 굶기 십상이니 하지 마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다거나, 자신의 사상이나 취향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럴 경우 자신이 지닌 다른 정체성들이 존중 받더라도, 우리는 존엄의 가치와 관련해서 깊은 질문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행복의 추구

국가의 두 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행복추구입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부탄(Bhutan)의 정책적 실험으로부터 출발한 국민총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개념적 도구입니다. 기존에 한 국가의 발전 정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 널리 활용되던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이 삶의 질을 파악하는 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비판 속에 채택된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그들 국민의 행복을 창출해낼 수 없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부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부탄 정부가 1970년대 국민총행복지수를 도입할 때 천명한 구호입니다.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 그리고 그 국가가 민주주의에 기반해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를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총행복지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행복을 생각할 때 많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표: 국민총행복지수의 구성]

영역	내용
정신적 건강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정신경향
보건	정신건강, 건강진단, 건강한 삶, 신체장애
시간이용	노동, 수면
교육	교양교육, 학교교육, 지식교육, 가치교육
다문화성	모국어 구사, 문화적 참여, 예술적 능력
좋은 거버넌스	정부활동, 기본권, 사회보장, 정치적 참여
공동체 활력	기부(시간·돈), 공동체 관계, 가족관계, 안전
생태적 다양성과 복원성	생태학적 문제, 환경에 대한 책임, 자연재해, 도시화 문제
생활수준	자산, 주택, 가구 인원당 가구소득

민주주의의 성격에 관해 가장 널리 알려진 말로 링컨(A. Lincoln)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People) 것’이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성격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는 데도 유용하지만, 민주주의의 발전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의 주인(主)은 민(民)이라는 선언입니다. ‘시민에 의한’은 국가와 사회의 운영이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은 국가가 그리고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이유를 의미합니다. 즉 민주주의는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시민들의 존엄과 행복입니다. 마셜(T. S. Marshall)은 이런 세 가지 측면을 권리의 관점에서 각각 시민권(시민의), 참정권(시민에 의한), 사회권(시민을 위한)으로 개념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있어 행복을 논할 때는 주로 세 번째 측면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건강할 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 좋은(decent) 일자리에 관한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제10조에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행복추구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민주’와 ‘공화’가 민주주의 작동의 근본 원리라면, ‘존엄’과 ‘행복’은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에 관한 공유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서는 주인의 자리에 사람 대신 돈과 권력이 자리하고, 동료 시민들이 더불어 사는 대상으로 인식되기보다 경쟁의 대상, 부담스러운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존엄’과 ‘행복’의 자리를 ‘생존’과 ‘성공’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단군 이래로 가장 많은 부(富)를 형성했지만, 모두가 돈을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분주하지만, 정작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지요. ‘민주’와 ‘공화’, ‘존엄’과 ‘행복’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

제도와 원리라는 측면과 함께, 민주주의의 모습을 이루는 또 다른 측면은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 중 민주주의를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중 ‘시민에 의한’은 실천으로서 민주주의와 연관이 깊습니다. 토크빌(A. de Tocqueville)은 ‘모든 시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에 관한 비난과 혐오의 태도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누워서 침 뱉기’와 같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수준은 시민들의 수준과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체육에 비유

해 보겠습니다. 흔히 체육은 국가대표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elite)체육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향유하는 생활체육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국제대회 등에서 국가대표 체육이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그 저변이 되는 생활체육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자면, 축구 국가대표팀의 꾸준한 성적과 전국에서 활동하는 조기축구회, 유소년·청소년 축구클럽, 학교 체육의 활성화는 깊은 연관을 지닌다는 것이지요. 정치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국가대표는 국회, 정부, 사법부와 같은 기관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저변을 이루는 생활정치는 가정에서 마을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참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정치는 서로 구분되는 성격을 지니면서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즉 국가대표 정치가 왜곡될 경우 생활정치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생활정치가 건강하게 활성화될 때 국가대표 정치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정치의 두 가지 의미¹⁰⁾

- ① 국가라고 하는 공동생활의 틀 속에서 단순히 개개인의 풍습이나 도덕 등의 자율적인 규범만으로 유지되지 않는 질서를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법과 그 밖의 방법을 동원하여 유지시키는 작용을 정치라고 보는 견해
- ② 정치는 국가만으로 한정되는 인간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생활의 제(諸)형태, 이를테면 회사·노동조합·교회·학교·가정 등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의견의 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통제의 작용도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

정치를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 권력쟁취와 통치의 과정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시민이 일상적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거나 상충되는 신념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으로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민주주의와 정치는 우리로부터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를 혐오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시민에 의한' 실천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둘러보면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다양한 '시민에 의한' 실천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는 촛불시위나 재난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전 국민적인 자원봉사와 같은 대규모 참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한 동료 이웃을 돕거나 뭔가 잘못돼 가는 것을 감시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 그리고 권력과 돈의 질서에서 벗어나 좀 더 인간적이고 의미 있는 삶의 양식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은 다양한 실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실천들에 관해 별도의 장을 할애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시민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전개해 온 다양한 유형의 실천 활동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활동

들을 펼쳐 가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방법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본질적으로 지식의 축적이 아닌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기에, 시민에 의한 실천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런 실천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와 같이 시민들의 실천을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일이 없더라도, 이런 실천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로막는 사회적 조건과 문화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장애물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이런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열 가지 생각의 덫¹¹⁾

1.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2.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3. 혼자서는 변화를 만들 수 없어
4. 나는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해
5. 이건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일이야
6. 난 시간과 힘이 없어
7. 난 성자가 아니야
8. 난 이 문제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
9.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어
10. 난 활동가가 아니야



시민

시민의 사전적 의미는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우리 공동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며, 그 그릇의 성격을 민주주의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의 삶을 살아 내는 주체를 시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이라는 개념과 실천은 서구 사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민에 관한 우리 사회의 논의와 실천도 서구로부터 전파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현실과 만나면서 형성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에 관한 서구의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는 것은 유용한 일입니다. 시민에 관한 서구의 논의를 살펴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서구 국가들이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서구 민주시민교육에서의 시민

독일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 불립니다. 모든 교육은 그것을 통해 학습자가 변화되어 이르기를 바라는 지점, 즉 인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일 정치교육의 인재상은 한마디로 ‘비판적 시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나치즘과 공산주의라는 두 가지 전체주의를 만들었던 역사로부터, 다시는 시민들의 손으로 이런 전체주의를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치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치교육의 중심적인 지향은, 시민들이 정치적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비판적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스웨덴에 있어서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상호 구분되기보다 동일한 의

정치교육에 관한 독일연방 내무부 지침¹²⁾

“첫째, 전통적인 정치교육의 주제인 반나치즘과 반공산주의는 앞으로도 견지돼야 할 지향이다. 둘째, 정치교육은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조화’와 ‘칭송’으로만 표현해 왔다. 또한 공동체와 협력관계의 지나친 강조는 정치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들기 쉽다. 향후 좀 더 실제적 민주주의의 이해를 위해 이해관계, 갈등, 권력과 같은 개념들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스웨덴 성인교육의 목적¹³⁾

1. 민주주의를 강하게 하고 발전시킨다.
2.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발전에 참여하도록 한다.
3. 교육격차를 줄이고 사회 안에서의 계몽과 교육의 수준을 높인다.
4. 문화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문화 활동 참여를 증진한다.

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스웨덴에 있어 민주시민교육에 해당하는 것이 성인교육(Folkbil dning)인데, 성인교육의 주요 목적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삶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에 자신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요. 스웨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육은 하나의 서비스라기보다 권리이고,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통로입니다. 스웨덴에서 가장 일반적인 교육 형태는 학습동아리(studiecirklar)인데, 사람들은 흔히 스웨덴의 민주주의를 '학습동아리 민주주의'라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서구 사회이면서도 영국과 미국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결의 시민상을 지향하고 있는 듯합니다. 영국의 경우 왕족을 비롯한 지배계층이 시민들과 타협한 명예혁명을 거쳤습니다. 지금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왕족이 유지되는데, 왕족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덕목이 필요할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영국왕족이 출현해서 참전하는 모습을 보며 흔히 지도층의 책임(nobles oblige)이라고 평가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문화는 지도층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영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은 흔히 시민성 교육(citizenship education)이라 불리는데, 시민들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참여하는 '적극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을 강조합니다. 미국의 경우 북미대륙에서 건국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없을 때부터 시민들이 모여 공공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직접 처리하는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동체를 위한 '시민적 관여'(civic engagement)를 중요시합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민주시민교육 내용의 전부는 아니지만, 각 나라의 역사·사회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핵심적인 시민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 민주시민교육의 요소¹⁴⁾

사회적-도덕적 책임감(Social and moral responsibility)
공동체 참여(Community involvement)
정치적 문해력(Political literacy)

한편 프랑스의 경우 '시민성을 향한 교육'(éducation à la citoyenneté)을 통해 '공화국 시민'을 강조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화'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동료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개인과 모두의 관계를 인식하는 가운데 공동의 가치를 설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¹⁵⁾

프랑스 민주시민교육의 요소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지식
사회, 경제, 정치질서에 대한 지식
프랑스 사회의 최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능동적 참여

한국에 있어서의 시민

해방과 전쟁을 거쳐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의 시민은 두 가지의 간극 사이에서 형성됐습니다. 첫 번째는 독재정치를 종식시킨 4.19혁명을 이끈 ‘시민’과 이어지는 군부 독재 시기의 억압에 숨죽이면서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소시민’의 간극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재건과 사회개발을 위해 동원된 ‘관 주도 시민’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 시민’이었습니다. 이후 4·19, 5·18, 6월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시민들 자신이 여기에 직접 참여했다는 공동의 경험에 근거한 시민 정체성이 형성됐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건 멀리서 응원하던 사람이건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고초와 환희를 함께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시민의 정체성은 ‘저항하는 자율 주체’로서 본격적으로 형성됐습니다.¹⁶⁾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배경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해결과 욕구충족을 위해 나서는 ‘참여적 시민’과 정부나 기업의 잘못에 대해 좌시하지 않는 ‘비판적 시민’으로 진화해 왔습니다.¹⁷⁾ 하지만 이런 모습은 한국 시민들이 지닌 한 측면입니다. 한국의 시민들에게는 2007년 태안 기름띠 제거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나 2016년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촛불집회와 같은 성숙한 모습도 있습니다. 반면, 천민자본주의, 절제되지 않은 욕구의 표출, 집단 이기주의 등과 같이 미성숙한 모습도 혼재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시민상은 무엇일까요? 혹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아쉽게도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시민상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표: 각 국의 중산층 개념 비교]

프랑스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며 • 손님이 왔을 때 직접 요리해서 대접할 수 있는 요리가 하나 이상은 되어야 하고 • '공공의 분노'에 의연히 참여할 것 •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어플레이를 할 것 •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미국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 책상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사회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 월 급여 500만원 이상 • 자동차 2,000cc급 중형차 소유 • 예금액 잔고 1억원 이상 보유 • 해외여행 1년 한차례 이상 다닐 것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각국의 중산층 개념 비교를 보면, 한국의 경우 경제적인 요소들만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시민들이 정치·사회적인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는 한국의 경우 일제강점기와 전쟁, 군부독재 등을 거치면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이 늦어진 사정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와 비교의식 같은 것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이제는 우리도 시민의 정체성에 관해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역사적 과정을 통해 한국 시민의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시민들이 그것에 관해 폭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경험이 매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랬듯,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시민상은 대통령이 혹은 전문가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풍부한 토론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향후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의 시민상을 이야기해 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민과 민주주의

좋은 시민 없이 좋은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즉, 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시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주의와 시민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에게 있어 민주주의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끔 민주주의라 하면 너무 고귀한 것, 뭔가 그것을 위해 헌신해야 할 것만 같고, 특별한 사람들의 것, 그러다보니 내 삶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라는 것이 처음 태어날 때 그리고 무너지려는 그것을 지켜낼 때 많은 헌신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며, 한국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인민을 위해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지, 민주주의를 위해 인민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¹⁸⁾

민주주의는 고귀한 것이며 그것을 지키는데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시민이 목적이며, 민주주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가장 친숙한 도구는 뭐니 뭐니 해도 스마트폰이겠지요. 많은 사람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과 함께 지내고, 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자곤 합니다. 그런데 수도 배관을 조이는 스페너와 같은 도구를 생각해 봅시다. 집에 하나쯤 있는 도구인데, 수도관에 물이 썰 때 이 도구를 찾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도구라면 스페너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만날 때, 친구를 만날 때 늘 민주주의에 관해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촛불시위처럼 중요한 순간에, 무언가를 고쳐야

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급하게 써야 하는데, 집 어딘가에 있긴 있는데 못 찾거나, 찾아어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용한 도구일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고이 모셔져야 할 무엇이기보다는 시민들이 주인으로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즐겨 사용돼 손때가 묻어 있어야 할 도구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무언가 잘못되어 갈 때, 동료 시민들과 무언가를 도모하려 할 때 꺼내 써야 할 도구 말입니다.

관계: 개별화된 시민을 넘어

우리 사회에는 교육에 관한 ‘개별화’의 개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개별화된 사람들이 좋은 강사를 만나기 위해 모여 강의를 듣고, 강의가 끝나면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는 모습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를 듣고 흩어지는 이미지도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주로 개별화된 시민들이 교육을 ‘듣고’ 관용, 정의감, 공동체 정신, 참여의식 등을 각자 함양해야 하는 식의 이해가 일반적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유의미성을 획득하는 것은 타자와 소통할 때다”¹⁹⁾

하지만 교육이 개별화 된 채 이루어질지라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친구, 회사의 동료, 자원 봉사 모임의 회원, 인터넷 카페지기 등. 시민들이 주인으로서 자신의 고유성을 형성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 시민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보통의 사람(民)들은 그 관계 속에서 정체성과 신념을 형성하고 지켜나갑니다. 가끔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은 너무 좋은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자신뿐이라 힘들다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그 관계가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될 때도 많지만, 관계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이 시민을 생각할 때 이런 점들이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대부분의 시민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교육장에 온 것이며,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을 품고 다시 그 관계 속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와 모임을 통해 민주주의와 관련된 상황을 마주하고 느끼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갈수록 여유를 가지고 타인과 만나고, 공동의 관심사에 관해 대화하고, 함께 무언가를 도모할 계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일이 시민 개개인의 도덕과 성실의 문제로 치환되기보다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의 민주주의를 접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들을 창출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려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민주시민교육은 공허하고 비현실적인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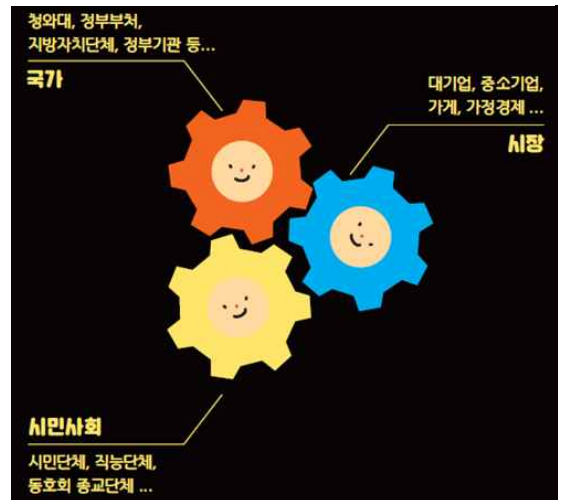
시민사회: 집합적 존재로서 시민

우리가 시민이라고 부를 때 한 사람의 시민을 일컬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집합명사로서 시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민은 진공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공간 안에서 존재합니다. 가수나 배우에게 무대가 있듯 시민들의 사회적 활동에도 무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시민사회라고 부릅니다. 시민사회는 때로 그냥 사회라고 불리기도 하고, 우리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것을 지역사회라 부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일상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각자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²¹⁾

앞서 시민에 관해 사유할 때 관계 속의 시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사회란 다양한 관계들이 켜켜이 쌓이고 얽혀서 구성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매개로 자신의 사적인 문제를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사회라는 동료 시민들의 관계망으로 이끌어 내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간의 갈등을 마을 속 관계로 이끌고 나와서 해결하는 이웃분쟁조정, 살아가면서 크게 다치거나 아파서 큰돈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를 일종의 ‘공동구매’로 해결하는 의료보험, 노인을 돌보거나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일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림: 국가, 시장, 시민사회²⁰⁾]



시민사회는 특별히 시민들이 공동의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한 사회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라는 커다란 3개의 톱니바퀴로 구성돼 있다고들 합니다. 다시 국가라는 톱니바퀴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기관들로 구성되고, 시장이라는 톱니바퀴는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 활동, 마을 사람들의 모임 등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톱니바퀴가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 작동된다는 점입니다. 시장이라는 톱니바퀴는 ‘교환’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무언가를 얻었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통해 입고, 먹고, 마시며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하며 살아갑니다. 국가라는 톱니바퀴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

고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지만,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건 적게 버는 사람이건 똑같이 지켜주는 것입니다.²²⁾

한편 시민사회는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됩니다. 시민사회가 작동하는 핵심적인 원리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호혜’와 ‘자율’입니다. 호혜는 서로 혜택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돈과 권력을 많이 지니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民)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서로 돕고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율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그리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민사회는 시민운동, 자원봉사,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사회복지 등 ‘호혜’와 ‘자율’의 원리에 기반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살아 숨 쉬는 일종의 생태계라 할 수 있습니다. 호혜와 자율의 원리는 자유와 평등과 함께 프랑스 혁명에서 주창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중 하나인 박애(fraternity)와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박애’라고 하면 자선(philanthropy)을 떠올리게 되는데,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애는 형제애(brotherly love)나 자매애(sisterhood) 또는 우애(友愛)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자선이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일방향적 관계에 초점을 둔다면, 박애는 서로 돕는, 즉 쌍방향의 관계를 전제합니다. 즉 내가 동료 시민을 도우면 언젠가 나도 동료 시민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며, 내가 아니라도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증대

앞서 한국의 시민들은 시민사회라는 공간을 통해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끌어 내고, 최근에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 최근 시민사회 관련해 나타나고 있는 눈에 띄는 경향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는 향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사회문제들이 복잡다양해지면서, 공공문제를 다루는 전통적인 주체인 정부만으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 채택하는 전략은 문제해결 과정에 시민사회의 힘을 적극적으로 빌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비단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의 호혜와 자율의 원리에 기초한 활동들에 점점 더 많은 역할들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간헐적인 것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다양한 사회문제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부분에서 살펴본 협치는 이러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시민사회가 보

완한다는 소극적인 담론에서부터 많은 경우 시민사회 주체들이 정부보다 더 잘하는 일이 있다거나, 민주주의의 본질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닌 시민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좀 더 적극적인 담론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담론이건 간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역시 시민사회를 둘러싼 이런 변화들을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보통 민주시민교육은 개인으로서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데, 집합적 시민으로서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향후 시민들은 시민사회라는 공간을 매개로 좀 더 많은 역할들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회문제들을 스스로 다룬다는 또 다른 의미의 민주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에 점점 더 많은 사회적 역할이 부여됨에 따라,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시민들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의 습득은 향후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

앞서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내용인 ‘민주’와 학습과 실천의 주체로서 ‘시민’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민주에 관해 배우고 훈련하는 장인 ‘교육’에 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기서는 민주시민교육의 흐름을 생각해 보는 ‘교육에 관하여’, 그리고 좋은 민주시민교육과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는 ‘교육을 위하여’,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에 관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흐름

교육을 위하여: 좋은 민주시민교육,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형성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는 희망은 오래되고도 새로운 것이다”라는 프레이리(Paulo Freire)의 말은 우리의 시선을 과거로 향하게 합니다. 교육의 ‘새로움’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오래됨’을 되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러했듯,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가보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고, 지금 우리는 그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봄에 있어 그것을 ‘정부에 의한 것’과 ‘시민사회에 의한 것’이라는 두 가지 축(track)으로 구분해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은 주로 정부의 작용에 의한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에 의한 운동정치라는 상호 구분되지만 영향을 주고받는 두 축 간의 관계에 기반해 살펴보는 관점이 있습니다.²³⁾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역시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적인 것과 시민사회에 의한 것 등 두 가지 측면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습니다. 당시 제도화된 교육은 유교적 전통 위에 일제의 황국신민을 길러내기 위한 수신(修身)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다른 축의 교육활동이 펼쳐졌습니다. 민립대학건립운동, 노동·농민야학, 브나로드운동과 같은 저항적 교육운동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애국계몽운동과 오산학교(이승훈), 현산학교(남궁억) 등 민족학교 설립운동, 농촌계몽운동 등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독립운동·교육운동가들과 이 시기 창립된 YMCA(1903), 흥사단(1913), YWCA(1922) 같은 단체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두 축 간의 대치

해방 후 정부를 수립(1948)했지만, 곧바로 한국전쟁의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전후 복구를 거쳐 현대사의 장을 열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 정부에 의한 민주시민교육은 서구로부터 민주주의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한 미공보원이 후원하고 중앙교육연구소가 실시한 민주시민교육사업입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에 의한 민주시민교육의 실질적인 중심은 '초등도의' 교과목이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반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승만 정권의 독재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4.19혁명(1960)이 일어나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듯했지만, 연이어 발생한 5.16군사정변(1961)으로부터 우리 현대사는 기나긴 군부독재의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1968년에는 이 시기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교육 지표인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시작된 반공교육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다양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고,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활동들이 전개됩니다. 여기에는 사회개발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계몽활동, 농민교육, 남미의 해방신학과 프레이리의 교육학, 알린스키의 지역사회조직화(community building)의 영향을 받은 민중교육과 도시산업선교회의 지역조직가 훈련, 크리스찬아카데미(1965)의 노동자교육과 중간집단교육, 흥사단의 금요개척자강좌, 청계피복노조 노동자교실(1973)을 비롯한 노동야학, 1980년대 학생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이루어진 '서클학습'과 야학활동, 각종 시국강연회 등이 포함됩니다. 이 시기 민주시민교육의 두 축인 정부에 의한 교육과 시민사회에 의한 교육 간의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하며 부딪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재정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민주시민교육이 반공교육 중심으로 진행될 때, 시민사회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와 내용을 형성하고 보존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유산은 현재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부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량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출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민주화와 두 축의 만남

정부에 의한 민주시민교육의 축과 시민사회에 의한 민주시민교육의 축이 상호 갈등적인 흐름으로 이어오던 중,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변화가 나타납니다. 1980년대는 민주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사회의 저항활동이 활성화된 가운데, 시민운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활동도 활력을 띠기 시작합니다. 인상적인 예로 YMCA의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1980년대 YMCA를 통해 중등 교사들의 모임이 조직됩니다. 이들은 1986년 ‘교육민주화 선언’을

이끌며 교육민주화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런 흐름은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 특히 공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평행선을 달리던 두 축이 만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반공교육 일색이던 학교 민주시민교육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1997년에는 모든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이 명시된 <교육기본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역대 교육과정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제1차(1954~1963): ‘초등도의’ 교과목의 반공교육

제2차(~1973): ‘반공도덕’ 교과목

제3차(~1981): 반공도덕생활 영역→‘도덕’ 교과목

제4차(~1987): 도덕 교과목 50% 이상 반공교육

제5차(~1992): 반공 대신 민주주의 관련 내용 확대

제6차(~1997): 도덕교과에 반공·안보 관련내용 삭제

제7차(~2007): 5가지 인간상 중 하나로 “민주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포함

1980년대 민주화의 진전 이후 시민사회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환경운동, 인권운동, 정치개혁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 등 다양한 시민운동들이 분화·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 접어들면서 군사정권에 의해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풀뿌리운동도 활성화됩니다.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유의 활동과 함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활동들을 전개하게 됩니다.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이어져 온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은 환경교육, 양성평등교육, 정치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자원봉사교육 등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분화·발전하게 됩니다. 아울러 독일의 정치교육이 소개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할 법제도 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고, 참여형 교육방법론이 전파되면서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점이 변화를 불러왔고, 다양한 교육방법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이렇게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적인 가치와 내용을 형성하고 보존해온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은 민주화 이후 활성화되고, 지금도 수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각자의 현장

에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시민사회나 학교 외에 다양한 주체들이 소관업무와 관련된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통일교육원(통일교육), 선거연수원(선거권자 교육), 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성평등교육),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민주시민교육),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포함됩니다. 2007년 제정된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의 6가지 영역 중 하나로 '시민참여 교육'이 명시된 바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교양과목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개설하고 있는데,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서울여대 바롬교양대학,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등이 그 예이며, 이런 시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에도 경제교육,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민주시민교육 지원, 노동조합원 교육 등 다양한 교육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자리잡아 가면서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주체들에 의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에 기반한 참여예산제, 평생학습공동체, 다문화,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등의 정책사업에서 주민들의 인식과 실천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들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에 관한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진전이 이루어진 후 30여년이 지난 지금, 학교와 시민사회 그리고 중앙과 지역 공공기관들의 활동을 통해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지형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표: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지형]

		좁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
정 부	중앙	민주시민교육(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선거연수원 등)	통일교육, 평생교육, 환경교육, 법교육, 경제교육, 인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등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기반 민주시민교육	참여예산교육, 마을교육, 사회적경제교육, 주민자치위원회교육, 자원봉사교육, 시민참여교육(평생교육원), 다문화교육 등
	공교육	(교육청 민주시민교육조례) 학교의 민주시민교육 대학의 민주시민교육	혁신교육지구사업, 학생자치·인권 관련 사업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지역)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민주시민 교육 활동	환경교육, 양성평등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등 다양한 의제들을 다루는 교육 활동	
기업		리더십 교육, 사회공헌, 노동조합원 교육 등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체계적이고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제도화에는 학교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과 성인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으로 나뉩니다. 성인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경우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경우와 영국과 미국처럼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에 맡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도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화에 관한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조금 더 오래전입니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의한’, ‘시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보다 앞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이룬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²⁴⁾

앞서, 독일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교육이라 불린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독일은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치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독일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과 독일 각 지역의 주(州)정치교육원입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민주적 의식을 증진하고, 정치적 참여를 위한 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정치교육원의 운영과 활동은 독립적이고 정파적·학술적 균형을 중시합니다. 연방정치교육원의 사업은 출판간행물 등 정치교육 자료발간, 시민교육 관련 학술대회나 행사 지원, 시민사회 교육주체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등 크게 3가지로 나뉘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 주체들의 다양한 정치교육 활동을 지원하지만, 그 활동에 간섭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에 해당하는 것이 성인교육인데, 평생학습과 민주시민교육이 거의 같은 의미로 이해됩니다. 본래 성인교육은 시민사회 주체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후 성인교육이 시민들의 권리로 인식되면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만, 지원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다양한 시민사회 교육주체들의 협의체격인 성인교육위원회(FolkbildningStådet)를 통해 결정됩니다. 성인교육위원회는 정부와 의회가 성인교육 지원업무를 총괄 위임한 비정부·비영리 기구로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이 보장됩니다. 주된 업무는 성인교육 주체들에 대한 정부재정 보조금 배분, 성인교육 주체들의 활동에 관한 평가 및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스웨덴에서 성인교육을 실행하는 주체에는 교육단체들과 시민사회주체들이 운영하는 고등성인학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고등성인학교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교육주체들은 자신들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다시 각 연합체에서 대표를 파견해 구성된 평의회가 성인교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나라마다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른 형태의 제도화가 진전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을 지원하는 제도 역시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정을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에게 지원하되, 그 활동에 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화의 흐름: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말경입니다. 당시 관련 학계(현 민주시민교육학회)와 민주시민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협의체인 민주시민교육포럼과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각자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에 관한 의견을 내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참여정부 시기 설치된 국무총리실 산하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고, 2004년 총선 후 여야 대표 정치개혁 합의안에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선거연수원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했고, 국회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2008년에는 제주도 의회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발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포괄적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제도화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지연되는 동안,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이라 할 수 있는 개별적인 여러 교육 관련 법률들이 제정됐습니다. 여기에는 <통일교육지원법(1999)>, <평생교육법(2007)>, <환경교육진흥법(2008)>, <법교육지원법(2008)>, <경제교육지원법(2009)>, <인성교육법(2014)>이 포함됩니다.

2010년대 들어서도 다양한 주체들의 요구에 따라 몇 건의 민주시민교육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앞서 살펴본 민주시민교육포럼으로부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들과 학계, 그리고 공공기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선거연수원 등)의 관계자들이 결성한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2012)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시민이 함께 마련한 시민교육포럼(2013) 등의 활동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거두지 못했습니다.

최근의 흐름

중앙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가 20여년째 지연되고 있는 반면, 최근 들어 지역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각각 2014년과 2015년에, 이어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들도 독자적인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려는 흐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2017), 노원구(2017), 광진구(2017), 도봉구(2017), 경기도 성남시(2016), 안양시(2016), 광명시(2017), 의정부시(2017)가 포함되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도 교육청(2015), 충청북도 교육청(2016), 전라북도 교육청(2016), 충청남도 교육청(2017)이 포함되고, 역시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포함시켜, 다시 한 번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한 경험들이 있어 좀 더 진일보된 논의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거연수원이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에 나서는가 하면, 전국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시민사회 주체들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와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려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성 노력도 나타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민은 만들어진다

앞서 우리는 좋은 시민 없이 좋은 민주주의가 없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좋은 시민이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토크빌의 말은 이런 점을 잘 나타내 줍니다.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좋은 시민들이 만들어지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세대마다 새로 태어나야 하며, 교육은 이를 위한 산파다”²⁵⁾

앞서 살펴본 서구 국가들에서도 좋은 시민의 성장을 위해 부단히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인데, 특히 최근 들어 중앙 및 지방정부들이 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따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해 12년의 긴 공교육 과정을 거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육을 받지만,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체제 속에 민주주의에 대해 이해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기본법〉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의 근본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격의 도야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하나 뿐인 고유성을 지닌 존재로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물학·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들을 갖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현재 우리의 교육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은 오랜 시간 동안 금기시되거나 소홀히 여겨져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격과 자주적 생활능력 그리고 민주적 자질은 내용적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분리되지 않고 융합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민주시민교육을 향해

우리는 교육 하면 지식의 축적 과정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의 출발은 모르는 것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교육의 완성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지식을 갖춘 사람보다는, 어떤 성정을 지닌 사람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교육은 (중략) 엘리트들이 늘어놓는 장광설이 아니라 (중략)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는 일이다”
-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

그리고 그런 과정은 외부에서 어떤 정신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정신을 만나고 벗어나가는 과정에 가까울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과정은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힘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마음의 모양이 곧 자기 자신인 것이다. ‘마음의 모양’이야말로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향상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행복을 가꾸는 힘은 밖에서 우연한 기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 마음에 새겨둔 힘에서 꺼낼 수 있다.”

- 페스탈로찌(Johann Heinrich Pestalozzi)

그런데 민주주의란 정신 혹은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개인적인 혹은 공동의 경험을 통해 터득하고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간접경험을 통해 배움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런 확장된 인식과 배움을 위해 우리는 민주주의에 관한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 과정은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언어란 개념이나 이야기(story), 예화(episode), 우화(fables), 유행어 등을 말합니다.

“인문학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찾는 과정이다”

- 얼 쇼리스(Earl Shorris)

‘인문학’의 인문(人文)은 사람의 무늬나 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결과 민주주의가 결부될 때 민주시민교육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찾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언어의 창고에 민주주의에 관한 단어는 매우 빈약합니다. 민주주의에 관한 언어를 풍부하게 만드는 일은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균형과 확장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설득의 원천을 이성(logos), 감정(phatos), 윤리(ethos)로 나누는다면,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성격유형론인 에니어그램(enneagram)은 사람이 지닌 에너지의 중심을 머리, 가슴, 몸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통찰은 교육의 요소에도 이어지는데, 사람들은 흔히 교육의 세 가지 요소를 지식·정보, 가치관·태도, 기술·역량으로 나누곤 합니다. 지식·정보는 모르던 것을 인식하거나, 우리가 무의식중에 반복하는 행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의식화(consciousness raising)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치관·태도는 타인과 사회에 관해 이해하고 인식의 결정적인 변화나 행동으로 이끄는 힘인 감수성(sensitivity)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역량은 알고 느낀 후 무언가를 행동에 옮기는 데 필요한 역량강화(empowerment)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고, 실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교육은 지식·정보의 전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간 여러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의 실험과 노력으로 가치관·태도나 기술·역량의 요소에 중점을 둔 교육의 내용과 형식도 개발돼 왔습니다. 교육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와 관련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요소 간 균형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론 세 가지 요소가 삼분의 일씩 균등하게 혼합된 교육이 반드시 좋은 교육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머리만으로, 가슴만으로, 혹은 손과 발만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한 가지를 강조한 실천들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시민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 제공될 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좀 더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가 균형을 이룬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교육을 만드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그들을 둘러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교육과 관련해 짚어보고 싶은 것은 교육의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강의장이라는 공간에서 강사와 학습자의 관계와 체계화된 과정을 통해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주시민교육은 이런 전통적인 교육의 형태들 외에도 다양한 형태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강좌형태에서 삶의 과정이나 작업의 과정을 통해 배움을 얻는 무정형의 교육 형태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교육에서 교육을 만드는 사람이 모든 것을 준비하던 것에서, 교육의 기획과 진행에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획자나 강사 없이 학습자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학습동아리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 감상이나 작업, 여행이나 답사, 캠프, 상담이나 컨설팅 등 전통적으로 교육이라고 인식되지 않는 다양한 방식들이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의 형태는 무조건 다양화되는 것만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학습자들이 효과적이고 만족스럽게 배울 수 있다면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사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과 융합

최근 들어 많은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도화되고 활성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올바르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이끌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뜻과 힘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한국에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주체들이 분화·발전해 왔음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시민교육계가 그 자체로 지속가능한 하나의 생태계로 진화하려면 분화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분화가 민주시민교육의 영역과 주체 간의 소통이 단절된 분절화나 비생산적인

경쟁이나 갈등이 나타나는 분열로 흐르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책을 올바르게 펼치도록 견제할 힘을 약화시키고,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키우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의 흐름들을 형성해 왔습니다.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그리고 향후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우리는 그간 쌓아온 민주시민교육의 전통과 경험을 밑거름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어느 순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이 쌓아온 역사성을 딛고 서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의 영역과 주체들이 서로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험과 내용이 서로 융합돼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정치교육과 인권교육, 성평등교육으로 나눌 수 있지만, 민주주의와 관련한 시민들의 삶에서 이런 문제들은 융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각 영역의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은 각자 자신의 교육활동에 전념하느라 바빠 서로 만나고 연결될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공유되지 못하고, 중복투자나 의도하지 않은 비생산적 경쟁과 같은 부작용들이 나타났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최근에 갑작스레 나타난 무엇이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노력이 지금의 상황에 따라 재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해진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은 신설돼야 할 무엇이라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에 민주주의의 내용과 실천을 붙여넣는 것에 가까울 것입니다. 다행히도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려는 노력 역시 면면히 이어져 왔고, 최근 들어 민주시민교육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활성화되는 흐름 속에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이 모이고 결속하려는 노력도 다시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시민교육의 주체들이 모이고 연결된 네트워크는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공유된 상(像)과 우리 사회가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다룰지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장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기술들

‘세상의 모든 변화는 두 사람의 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회 변화는 많은 사람들의 힘이 결집한 상태에서 그 힘이 작동할 수 있는 시대 조건과 만나고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방법으로 발휘될 때 만들어지는데, 그 시작은 두 사람 간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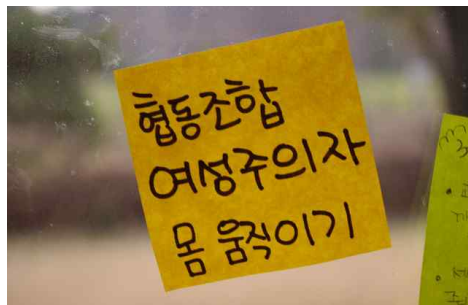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와 토론은 한 장소에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이야기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 모임, 지역사회와 같은 작은 단위에서부터 대화와 토론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그런 문화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생활 속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생활 속 민주주의에는 경청, 공감, 대화, 토론, 논쟁, 의사결정, 참여, 공유, 협력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요소들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인데, 이런 요소들을 민주주의 촉진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의 원천은 변하지 않으나 이 기술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장에서는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기술들을 살펴보고,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더 이음'의 '민주주의기술학교' 구성원들의 생각과 진행 경험, 회고 등의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열기, 자기이해, 공감



모든 첫 만남에는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으며 어디서 일하는 누구라고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업과 이름만으로는 상대방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명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직장이나 직업, 이름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쓰리 키워드

세 가지 키워드로 자기 소개하기

쓰리 키워드(3 keywords)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서로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단한 자기소개 방법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에는 하는 일이나 애칭 외에도 성격이나 취미, 특기, 취향 등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데, 이는 짧은 시간 안에 나를 소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진행방법 및 고려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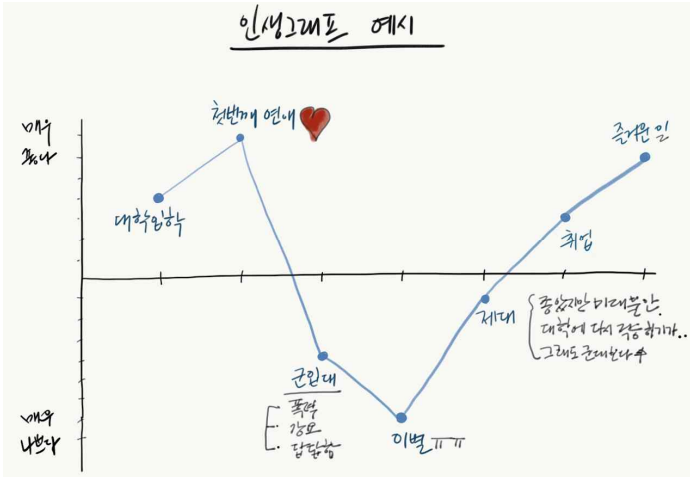
- ☑ 주로 모임을 처음 개최하거나 모르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시작할 때 활용할 수 있는데, 5명 이내가 한 조가 돼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 ☑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 ☑ 키워드를 다 적었으면 세 가지 키워드를 하나씩 보여주면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한 사람당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할 수 있으므로, 개인당 2~3분 이내에서 자기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인생곡선 그리기

자기 인생 이야기 나누기

인생 곡선 그리기는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기록함

으로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삶 전반을 점검해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사건과 부정적으로 기억하는 사건들을 통해 내 삶의 지지 환경과 장애물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곡선을 그린 다음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하면, 평소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고 서로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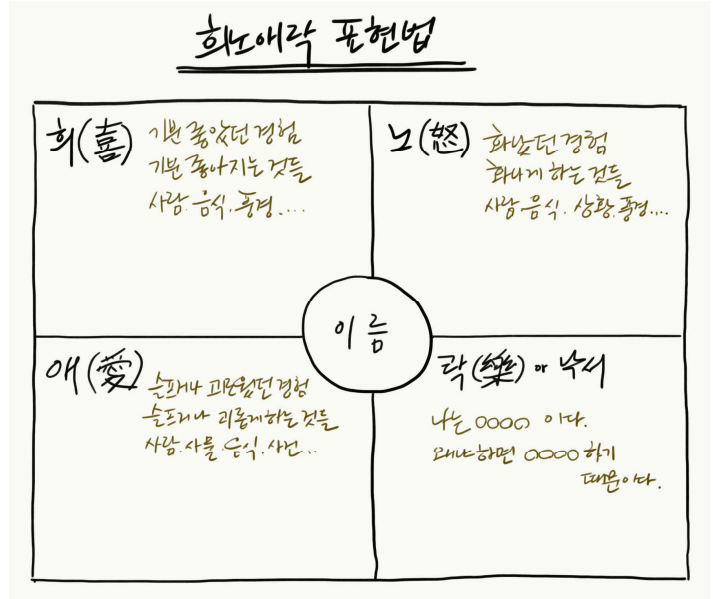


인생 곡선 그리기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진행하면 부담이 되고 공감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과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참여자들 중에 인생곡선에 등장하는 특정 사건과 연관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결과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줘야 합니다.

모임의 성격에 맞게 '인생' 단어를 'OO에서의 활동'이나 '친구관계', '일' 등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또 나이가 어린 사람들과 할 경우에는 '미래예측 인생그래프'라고 이름 붙여서, 지나온 삶이 아니라 앞으로 기대되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방법 및 고려할 점

- ☑ A4 용지보다 큰 종이를 준비합니다.
- ☑ 종이에 X축과 Y축을 그린 다음, X축에는 시간이나 나이를, Y축에는 만족도(위쪽은 + 값을, 아래쪽은 - 값을 표시)를 표시합니다. 만족도는 주로 +숫자, -숫자를 이용하나, 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쁨 순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 ☑ 자기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생각해본 다음, 해당 사건의 시간과 만족 정도가 만나는 지점에 점을 찍고 간단하게 해당 사건을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을 선으로 연결합니다.
- ☑ 각자 그린 인생곡선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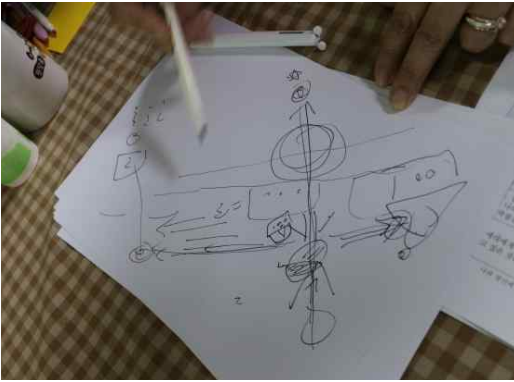


희노애락 표현법은 우리의 대표 감정인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을 소재로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감정은 자신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나 사물, 상황 등을 적어봄으로써 나에게 힘이 되거나 기운 빠지게 하는 원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결과물을 공유하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서적 유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단체나 모임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진행방법 및 고려할 점

- ☑ 종이 가운데 자기 이름을 쓰고 이름을 중심으로 4등분의 선을 그립니다.
- ☑ 네 면의 모서리에 희, 노, 애, 락을 적고 해당 면에 각각의 감정과 관련된 사람이나 사물, 상황 등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 ☑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 ☑ 네 가지 가정 중 기쁨(희)와 즐거움(락)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자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 만약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를 생각하기가 어렵다면, 즐거움(락)을 '낙시'로 바꿔서 "나는 현재 000하다"와 같이 자기감정의 전체적인 상황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 코끼리, 주전자 등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은 모두 비슷한 모습으로 인식하지만, 소통, 협력, 성과, 열정과 같은 추상적 단어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각자가 다르게 인식합니다. 단어에 대한 정의는 똑같지만 이 단어에 대한 인식은 각자의 축적된 경험과 정보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소통을 잘 합시다'라고 공통된 결론을 내었음에도 각자가 생각하는 소통의 의미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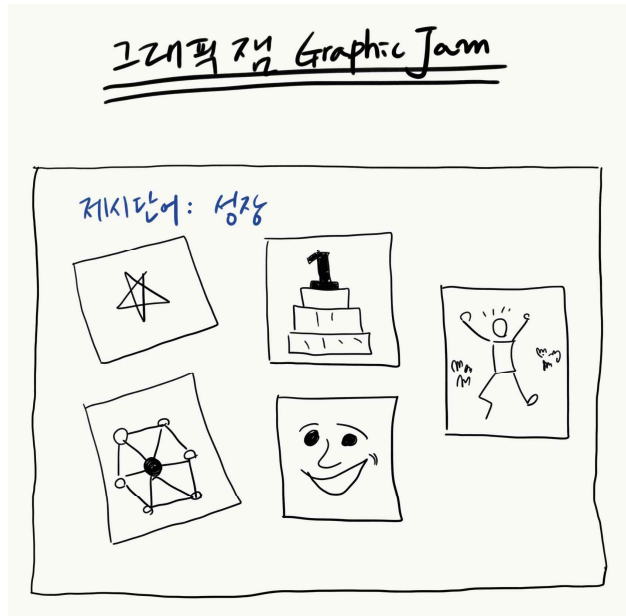
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결론을 생각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픽셔너리(pictionary)는 사회자가 제시한 단어들—주로 위에서 언급한 추상적인 단어—을 그림으로만 표현해서 맞추게 하는 게임입니다. 팀별로 누가 빨리 정답을 맞는지 경쟁하는 게임이지만, 똑같은 단어를 각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픽셔너리는 참가자 모두가 한 번씩은 직접 그림으로 단어를 설명하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정답을 맞추는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경우, 사회자가 정답을 말해 주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해당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는지 이야기하게 합니다.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하나의 단어를 각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림을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진행방법 및 고려할 점

- ☑ 픽셔너리는 팀 게임으로 4~5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 ☑ 진행자는 미리 픽셔너리 게임에 사용할 단어를 생각해 놓습니다. 이때 제시 단어는 되도록 추상적인 단어—성과, 합의, 비전, 지원, 촉진 등과 같은—일수록 좋습니다. 쉽게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 예를 들어 바나나, 고양이와 같은 단어들은 제시하지 않도록 합니다.
- ☑ 제시할 단어를 정했으면 진행자는 팀별로 한 명씩 앞으로 나오게 해서 단어를 보여줍니다.
- ☑ 단어를 본 사람은 팀 테이블로 돌아가서 오직 그림만으로 해당 단어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림에는 숫자나 단어 등을 사용할 수 없고, 당연히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 ☑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추는 팀이 이기게 되는데, 그 후에는 그림을 함께 보면서 어떤 취지로 해당 단어를 표현하고자 했는지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픽서너리가 추상적인 단어를 시각화하면서 팀끼리 경쟁하는 게임이라면, 그래픽 잼(Graphic Jam)은 해석과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추상적인 단어들을 개별적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생각의 차이를 인식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특히 같은 조직 내에서 자주 쓰고 있지만 서로 그 단어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할 때 그래픽 잼은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리더십'이나 '성과', '협력'과 같은 단어가 이에 해당합니다.

진행방법 및 고려할 점

- ☑ 참가자들에게 조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포스트잇 한 장당 한 가지씩 적게 합니다.
- ☑ 포스트잇에 적힌 단어들을 벽에 붙이면서 분류를 합니다.
- ☑ 가장 많이 나온 단어 하나를 선택한 후 해당 단어에 대한 정의, 느낌, 생각 등을 각자 포스트잇에 그림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 ☑ 여러 개의 단어를 선택했다면 위 과정을 반복합니다.
- ☑ 마지막으로 각자 그린 그림을 벽에 붙이고 각자 그린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당 단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생각으로 그런 그림을 그렸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합니다.



자기 얼굴의 특징 하나하나를 관찰해 본 경험, 자기 얼굴을 오직 글로만 표현해 본 경험이 있나요?

텍스트 드로잉은 자기 얼굴을 그리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자기 얼굴을 자세히 관찰해서 글로 묘사하고, 그 글을 본 다른 사람이 얼굴을 그리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기 얼굴을 글로 묘사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 객관적으로 설명했겠지만, 그 설명에 근거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설명 자체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설명과는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오직 설명한 내용만을 그려야 합니다. 눈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눈을 그리지 못하게 합니다.

진행방법 및 고려할 점

- ☑ 모든 참가자에게 A4 용지를 나눠줍니다. 용지를 절반으로 접습니다.
- ☑ 참여자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자기 얼굴을 찍게 한 후 A4 용지의 왼쪽에 자기 얼굴을 구체적인 글로 설명하게 합니다. 이때 얼굴 모양, 눈, 귀, 코, 입, 머리카락 등을 빠짐없이 설명하게 합니다.
- ☑ 이 작업이 끝나면 종이를 걷어 충분히 섞은 다음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얼굴에 대한 설명이 있는 종이를 받은 참가자는 종이 오른쪽에 설명한 그대로 얼굴 그림을 그립니다.
- ☑ 그림을 다 그렸으면 한 쪽 벽면에 갤러리 형태로 그림을 붙이게 하고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6X6 주사위 게임

서로를 알아가는 36가지 질문

주사위 1 →

↓ 주사위 2

내가 알려줄 수 있는 (소소한) 노하우	심심하고 무료할 때 무엇을 하나요?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존경하는 사람은? (롤모델) 그 이유는?	당장 여행하고 싶은곳? 이유는?	언제 행복할까요?
여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이유는?	지난 일주일간 내가 한 착한 일은?	자유질문 1개 받기	돈, 시간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은?	인생이 3년 남았다면 어떻게 살고 싶나요?
배우고 싶은 것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은? (시간과 돈, 열정을 쏟으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아직 시도하지 않았지만 이루고 싶은 꿈은?	슬럼프를 극복하는 당신의 방법은?	요즘 오랜시간 고민하는 것은?
당신의 청소년 시절을 들려주세요	살면서 가장 만족을 느낀 경험은 무엇인가요?	자기 자랑 3가지 (거만하게)	광산구에서 사는 것이 즐거운 이유	지금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어떻게 극복?
다음 생애 이성으로 태어난다면?	하는 일의 어떤 점에서 만족감을 느끼나?	내가 나이 들었다고 느낄 때?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아는대로~	당신의 추천리스트! (영화, 드라마, 책, 연극, 맛집...)	나에게 주님은 _____이다
가장 자신있는 외모는?	구청장, 시장이 된다면?	무인도에 가져갈 3가지는?	건강한 지구를 위해 당신이 실천하는 것은?	당신이 자주 칭찬받는 이유는?	당신에게 힘을 주는 말은?

6X6 주사위 게임은 가로, 세로로 6칸씩 나뉜 종이에 총 36가지의 질문을 적어 놓고,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질문에 답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자기 소개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람들은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 순서가 돌아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6X6 주사위 게임은 자기에게 어떤 질문이 제시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고, 다양한 질문이 있어서 짧은 시간에 재미있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36가지 질문과 미션은 모임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데, 미리 준비를 못했으면 즉석에서 A3나 2절지에 가로 세로 6칸씩을 그리고 각자에게 서로 묻고 싶은 질문을 포스트잇에 쓰게 한 후 진행해도 됩니다.

진행방법 및 고려할 점

- ☑ 크기가 서로 다른 혹은 색깔이 다른 2개의 주사위와 가로 세로 6칸마다 질문과 미션이 적혀 있는—총36개의—질문지를 미리 준비합니다.
- ☑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2개의 주사위를 한꺼번에 던져서 나오는 칸에 있는 질문에 답하거나 미션을 수행해 나갑니다.
- ☑ 정해진 시간에 끝날 때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주사위를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 나갑니다.



아이디어, 상상, 발표



사진출처: 플리커CCL @theimagegroup

참고 및 인용

- 새로운 민주시민교육 방법 (송창석 저. 백산서당)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80518>
- 브레인스토밍의 절차와 과정: <http://bit.ly/brainstorming01>
-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Brain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기법으로는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인데, 어떤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라면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제한 없이 이야기함으로써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브레인스토밍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발언을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자유롭게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생각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질보다는 양을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브레인스토밍

가장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 발상법



진행방법 및 고려할 점

- ☑ 브레인스토밍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행자는 각자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드판이나 전지, 포스트잇 등을 활용하여 시각화합니다.
- ☑ 아이디어들을 비슷한 유형끼리 분류하거나 합치는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합니다.
- ☑ 정리된 아이디어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라이팅

침묵의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Brainwriting)은 침묵의 브레인스토밍이라고도 불리는데,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유용한 아이디어 발상법입니다. 말하지 않고 종이에 자기 생각을 쓰기 때문에 발표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소수가 발언을 독점할 우려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브레인라이팅은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이 가능한데, 이 중 6.3.5 브레인라이팅은 6명의 참가자가 3가지 아이디어를 5분 내에 쓰고 계속 돌아가면서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6.3.5 브레인라이팅 (Brain Wri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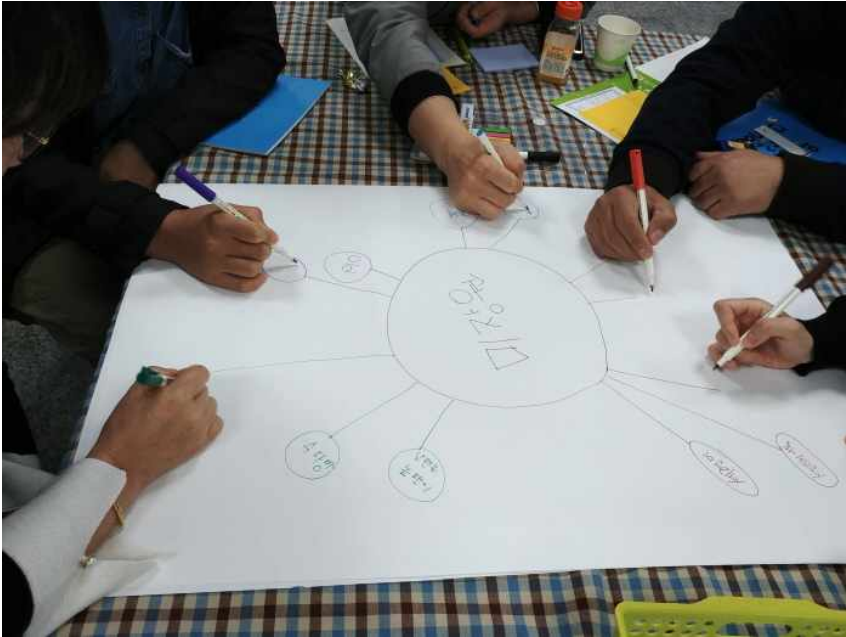
	아이디어-1	아이디어-2	아이디어-3
아신	AAA	BBB	CCC
창영	AAP	BBF	CCD
술술	AZZ	BTZ	CPU
은정	AYZ	BMS	CTO
뚝관남	---	---	---
재우	---	---	---

진행방법 및 고려할 점

- ☑ 일반적인 브레인라이팅은 일정한 시간을 주고 주제 혹은 질문에 관한 생각을 포스트잇에 적게 합니다. 이 때 반드시 포스트잇 한 장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적습니다.
- ☑ 그렇게 다 적었으면 포스트잇을 모두가 볼 수 있는 벽에 붙인 다음 참가자 모두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분류하고 합치고 추가해가면서 정리해나가면 됩니다.
- ☑ 브레인라이팅은 6명을 한 조로 구성한 후 5분 이내에 첫 번째 참여자가 3개의 아이디어를 쓰고 옆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 ☑ 두 번째 참여자도 역시 5분 이내에 3개의 아이디어를 적습니다.
- ☑ 위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내용이 다 채워지면 함께 이야기하면서 좋은 아이디어에 표시를 하고, 해당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랜덤 워즈 브레인라이팅

무작위 단어 연상법



무작위 단어 연상법이라고 하는 랜덤 워즈 브레인라이팅(Random Words Brain Writing)은 토론하고 싶거나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 주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를 선정하고, 그 단어와 연관되는 키워드를 적은 다음 그 키워드와 주제를 억지로 연결시켜보면서 아이디어를 촉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진행방법 및 고려할 점

- ☑ 토론 주제와 전혀 관계없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선택합니다.
- ☑ 그 단어를 전지의 중앙에 크게 적습니다. 그 단어와 관련해서 연상되는 키워드를 주변에 모두 적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개구리라고 했을 때 연못, 왕눈이, 혀가 길다, 새까만 알, 올챙이 등을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연상되는 키워드를 다 적었으면 가운데 단어 위에 다른 종이로 이야기할 주제를 적고 붙이게 합니다.
- ☑ 이제는 이야기할 주제와 앞선 단어와 관계된 키워드를 억지로 연결시켜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게 하고, 그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이게 합니다.
- ☑ 마지막으로 모두가 포스트잇에 쓴 아이디어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그나이트(Ignite)는 5분 동안 20장의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의 발표 이벤트입니다. 한 장의 슬라이드는 15초 동안 보여지며 슬라이드는 자동으로 넘겨지게 합니다. 첫 번째 이그나이트가 2006년 워싱턴 시애틀에서 열린 이래로 이 행사는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그나이트의 미션은 ‘모든 사람이 말하게 한다’인데, 누구든지 어디서나 자신의 생각과 스토리를 알리는 법을 익힐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그나이트 형식은 페차쿠차(Pecha Kucha)와 비슷하데 페차쿠차는 20장의 슬라이드를 20초 단위로 넘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10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의 ‘전국 시민운동가 대회’에서 PT Party, Ignite Action! 이라는 슬로건으로 이그나이트 행사를 개최했고, 2011년 8월에는 봉하재단과 영농법인 봉하마을이 ‘5분으로 말하는 미래’라는 테마로 이그나이트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방법 및 고려할 점

- ☑ 이그나이트 행사의 주제, 시간, 장소를 확정하고 발표자를 모집합니다.
- ☑ 이그나이트 발표는 주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없애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한 다음 말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슬라이드를 20장 준비하면 됩니다.
- ☑ 공개적인 이그나이트 행사에서는 연습도 필요한데, 첫 번째와 마지막 슬라이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무대에 오르거나 무대에서 내려올 때 청중들에게 인사를 할 때도 시간은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그나이트 발표 시간인 5분을 채워서 연습하지 말고 4분 30초 정도로 계획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http://lovesera.tistory.com/757>

참고 및 인용

- 정진호님의 블로그: <http://lovesera.com/tt/598>
- 이그나이트 서울 홈페이지: <http://igniteseoul.org/blog/>
- 이그나이트 홈페이지: <http://igniteshow.com/>

소셜 픽션

상상력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공상과학소설이 결국 과학을 움직였다. 먼저 상상해야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소셜 픽션(social fiction)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말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소액대출은행인 그라민은행의 설립자인 무하마드 유누스가 한 말입니다.

소셜 픽션은 여기에서 나온 말로, 이 프로그램은 공상과학 소설처럼 먼 미래의 사회를 상상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셜 픽션은 공상과학 소설을 쓰듯이 사회적 상상을 하는 것이고, 그 상상의 사회로 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소셜 픽션은 하나의 워크숍 방법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사회적 상상을 하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일을 계획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가진 자원과 한계 안에서 계획하는 것, 다른 하나는 내 자원과 한계는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는(상상에 가까운) 방법입니다. 소셜 픽션은 후자의 방법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소셜 픽션에서 중요한 관점과 태도는 ‘과감하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현실적 제약조건을 넘어선 사회적 상상은 ‘비현실적’이거나 ‘모호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늘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갈 것인지 상상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2013년 11월, 어린이대공원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소셜 픽션 컨퍼런스]



아무런 제약 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것, 그 상상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소셜 픽션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상을 함께 해보고 콜라주 작업을 해도 되고, 상상한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써봐도 되고, 상상한 시간과 공간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날의 일기를 써봐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약 없이 상상해보는 것이고 상상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진행방법 및 고려할 점

- ☑ 참가자들에게 먼 미래의 특정한 시공간을 상상해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30년 후 초등학교 교실은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30년 후의 초등학교 교육 정책은?’이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특정 공간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이 이야기를 나누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 ☑ 한 시간 정도 테이블별로 이야기를 나눈 후 미리 준비해 놓은 잡지책, 풀, 가위, 신문 등을 이용해서 콜라주 작업을 합니다.
- ☑ 콜라주 작업을 마치면 서로 상상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대화, 소통, 합의, 결정, 문제해결, 갈등해소



이미지 출처: 월드카페 홈페이지 <http://www.theworldcafe.com>

참고 및 인용

-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World_caf%C3%A9
- 애자일 게임 개발 도입하기 월드카페: <http://onoffmix.com/e/istoriae/439>
- 다음 기획자 컨퍼런스, 월드카페: <http://ophilia.tistory.com/2047>
- 2010년 시민운동가대회, 월드카페: <http://activistrally.tistory.com/9>
- 집단토론방법, OST와 월드카페: <http://yuzi.egloos.com/1783326>
- 월드카페 홈페이지: <http://www.theworldcafe.com>

월드카페

모두가 이야기하게 하는 카페식 대화법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왜 회의실에서는 대다수가 침묵할까요? 이런 의문점으로부터 출발해 사람들 간의 친밀한 대화를 촉진하고 참가자가 모두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한 대화 방법이 월드카페입니다. 카페식 대화법이라고도 하는 월드카페는 공통된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참가자들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테이블을 옮겨 다니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월드카페는 1995년 주아니타 브라운(Juanita Brown)과 데이비드 이삭(David Isaacs)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월드카페의 참가자들은 네다섯 명의 작은 그룹으로 테이블에 둘러앉아 정해진 시간 동안 질문에 대해 대화를 나눕니다. 테이블에 놓여진 커다란 전지 위에 메모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테이블 호스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테이블로 옮겨져서 같은 질문을 놓고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방식으로 테이블을 순회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참가자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월드카페의 디자인 원칙

아래는 월드카페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월드카페 디자인 원칙을 옮긴 것입니다.

- ☑ 맥락을 짚어라: 당신이 월드카페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왜 사람들을 모으고자 하는지 그 이유에 주목하라. 모임의 목적을 알면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점검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누가 대화에 참여해야 하는가, 어떤 주제와 질문이 가장 적절한가, 어떤 종류의 회고가 더 유용할까 등이다.
- ☑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라: 월드카페 경험자들은 참가자들이 편안하고 환대받는다고 느끼는 공간이 가지는 힘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자기 모습 그대로의 편안함을 느낄 때 가장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들을 수 있다.
- ☑ 중요한 질문들을 탐험하라: 생각은 강력한 질문에 반응해서 떠오른다. 참가자들의 실생활에서 중요한 것과 관련된 질문들을 골라야 한다. 강력한 질문은 월드카페에서 집단의 에너지와 통찰, 행동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 모든 이들이 기여할 수 있게 하라: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참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한다.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함으로써 모임에 기여할 수 있게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통해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를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 ☑ 다양한 관점들을 연결시켜라: 테이블을 옮겨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을 통해 더 다양한 생각과 연결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월드카페의 특징 중 하나이다. 참가자들이 중요한 생각을 다른 테이블에 가져가고 이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면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 ☑ 잘 들어라: 듣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다. 듣기의 질이 월드카페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듣기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된다.
- ☑ 공동의 발견을 나누라: 한 테이블에서 있었던 대화가 다른 테이블에서 있었던 대화와 만나면서 전체적인 패턴이 생긴다. 월드카페의 마지막에는 모두가 이 전체의 패턴을 볼 수 있게 하라. 소규모 대화에서 경험한 패턴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질문들을 회고해보고 다른 이들과 나누어라. 그리고 이를 잘 기록해두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진행방법 및 고려할 점

- ☑ 월드카페의 주제, 즉 질문이 필요합니다. 질문의 의도는 참가자들에게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주도록 합니다.
- ☑ 최소 12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보통 한 테이블당 4~6명 정도가 앉을 수 있도록 합니다. 테이블에는 대화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전지와 사인펜, 색연필과 같은 필기도구, 포스트잇을 준비합니다.
- ☑ 테이블별로 호스트 1인을 선정합니다. 호스트의 역할은 참가자들 간의 대화를 촉진시켜주고,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며 이후 대화 내용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전에 호스트를 지정하여 월드카페의 진행 방법과 호스트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 ☑ 테이블별로 첫 번째 대화를 진행합니다. 대화를 진행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각종 기록의 도구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합니다.
- ☑ 20~30분 정도 후 1차 대화가 끝났음을 알리고, 호스트를 제외한 참가자들은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게 합니다. 이동시에는 최대한 앞선 테이블에서 만난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 ☑ 테이블 이동이 끝났으면 호스트는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고 앞선 테이블에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짚막하게 2~3분 정도 내에서 소개합니다. 앞선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소개가 끝났으면 다시 대화를 이어갑니다.
- ☑ 4~6번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테이블 대화가 끝났으면 이제 전체 대화 내용을 모두가 공유합니다.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자기주도형 열린 토론방법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Open Space Technology)는 커피 브레이크에서 영감을 얻어, 격식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훌륭한 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창안한 독창적인 집단토론방법입니다. 1985년 해리슨 오웬(Harrison Owen)이 85명의 조직 분야 전문가들과 이 회의 기술을 실험한 후, 이 방법은 수많은 퍼실리테이터와 컨설턴트들에 의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참고 및 인용

- 위키피디아 : https://en.wikipedia.org/wiki/Open_Space_Technology
- 오픈스페이스코리아 : <http://openspace.kr/oskorea/>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의 네 가지 원칙

- ☑ 온 사람이 적합한 사람들이다: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대화에 가장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 ☑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선이다: 우리가 모인 이 시간과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 토론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현재 수준에서는 그것이 최선입니다.
- ☑ 시작한 시간이 최적의 시간이다: 창조성은 우리가 모인 이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므로, 창조성이 시작된 그 시간이 우리가 토론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간이 됩니다.
- ☑ 끝나면 끝난 것이다: 끝날 때쯤 ‘끝난 건가?’라고 물어보세요. 대화와 토론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열정이 이끄는 다음의 어떤 것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만약 대화와 토론이 끝나지 않았다면,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다음 계획을 세워보세요.

진행방법

- ☑ 참가자들이 이야기 나눌 포괄적인 주제나 질문을 선정합니다.
- ☑ 모든 이해당사자 또는 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 ☑ 참가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의자를 하나의 원 또는 여러 개의 동심원 형태로 배열하고 중앙에 공간을 비워 둡니다. 원의 중심에는 종이와 펜을, 토론 주제를 붙일 빈 벽을 정해서 '의제'라고 표시하고 시간대와 장소를 구분한 표를 표시해둡니다.
- ☑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중앙으로 나와 종이에 자신이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쓰고 설명을 한 다음에 의제의 벽에 자신의 주제를 내놓습니다. 주제를 내놓은 사람은 주제에 대한 대화모임이나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반드시 회의 보고서(의사록, 정리문)를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붙이도록 합니다.
- ☑ 모든 주제가 다 나왔으면 참가자들은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참여합니다.
- ☑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모여 회고의 시간을 가집니다. 자신이 각자 깨달은 것과 배운 것 등을 서로 공유하는데, 토론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냥 듣게 합니다.

21세기 타운홀미팅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의제 선정

21세기 타운홀미팅은 주민들이 직접적인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핵심 의제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America Speaks라는 비영리단체에서 1995년부터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기존의 타운미팅과 달리 '대규모 의제 선정을 위해 직접민주주의 방식과 IT를 활용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타운미팅은 사회적 의제와 관계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활동가, 정치인,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참여형 의사결정과정으로,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방식은 오래 전 마을공동체 의사결정 방식인 타운홀미팅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큰 홀에 모여 토론하면서 마을의 규범들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뉴햄프셔주의 런던데리라는 소도시에서는 별도의 대의기관을 두지 않고 주요 의사결정을 타운미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1995년 캐롤라인 루켄스마이어 박사는 타운미팅 방식을 사회적 의제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America Speaks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21세기 타운홀미팅'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방식의 대중적 토론을 조직화한 것입니다.

America Speaks는 '21세기 타운홀미팅'을 통해 ▲워싱턴 D.C 시민참여예산 책정 ▲오하이오 북동부 지역 재생사업 ▲뉴욕 그라운드제로 재건축 ▲뉴올리온즈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해복구 ▲캘리포니아 의료보험 개혁 등 미국의 굵직굵직한 사회적 의제 해결에 기여했으며, 2011년 현재 연인원 16만 명의 시민들에게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코리아스피크스가 개최한 대구시민원탁회의 진행 모습]

이미지 출처 : 코리아스피크스 홈페이지

참고 및 인용

- 위키피디아 : https://en.wikipedia.org/wiki/Town_hall_meeting
- 코리아스피크스 : <http://koreaspeaks.or.kr>

진행방법

아메리카스픽스와 같은 21세기 타운홀미팅을 기획하고 보급하고 있는 코리아스픽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진행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사전준비단계: 의제의 쟁점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론조사 ▲토론참가자 모집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토론진행자) 교육 ▲장소 선정 ▲기술·실무적 점검 등을 합니다. 참가자 모집은 해당 의제에 관련된 지역이나 집단의 인구분포—성별, 연령, 소득, 거주지역 등—를 감안하여 배분합니다. 또 참가자들에게 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참가자들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예비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야 합니다.
- ☑ 21세기 타운홀미팅 진행: 토론진행은 보통 몇 시간에서 하루 종일 합니다. 참가자 수는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예컨대 뉴욕 ‘그라운드 제로 재건축’ 의제의 경우 동시에 4,300명이 토론에 참가했습니다. 테이블 당 8~10인 정도가 참여하는 원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에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각 테이블은 동일한 순서와 주제로 토론합니다. 각 테이블의 토론 내용과 결과는 협업프로그램 등의 IT를 통해 본부석으로 취합되고, 분석팀은 실시간으로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토론자들은 분석 결과를 공유하며 다음 단계의 토론을 이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퍼실리테이터(토론진행자)입니다. 퍼실리테이터는 토론의 진행자, 촉진자, 도우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토론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고, 토론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참가자들이 골고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토론의 열개를 짜고 개진된 의견들을 체계화하여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퍼실리테이터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훈련이 필요합니다. ‘타운홀미팅’의 진행 방법, 노트북키패드(keypads) 등 협업프로그램의 기술적 활용 방법, 의제에 대한 이해 등을 숙지하기 위한 사전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로 퍼실리테이터가 구성됩니다.
- ☑ 정리: 사후정리는 행사가 끝나는 당일 1차 보고서가 작성되고,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거친 뒤 의제에 관련된 일정에 따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됩니다. 토론의 1차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차 보고서가 미흡하더라도 당일 현장에 정책결정자들이 있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정치인, 단체장, 지방의원 등 책임성 있는 정책결정자들이 반드시 직접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결과도 보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정책결정자들이 직접 참석하지 않거나 시차를 두고 토론 결과를 보게 되면, 갖가지 이유를 들어 시민참여의 의의를 무시하거나 축소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시민의회

추첨으로 선정된 시민들이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시민의회는 추첨제로 선정된 시민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숙의과정을 거쳐 정책 제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민의회는 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정치 과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보통 시민의회는 국가가 제안하는데, 이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나 다양한 조사방법들을 사용하여 특정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의회는 국가가 제안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아일랜드와 벨기에의 경우처럼 아래로부터 시민의회를 요구하는 예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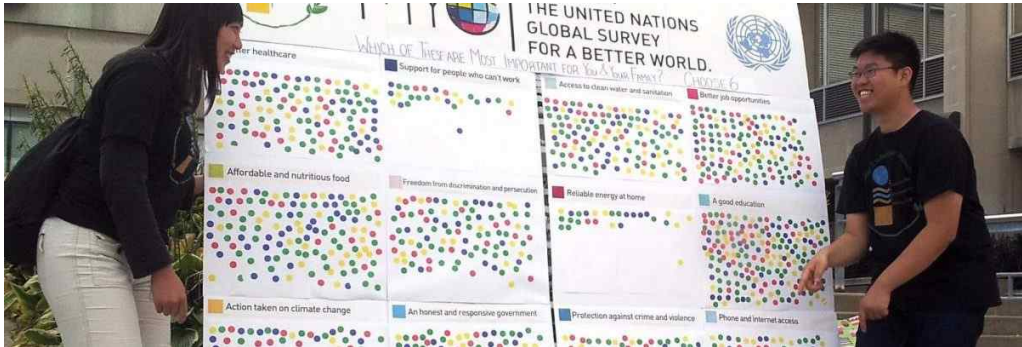
참고 및 인용: 위키피디아 Citizens' assembly, Citizens' Assembly on Electoral Reform(British Columbia)

시민의회의 특징

- ☑ 구성원의 추첨제 선출: 시민의회 구성원은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반영하는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선거가 일반 시민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Elite)을 선출하는 방법인 어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반영하기보다는 소수의 집단체제를 구성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과 달리, 추첨은 일반 시민과 유사한 사람들로 사회 계층마다 각각의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실현되었던 추첨제는 평등성, 비용 절약, 대의성 측면에서 선거의 대안으로 다른 유럽에서도 실행되었습니다. 종종 비판받는 것처럼, 시민의회가 최고의 성과를 내거나 가장 능력 있는 집단은 아닐지라도, 다양한 집단이 단일한 집단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이, 추첨제를 통한 집단 내의 다양성은 효과적인 문제해결에 독특한 관점과 해석으로 도움을 줍니다.
- ☑ 임기: 구성원의 임기에 제한을 두어 교체를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다양성을 유지하고 엘리트 계급의 독점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임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시민의회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 ☑ 규모: 정해진 규모는 없고, 목적·인구분포·커뮤니티 인구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표성을 떨 수 있게 신중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 ☑ 기능: 역사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지만, 시민의회는 어떤 제한도 없이 정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보다는 정책 제안을 위해 시민의회가 도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 숙의과정 : 구성원은 정치인이나 분석가, 과학자 등 전문가들로부터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관점, 정보, 주장들을 통합하고 집단 토론에 참가함으로써, 시민의회에 선출된 사람들이 대중들의 이해를 잘 대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디어 평가지

투표를 이용한 의사결정방법(닷모크라시)의 업그레이드



이미지 출처: 닷모크라시 홈페이지(<http://dotmocracy.org>)

참고 및 인용:

-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Dotmocracy>
- 닷모크라시여 안녕: <http://dotmocracy.org/goodbye-hello-idea-rating-sheets>
- 아이디어평가지 홈페이지: <http://www.ideaatingsheets.org/vs-dot-voting>

닷모크라시(Dotmocracy)는 ‘다중 투표’ 혹은 ‘점 투표’라고도 불리는 스티커를 이용한 투표 방법을 말합니다. 닷모크라시에서 참가자들은 제한된 수의 스티커나 펜으로 그들이 선호하는 선택지에 투표합니다.

닷모크라시는 사용하기 쉽고 재미있다는 점, 나이에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 많은 수의 참가자들이 있을 때도 유용하다는 점, 시각적인 결과를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창의성과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한시키고, 헛갈리거나 잘못된 결과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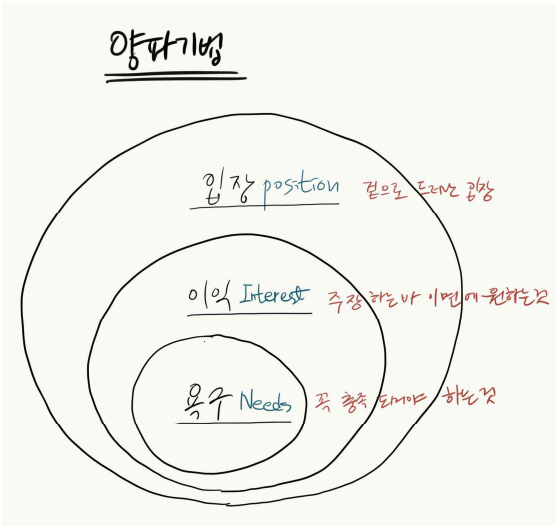
- ◆ 점 투표는 스티커로 하는 선다형 설문과도 같다.
- ◆ 참가자들은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모든 선택지들을 비교하고 숙고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럴 경우 너무 많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행자들은 독특한 아이디어를 보다 넓고 덜 구체적인 개념으로 합치고 일반화하게 된다.
- ◆ 참가자들이 스티커를 더 붙이거나 다른 사람이 붙인 점을 떼거나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쉽게 속일 수가 있다.
- ◆ 종종 사람들은 모든 선택지에 대한 스스로의 의견을 생각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붙인 곳에 단순히 따라 붙이는 경우가 많다.

양파기법

갈등을 분석하는 방법

양파기법이란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양파 껍질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한 껍질을 벗겨내도 또 다른 껍질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양파기법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의 입장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실익과 요구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갈등 상황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고 싶을 때나 갈등 당사자들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사용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양파의 겉부분 껍데기에 있는 ‘입장’은 어떤 문제에 대해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취하고 있는 입장 혹은 해결책입니다. 그 안에 있는 ‘실익’은 목표나 이익 등 당사자가 실제로 갖기를 원하는 것, 혹은 그 이면에 있는 피하고 싶은 것이나 두려워하는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안쪽에 있는 ‘욕구’는 개인 혹은 집단으로서의 당사자가 실익의 본질적인 것으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및 인용

- 갈등다루기 양파기법: 전쟁없는 세상
<http://www.withoutwar.org/?p=12172>
- 청소년갈등해결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http://lib.nypi.re.kr/pdfs/2005/05R0712/1.pdf>

진행방법 및 고려할 점

- ☑ 참가자들에게 갈등 상황에 대한 분석이 왜 필요한지, 겉으로 드러난 갈등 상황의 이면에 숨겨진 실익이나 욕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하고 양파기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 ☑ 팀별로 하나의 갈등 사례를 제시해주거나 혹은 현재 드러난 갈등 상황에 대해 제시한 다음, 표면적으로 드러난 입장, 그 속에 숨겨진 실익과 욕구들에 대해 토론하게 하고, 그 내용을 양파모양을 그려놓은 종이에 적어보게 합니다.
- ☑ 조별로 대화한 내용을 공유한 후 서로 다르게 분석한게 있다면 왜 다른 분석이 나왔는지 이야기하게 하고, 어떤 것이 가장 당사자의 입장이나 실익과 가까운지 등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해커톤

문제해결을 위한 마라톤 개발

‘해커톤’은 ‘hack(‘만들다, 파고들다’라는 뜻)’과 ‘marathon(장시간의 달리기)’의 합성어로, 혁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기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직한 행사를 말합니다.

해커톤은 보통 하루에서 일주일까지 지속됩니다. 최근 몇 년간 해커톤은 충혈된 눈과 에너지 드링크, 피자, 소프트웨어 개발로 상징되는 전형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행사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는 수단으로까지 진화해왔습니다. 해커톤은 혼자 일할 때보다 함께 작업할 때 더 많은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로그래머, 사회적 기업가, 디지털 매니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서로 엮어내는 행사입니다.

해커톤은 정부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열립니다. 2011년에는 미국 의회가 주최한 해커톤이 있었으며, 2014년에는 영국 정부가 치매에 걸린 사람들과 그들 간병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과 캐나다에서 동시에 해커톤을 열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해킹에듀(Hackin gEDU)의 해커톤은 6,000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신청한 최대 규모의 교육 해커톤이었습니다. 행사는 ‘다음 세대의 학생들이 우리 교육 시스템에 만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에서 운영했습니다.

다양한 해커톤이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열렸습니다. 많은 성공적인 해결책들이 나온 런던 의회가 주최한 해커톤과 같이, 도시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해커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교육을 모색하기 위해서 열리는 해커톤도 많으며, 재난 관리나 위기 사항에 대한 대처 등을 주제로 열린 해커톤도 있습니다. 해커톤은 또한 비영리 조직들이 기술이나 웹사이트 운용과 관련 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열리기도 합니다.



2011년 HackNY이 개최한 해커톤 (이미지 출처: hackNY.org)

참고 및 인용

-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Hackathon>
- 해커톤이란?: <https://goo.gl/9xOsWp>(해커톤 진행방법 참고)
- 해커톤을 위한 6가지 팁: <http://www.techrepublic.com/article/how-to-organize-a-hackathon-6-key-tips/>

해커톤을 위한 6가지 팁

- ☑ 참가자 확보를 위한 준비: SNS를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행사를 알리고 참가를 독려합니다. 보통 신청하는 사람들 중 60% 정도만이 실제로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 ☑ 목표: 사람들이 하루,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무엇인가 하길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목표 즉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커톤의 명확한 목표는 행사 스폰서를 찾을 때, 해커톤을 준비할 때, 참가자들이 집중해서 작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 명료한 규칙: 해커톤을 시작하기 전, 참가자들과 결과물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규칙을 공유하여 혼선을 예방해야 합니다. 시간 배분이나 참가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스, 데이터, 결과물에 대한 제한 등을 포함한 규칙을 말해줍니다.
- ☑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무선 인터넷: 꽤 많은 참가자들이 각자의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에 접속한 상태에서 작업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 ☑ 실제적인 결과: 해커톤에서 종종 멋진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그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해커톤에 대해서 지나치게 큰(비현실적인)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커톤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교류하고, 해당 분야 혹은 참가자들이 다루는 이슈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하게 하는 행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 음식, 음료, 하루 넘게 지속될 경우 잠잘 수 있는 장소 등은 사소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해커톤 진행방법

- ☑ 시작: 해커톤은 전형적으로 행사나 특정 주제에 대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발표로 시작합니다. 행사 진행자를 소개하고, 행사의 목표와 규칙, 일정을 안내합니다.
- ☑ 아이디어 제안 및 팀 만들기: 참가자들 중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발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개개인의 관심사와 기술에 따라 함께하는 팀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 ☑ 해커톤 진행하기: 해커톤의 주요 작업은 행사 일정에 따라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혹은 그 이상 지속되는 해커톤을 위해서는 간식과 음료 등을 제공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참가자들은 침낭에서 자기도 하는 등 취침도 격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마감시간을 정확히 알리고,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 발표와 심사: 해커톤의 막바지에는 각 팀들의 결과물을 3분에서 5분 동안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회처럼 우승팀을 선출하고 시상하는 과정이 있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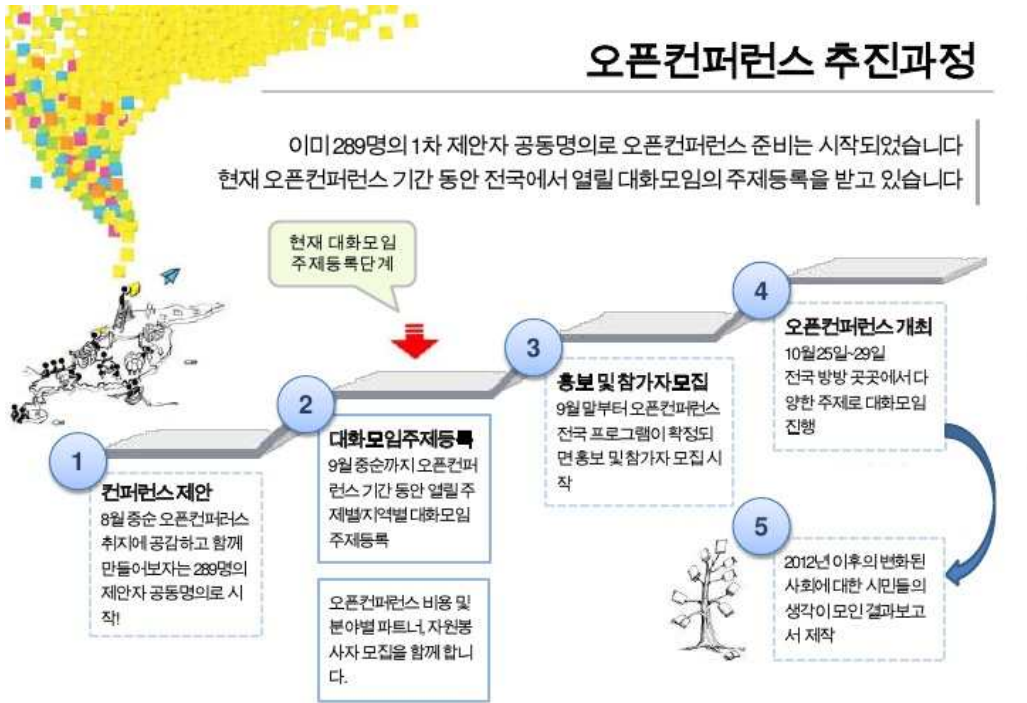
참고 및 인용

- 게임스토밍 홈페이지 : <http://www.gogamestorm.com/?p=361>

반대문제(The Anti-Problem)는 어떤 문제와 전혀 반대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생각해보므로써, 직면한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진행방법

- ☑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습니다.
- ☑ 참가자들을 3-4명으로 나눈 뒤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전혀 반대되는 문제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단체의 회원모집이 직면한 문제라고 하면 현재 있는 회원들을 어떻게 하면 다 탈퇴하게 할까, 혹은 영업 쪽이라면 어떻게 소비자들이 우리 물건을 사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와 같이 반대문제를 찾아냅니다.
- ☑ 해결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내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 ☑ 전체가 모여서 이 반대문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내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합니다.



오픈 컨퍼런스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획으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개최할 수 있는 컨퍼런스입니다. 2011년 비영리단체인 ‘더 체인지’에서 일하는 조아신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 캠프 방식의 언컨퍼런스에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자유롭게 확장해보자는 취지에서 “오픈 컨퍼런스라는 열린 토론 플랫폼을 제안합니다”라는 제안을 했고, 이 제안에 289명이 동의해서 2011년 10월 첫 번째 오픈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오픈 컨퍼런스 FAQ

- ☑ 오픈 컨퍼런스의 핵심 가치: [오픈(Open)] 누구나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열린 플랫폼과 [컨퍼런스(Conference)] 대화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는 토론 플랫폼입니다.
- ☑ 오픈 컨퍼런스의 의미: 컨퍼런스는 보통 특정 기관이 장소와 날짜를 정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모두 기획하고 참가자를 모은 후에 발표를 듣고, 그 안에서 대화하고 교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오픈 컨퍼런스는 하나의 개별 행사는 아님

니다. 매년 특정한 테마에 맞춰 누구든지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독자적인 프로그램들 간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오픈 컨퍼런스의 주최자:** 2011년 오픈 컨퍼런스를 처음 구상하고 제안한 곳은 참여와 대화 플랫폼을 운영하는 ‘더 체인지’였습니다. 하지만 오픈 컨퍼런스의 주최자는 ‘더 체인지’가 아닙니다. 오픈 컨퍼런스 기간 동안 전국 곳곳에서 독자적이고 개별적으로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 개인과 단체가 공동주최자입니다.
- ☑ **오픈 컨퍼런스 프로그램 기획자:** 오픈 컨퍼런스 프로그램 기획자는 오픈 컨퍼런스 기간 동안 지역별·주제별로 독자적인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오픈 컨퍼런스 프로그램 기획자는 주제 선정에서부터 장소 섭외, 참가자 모집, 홍보, 진행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합니다. 오픈 컨퍼런스 프로그램 기획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으며, 오픈 컨퍼런스 기간 동안 주제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 **규모나 방식의 제한:** 제한은 없습니다. 보통 컨퍼런스라고 하면 수백 명이 참여하는 큰 행사를 생각하기 쉽지만, 오픈 컨퍼런스는 여러 독자적인 프로그램들의 네트워크를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프로그램의 규모나 방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5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사실이고, 그 사람들과 세상의 변화를 위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 내용을 모두와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지인들과 모여서 수다를 떨어도 되고, 형식을 갖춰서 대화해도 좋고, 발표자를 미리 섭외하여 발표를 듣고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 ☑ **오픈 컨퍼런스의 저작권:** 누구든지 오픈 컨퍼런스라는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오픈 컨퍼런스라는 단어가 고유명사도 아니기 때문에 ‘더체인지’가 이런 방식의 컨퍼런스를 제안했을 뿐이지, 이 용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간도 5일이 아니라 하루여도 되고, 주제도 특정 분야로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방법

- ☑ **오픈 컨퍼런스 주제 선정:** 오픈 컨퍼런스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제 자체를 광범위하게, 예를 들어 ‘2012년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들’이나 ‘2013년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처럼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 ☑ **특정한 주제—교육이나 정치, 부동산, 탈핵, 입양, 갑을관계 등—의 경우는 조금 구체적으로 주제를 제시하고, 이 주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나 해법을 모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미리 주제와 연관있는 대표적인 글이나 동영상 등을 제시해주거나, 오픈 컨퍼런스 시작일에 맞춰 대표발표를 인터넷으로 생중**

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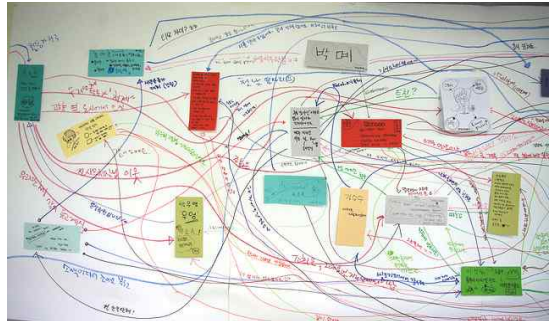
- ☑ 코디네이터 모집 및 프로그램 등록: 오픈 컨퍼런스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픈 컨퍼런스의 제안자(개인 혹은 단체)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체 과정을 조율하는 사람일 뿐, 실제 모든 프로그램의 내용은 코디네이터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프로그램 등록은 코디네이터가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프로그램의 주제, 세부내용, 장소, 시간, 규모, 진행 방식 등을 직접 쓰도록 하고 최종 확정 시간까지는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프로그램 홍보 및 참가자 모집: 전체 프로그램이 확정되었으면 컨퍼런스 홍보를 시작합니다. 홍보는 각 코디네이터가 개별적으로도 진행하겠지만 컨퍼런스 자체를 전체적으로 홍보해주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이때 제안자는 홍보하는 데 필요한 각종 소스들을 제작·공개하여 코디네이터들이 직접 수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 ☑ 예산이 있다면 프로그램 확정 후 리플릿을 만들어서 코디네이터들에게 발송해주고 참여하신 분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각 개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서로 연결된 프로그램의 하나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 오픈 컨퍼런스의 진행과 기록, 공유: 오픈 컨퍼런스가 개최되기 전 혹은 프로그램 등록하기 전에 코디네이터들—혹은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과 한차례 정도 모여서 오픈 컨퍼런스의 취지나 진행방식, 결과공유 방법 등을 협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 오픈 컨퍼런스가 막상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일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프로그램 진행을 하다 보면 기록에 소홀해질 수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록용 문서를 표준화하여 제공 해주거나 코디네이터들에게 기록자 1명을 섭외해서 함께 준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 결과보고서의 제작: 오픈 컨퍼런스가 끝났으면 일주일 이내에 코디네이터들로부터 기록(사진, 영상, 텍스트, 발표문 등)한 내용과 코디네이터들의 개별적인 후기들을 모두 취합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결과보고서는 굳이 인쇄까지 할 필요는 없으나, 문서로 작성하여 PDF와 같은 포맷으로 온라인상에 공개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교류, 참여, 공유(정보, 지식, 경험)

손으로 그리는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의 인맥을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서로를 소개하는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벽에 그려진 관계도가 너무 복잡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이 관계도를 그리게 되면 전에는 몰랐던 관계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을 개별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계를 알게 되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으로 그리는 소셜 네트워크

아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참가했을 경우에는 처음에 포스트잇이나 색인카드만을 붙이게 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끼리 맺은 관계들을 표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다’, ‘같이 밥을 먹었다’, ‘무엇에 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니 답변을 해줬다’, 이렇게 하면서 프로그램 시간 동안 가장 많은 관계선을 만든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진행방법 및 고려할 점

- ☑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진행할 공간(벽)을 확보합니다. 벽에 전지를 몇 장 붙여 놓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포스트잇이나 색인카드, 사인펜을 나눠줍니다.
- ☑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간단한 소개글을 적게 합니다. 소개글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2~3개씩 적어도 됩니다. 자신이 알릴 수 있는 내용을 적었다면, 소셜 네트워크의 벽에 골고루 붙이게 합니다.
- ☑ 이제 네트워크 지도를 그릴 차례입니다. 모두 벽쪽으로 이동하여, 참가자들이 많을 경우는 3~5명씩 이동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을 향해 화살표를 그리게 합니다. 가능하면 선 위에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됨’, ‘같이 차를 마신 적이 있음’, ‘페이스북에서 알고 있음’ 등과 같이 관계를 정의하는 이야기를 쓰도록 합니다.
- ☑ 관계도가 다 완성되고 나면 사회자가 앞으로 나와서 참가자들이 자신이 표시한 관계도에 대해서 설명하게 합니다. 만약 참가자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회자가 관계도를 보고 몇 사람만 지목해 소개하도록 해도 됩니다.

고민해결 댓글의 벽

포스트잇으로 고민을 함께 나눈다



고민해결 댓글의 벽은 ‘모이고 떠들고 꿈꾸다(모. 떠.꿈)’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고민해결 댓글의 벽은 온라인상에서 누군가의 글이나 사진 등에 댓글을 다는 것처럼, 참가자들 간에 포스트잇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일을 하면서 스스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 해결책이 이미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소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종종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이전에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을 우리에게 익숙한 댓글달기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본 것이 고민해결 댓글의 벽입니다.

진행방법 및 고려할 점

- ☑ 모든 참가자들에게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 혹은 고민거리를 종이게 적게 한 다음, 그것을 모두가 볼 수 있는 벽에 좌우로 나란히 붙이게 합니다. 이름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 ☑ 이렇게 벽에 붙은 고민들을 어떻게 함께 해결해줄 것인가? 어떤 조언을 해줄 것인가? 나에게서 어떤 경험이 있었는가? 혹은 남에게 들은 어떤 좋은 해결책들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모두가 안다는 것은 커뮤니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좋은 질문만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듯이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고,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해질 수 있습니다.
- ☑ 참가자들이 할 일은 누군가의 고민거리가 적힌 종이 밑에 포스트잇으로 격려의 메시지, 정보, 경험, 해결책 등을 적어서 서로 공유합니다. 다른 사람이 쓴 댓글 밑에 또 다른 댓글을 남길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토론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 ☑ 이렇게 참가자들은 모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서로의 고민들을 확인하고, 그 고민들을 같이 생각해보고, 댓글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정보를 주고,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면 됩니다.
- ☑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자신의 고민을 적은 종이 밑에 달린 댓글들을 모아서 이 댓글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등등 내용을 공유하면서 댓글을 달아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바 캠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되는 언컨퍼런스



바 캠프 서울 행사를 스케치한 모습(이미지 출처: joone.net)

참고 및 인용

- 바 캠프 공식 홈페이지 : <http://barcamp.org/>
- 바 캠프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http://barcamp.tistory.com/2>
- 위키피디아 : <http://en.wikipedia.org/wiki/BarCamp>

바 캠프(BarCamp)는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되는 언컨퍼런스입니다. 초창기에는 주로 웹, 오픈소스 등 IT분야를 중심으로 개최되었고, 국내에서도 바 캠프 서울, 바 캠프 제주 행사 등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바 캠프는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형식 없는 컨퍼런스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발표와 토론, 정보 공유, 인간관계의 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은 발표 및 토론 참여를 통해 자신을 스스로 참여시키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바 캠프는 열린 공간에서 참가자들끼리 서로 발표하고 배우면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통적인 컨퍼런스처럼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처음부터 나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발표를 하고, 원하는 곳에 가서 들을 수 있고, 서로 토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모든 참가자는 하나의 발표를 하거나 자원 봉사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바 캠프 서울 홈페이지에 명시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 캠프의 운영원칙

- ☑ 바 캠프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 ☑ 바 캠프에 대해 블로그에 쓰십시오.
- ☑ 만약 발표하시길 원하시면, 현장에서 발표판에 주제와 이름을 적으십시오.



- ☑ 주제는 세 단어로 요약해서 적으십시오.
- ☑ 장소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발표를 만드십시오.
- ☑ 미리 발표 내용과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 ☑ 발표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다른 발표를 듣도록 배려합니다.
- ☑ 처음 참석하는 분은 반드시 발표를 해야 합니다.

진행방법

- ☑ 준비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한 종이를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준비해놓습니다.
- ☑ 발표를 준비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적절한 시간대와 장소를 택해서 붙입니다. 발표 및 토론 시간은 참가자 수를 고려하여 30분 내지 1시간 이내로 정합니다.
- ☑ 발표를 듣고 토론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간의 교류입니다. 바 캠프를 본격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들이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전체가 모여서 자기소개를 할 때는 너무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15초~20초 정도 이내로 짧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가자들이 너무 많아서 전체 소개시간을 가지기 힘들 경우에는 그룹핑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 서로 자신을 소개하고 교류하는 시간이 끝나면 바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장소별로 붙여진 주제들을 보면서 참가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듣고 토론하고 즐기면 됩니다. 발표의 형식 또한 자유롭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해도 되고, 화이트보드를 이용해도 되고, 그냥 이야기만 해도 됩니다.
- ☑ 이렇게 시간대별로 발표와 토론, 교류를 반복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마무리합니다. 행사가 끝이 나면 참가자들은 자신의 블로그나 SNS, 홈페이지 등에 후기를 쓰고 이 내용들은 모두와 공유합니다.

휴먼 라이브러리는 덴마크 출신의 사회운동가 로니 에버겔이 2000년 덴마크에서 열린 한 뮤직 페스티벌(Roskilde Festival)에서 창안한 것으로, 유럽에서 시작되어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개념의 '이벤트성 도서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잘 알지 못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을 줄이자는 의도로 기획된 행사입니다. 행사는 '책'으로 자원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그 '책'들과 대화를 통해 그들을 이해하려는 '독자'들,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도서관(진행자/주최자)이 참여하여 진행합니다.

휴먼 라이브러리의 도서목록에 등장하는 책들의 주제는 꼭 사회 저명인사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편견의 대상이 된, 혹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분류된 소수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야와 위치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굴곡진 인생이야기를 들려주고픈 사람 등 그 주제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 리빙 라이브러리 행사가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그 이름도 휴먼 라이브러리, 사람도서관, 살아있는 도서관, 숨 쉬는 도서관 등 다양합니다. 꼭 리빙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 원래는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꼭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행 방식 또한 지역이나 규모, 주제에 맞게 적절히 변화를 주어도 무방합니다.

2011년 제주에서 진행된 사람책 도서관 행사

참고 및 인용

- 관련도서: 나는 런던에서 사람책을 읽는다. (김수정, 달, 2009)
- 살아있는 도서관, 리빙라이브러리 _ 아르떼진: <http://artezine.blog.me/90106944313>
- 대전에서 열린 리빙라이브러리: <http://pple.net/468>
- 서울숲에서 열린 리빙라이브러리: <http://blog.naver.com/dnk123/20130900334>
- 사람도서관 in 부천 카페: <http://cafe.naver.com/livinlibrarybcf>



진행방법

- ☑ 주제 선정: 주제는 독자로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를 이해하는 도서관, 새로운 직업군을 만나는 도서관, 예술가들을 만나는 도서관 등 다양한 주제의 도서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 ☑ 주제에 맞는 사람책을 선정하고 섭외: 사람책의 수에 따라 전체적인 행사 규모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책과 만나는 독자가 한꺼번에 너무 많으면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책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할 때는 휴먼 라이브러리의 취지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3~4명의 독자와 ‘대화’를 나누는 행사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사람책을 공개하고 독자 모집: 독자는 사람책의 최대 3배수 이내로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사람책과 대화를 나누는 독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사람책도 독자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책의 숫자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책 한 명당 1시간씩 총 3시간 동안 휴먼 라이브러리를 개최한다면, 독자 한 명은 총 3명의 사람책과 만날 수 있습니다. 독자를 모집할 때에는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책 3명을 미리 선택하게 합니다. 한 명의 사람책에게 너무 많은 독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줍니다. 주최측은 접수가 마감되면 사람책과 독자를 서로 매칭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독자들에게는 시간대별로 본인이 만나는 사람책이 누구인지를 사전에 알려주도록 합니다.
- ☑ 휴먼 라이브러리 개최: 휴먼 라이브러리가 개최되는 장소는 야외든, 실내든 상관없습니다. 실내에서 할 경우 사람책의 숫자에 맞는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는 일반 카페를 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실제 도서관의 로비나 휴게실 등에서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독자들은 현장에서 자신이 선택한 사람책이 누구인지 모를 수 있으므로, 테이블에 사람책의 이름을 적어서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책과 2~3명의 독자가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부터는 온전히 사람책과 독자의 몫입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할까 걱정할 수도 있지만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주 앉으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 명의 사람책과 독자의 만남을 최대 1시간 정도로 제한하고,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사람책을 만나러 갈 것을 알려줍니다.
- ☑ 회고: 모든 행사가 끝났으면 사람책과 독자가 한곳에 모여서 서로의 소감을 나누고 마무리합니다.



2010년 지속가능창작공동체 주최의 창작자를 위한 렛츠 컨퍼런스
참고 및 인용

- 지속가능한 창작공동체 홈페이지 : <http://sites.google.com/site/balsangcc/home>

렛츠(LETS)는 공동체 안에 이미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동시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고, 공유하고, 서로를 연결하는 배움과 지식의 품앗이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렛츠(LETS)는 Local Energy Trading System의 앞 글자를 합친 말인데, 지역 화폐운동인 LETS(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창작자들을 위한 렛츠 컨퍼런스가 2010년 3월,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창작자들을 위한 렛츠 컨퍼런스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가 속해 있는 영역, 분야가 달라서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입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함께 만나고, 서로 알아가고, 배움을 교환하면서 전혀 다른 분야의 창작자들과 오히려 새로운 협업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창작자를 위한’이라고 했듯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진행해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제1회 창작자를 위한 렛츠 컨퍼런스에 관한 기록들은 ‘컨퍼런스 자료 DB화하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진행 방법은 제1회 컨퍼런스의 예를 통해 정리한 것입니다.

진행방법

- ☑ 6명—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는 창의적인 생각과 나눔, 기록들을 위한 도구—스티커, 사인펜, 색연필, 메모지, 종이, 포스트잇 등—들을 준비해놓습니다. 참석한 사람들끼리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 미리 준비된 벽—배우고 싶은 것들,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라고 적힌 벽, 이를 ‘배움 거래장터’라고 합니다—에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각자 배우고 싶은 것들과 알려주고 싶은 것을 적어서 붙입니다. 이때 포스트잇의 색깔을 서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 또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종이를 떼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이 불리운 사람은 손을 들고 서로 만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배울지를 서로 정합니다. 대규모로 할 경우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들이 군데군데 자연스럽게 섞여서 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거나 도와줍니다. 시간과 장소가 표시된 배움나눔터에서 관심이 있는 배움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 ☑ 본격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30~40분 정도 배움의 시간이 끝나면 배움나눔터를 보고 다른 배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 ☑ 모두가 다시 모여 렛츠의 경험에 관한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는 회고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 이와 같은 배움과 지식의 품앗이를 지속하기 위한 방법들을 참가자들과 함께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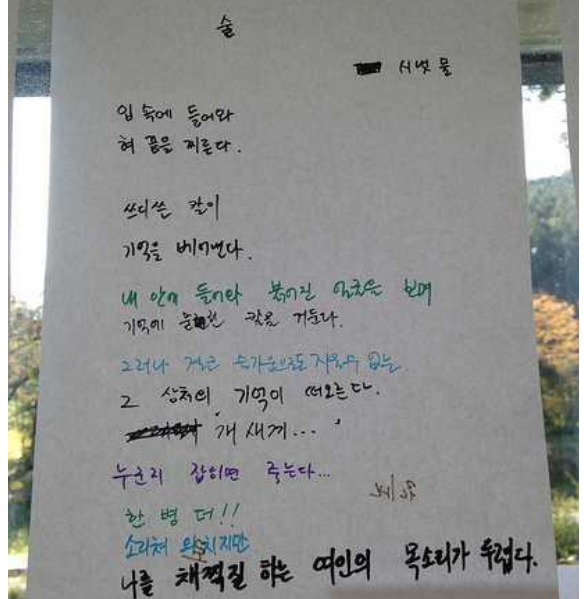
회고, 성찰, 마무리

함께 시 쓰기

함께 시 쓰기는 시의 첫 줄 혹은 첫 줄과 끝줄만 당사자가 쓰고 나머지 부분은 모든 참가자가 한 줄씩 채워주면서 시를 완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방법 및 고려할 점

- ☑ 모두에게 A4 용지를 나눠줍니다.
- ☑ A4 용지의 맨 위에 제목을 쓰고, 그 아래에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시의 첫줄을 쓰게 합니다. 그렇게 첫줄만 쓰인 종이를 거둬서 다른 테이블에 주고, 돌아가면서 한 줄씩 쓰게 합니다.
- ☑ 끝날 때쯤에는 이번이 맨 마지막이라고 알려주고 시를 마무리하게 합니다.
- ☑ 맨 처음 제목과 첫줄을 쓴 사람에게 완성된 시를 나눠주고 모두가 감상하는 혹은 낭독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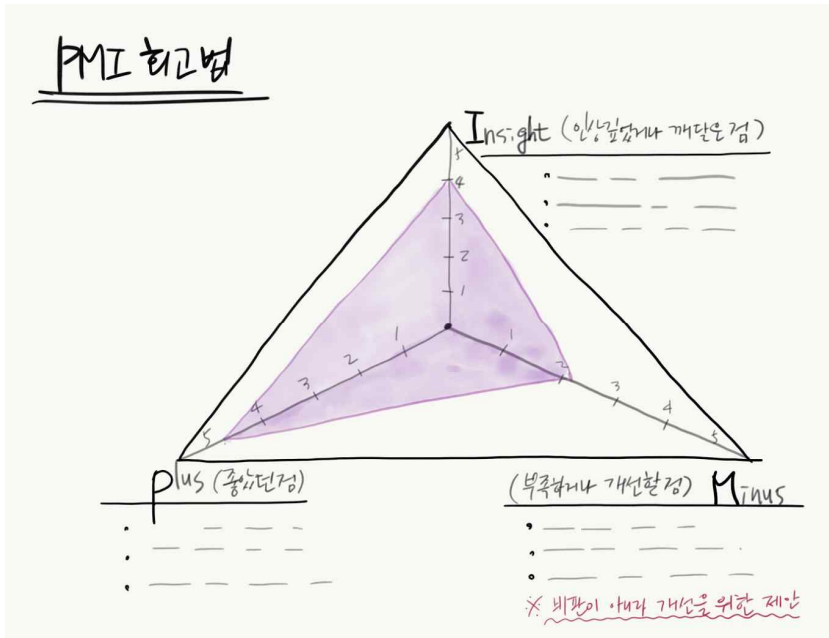


3Fs 회고법

3Fs 회고법은 사실(Fact), 느낌(Feeling), 교훈(Finding)의 세 가지 형식으로 회고하는 방법입니다. 애자일컨설팅 김창준씨가 제안한 회고법으로, 예를 들어 '나는 오늘 무엇무엇을 해봤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다'는 식으로 회고를 합니다.

진행방법 및 고려할 점

- ☑ 모임이나 프로그램이 끝난 후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각자 3Fs를 적게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고 혹은 어떤 일을 같이했고, 무엇을 느꼈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적습니다.
- ☑ 각자 쓴 내용을 옆 사람에게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의 3Fs와 상대의 3Fs가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PMI 회고는 좋았던 점(Plus), 아쉬웠던 점(Minus), 인상적이었던 점(Insight),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회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회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마지막 회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데, 각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진행해도 됩니다.

진행방법

- ☑ 각자 PMI 회고 양식을 그리게 합니다.
- ☑ 정삼각형을 그리고 각 모서리에 P(plus), M(Minus), I(Insight)를 표시합니다. 모서리와 중앙점을 잇는 선을 그린 다음, 선 위에 4개의 눈금을 균등하게 표시합니다.
- ☑ 가운데서부터 0, 1, 2, 3, 4, 5(모서리)점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밖으로 나갈수록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인상 깊었던 점이 크다고 생각하고 눈금 위에 자신의 점수를 체크합니다. (아쉬웠던 점이 별로 없다면 점수가 낮습니다.)
- ☑ 각 점수를 서로 선으로 잇고 면에 색칠을 합니다.
- ☑ 이제 각각의 모서리에 자신의 회고 내용을 씁니다.
- ☑ 다 쓴 후에는 자신이 회고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4장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법들

지난겨울 ‘이게 나라냐?’라고 사람들이 외쳤을 때, 정작 우리는 어떤 나라를 바라던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소수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나라’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바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우리는 누군가, 특히 우리가 권한을 위임한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지 않았던가요?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나라. 그런 사회는 어느 한 사람이나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혹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저 우리 중의 하나일 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장에 나섰을 때, 눈앞에 보이는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실천해야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값진 경험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좋은 시민이 되어간다는 것은 더 나은 사회를 꿈꾸고 실천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 경험이 아주 어렵거나 먼 곳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어느 날 독일의 어떤 재단으로부터 인권상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일에 목소리를 내거나 사소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값진 경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사회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풍부해질수록 우리는 더 나은 사회에서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지요.

4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사회를 꿈꾸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실천의 과정을 ‘제기하다’, ‘나누다’, ‘주인되다’, ‘감시하다’, ‘만들다’, ‘착한 삶’으로 나누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례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알아보기’로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직접 참여하고 싶다면 더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실천하기’에서 소개했습니다.

광장에서 촛불을 드는 시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을 ‘모두를 위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실천의 과정에 초대합니다.



제기하다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 법은 크게 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정기 및 수시 공표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후자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자료들입니다만, 그 공개목록 범위를 폭넓게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보다 강조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²⁶⁾

정보공개청구의 대상기관

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정보

- 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②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③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

☑ 정보공개 청구절차

- ①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청구서 작성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형태, 공개방법 등
- ② 접수 및 소관기관 이송
- ③ 공개여부 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함.
- ④ 정보공개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정보내용에 따라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실천하기

시민의 질문에 국가와 공공기관은 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 있다면,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에서 신청해 보세요.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는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긴 하나 개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정보내용 및 목적에 따라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정보공개청구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소개하는 자료의 첫 문장입니다.

- 우리가 먹는 급식은 안전한 식재료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나요?
- 우리 동네는 왜 멀쩡한 보도블록을 바꿀까요?
- 보도블록을 바꾸는 데 쓰는 예산은 얼마인가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http://www.opengirok.or.kr/>

이거리를바꾸자: <http://fixmystreet.kr>

주민감사청구

주민감사청구란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6조 1항에 근거하여 19세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광역자치단체나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는 300명의 연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0명 이내에서 각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관련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합니다. 즉, 감사청구 대상의 상급 자치단체 또는 정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서울시에서는 1996년부터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시행했고, 이를 모델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1999년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중앙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청구는 크게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도 가능합니다.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를 근거로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청구하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감사원에서 감사실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공익감사청구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에 근거하여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알아보기

☑ 국민감사청구

근거규정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72조
청구인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
청구대상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제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 사적인 권리관계 및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주민감사청구 대상임) • 행정심판·소송 등 불복구제절차 및 이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청구기관	감사원 국회·법원·선관위·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은 해당기관에 청구
처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 결정(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감사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종결

공익감사청구

근거규정	〈공익사항에관한감사원감사청구처리에관한규정〉 (감사원 훈령)
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 국민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의 요건을 갖추고 상시구 성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익추구의 시민단체(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제외) •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당해 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중 자체감사기구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경우로 제한) • 지방의회(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로 제한)
청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정책·사업 추진과정의 낭비 • 행정, 시책 등의 제도개선 사항 • 위법 부당한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등
제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밀, 안전보장 • 수사·소송·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항 •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 추구사항 • 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기관	감사원
처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총장이 감사실시 여부 결정 •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공직감찰본부장이 결정(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 종결

 실천하기

주민감사청구는 요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혼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민참여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제도의 문턱이 높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함께 모이면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제도 중엔 ‘주민소송’도 있습니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된 후 그 감사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라는 절차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소송은 혼자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로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일반 주민들이 재무회계상의 위법성을 잘 알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쉬운 참여방법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

집단소송제도

집단소송제이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으로 소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규모가 소액이라 개개인이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한 명이나 두세 명의 대표당사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집단소송을 ‘대표당사자 소송’이라고도 하고, 다수 개인들이 원고가 된다는 점에서 특정 단체가 원고가 되는 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경 증권 분야에 한해 집단소송이 도입되었으나, 지금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부정입학으로 인한 피해, 떡거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소비자운동의 방법입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집단소송의 결과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는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판결에 따라 배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집단소송’에 관한 법안 개정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천하기

지금까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시민단체 또는 법무법인이 소송 대리인이 되어 집단소송인단을 온·오프라인으로 모집합니다. 참고할 만한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http://cafe.naver.com/shalomla>

카드사 개인유출 집단소송: <http://cafe.naver.com/creditcardinfo>

불매운동

불매운동(不買運動, boycott)은 항의의 수단으로 항의 대상과의 거래를 끊거나 항의 대상과 관련한 상품의 구매·사용을 중단하는 자발적인 소비자 활동입니다. 불매운동이란 1870년대 말 아일랜드에서 토지관리인 퇴역 육군대위 보이콧(Charles Cunningham Boycott, 1832~1897)의 악정에 대해 소작인이 조직적으로 행한 사회·경제적인 절교로, 대위와의 접촉을 모두 거절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인해 옥시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전국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동참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실천하기

보통 저항운동은 정부나 권력기관을 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매운동은 경제주체인 기업을 향하는 활동입니다. 기업의 잘못된 제품·서비스 생산이나, 부도덕한 행위, 혹은 시민사회의 가치에 반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나서서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동료 시민들에게도 행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공익제보

한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익제보(whistle-blowing)란 말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익제보자(whistle-blower)는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을 말합니다.²⁷⁾

대표적인 공익제보 사례를 살펴보면,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기록을 공개했던 윤석양 이병, 감사원과 재벌의 유착 비리를 고발했던 이문옥 감사관, 1992년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을 고발한 이지문 중위,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단체장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준수 연기군수, 2000년 인천 국제 공항 터미널 부실 시공을 폭로한 정태원 감리원, 4대강 사업 연구 용역에 대한 부적절한 압력을 고발한 김이태 박사, 군 납품 비리를 고발한 김영수 소령 등입니다.

또한 공익제보 이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고자를 누설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기업, 단체의 공익침해행위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해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받게 되며,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었습니다.

실천하기

공익제보의 신고접수기관은 ①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②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③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 공공단체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공익제보 게시판 운영하거나 공익제보자 생계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호루라기재단: <http://www.horuragi.or.kr>

한국투명성기구: <http://www.ti.or.kr/xe>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www.cleankorea.net

아름다운 재단 어쩌다슈퍼맨 캠페인: <https://beautifulfund.org/superman>



나누다

셰어 하우스

셰어 하우스(share house)는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사·휴식 등 생활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공동 생활공간이 마련돼 주거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1~2인 가구가 많은 일본·캐나다 등의 도시에 많으며, 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등장한 주거 양식입니다.²⁸⁾

셰어 하우스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도 있지만,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과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임대주택의 형태로, 민간임대의 거주 불안정을 보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는 사회적 주택을 위한 지원 사항을 체계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협력형 시범사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천하기

셰어 하우스는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가끔씩 하게 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를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실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사람들’(이하 ‘우동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동사의 구성원들은 보증금 1,800만원, 월세와 생활비를 합쳐 20만원을 내고 모여 공동주거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아가 단지 숙식을 함께하는 것을 넘어 정기적으로 함께 농사를 짓고(논데이·밭데이), 공동체 카페(커뮤니티 펍 0.4km)와 게스트하우스(오공하우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²⁹⁾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을 목표로 결성됐는데, 2014년에는 집이 없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조합원들끼리 모여 다가구 주택을 청년층에게 임대하는 ‘달팽이집’을 운영합니다.³⁰⁾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 외에도 ‘함께일하는재단’의 ‘허그(HUG) 셰어 하우스’ 사업처럼 단체들이 셰어 하우스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공유서가

공유서가는 마을에서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책들의 목록을 인터넷 공간에서 공유하고, 보고 싶은 책이 있는 집에 놀러가서 책도 보고 이웃과 담소도 나누는 활동입니다.

다.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생겨난 ‘똑똑도서관’은 공유서가 활동의 좋은 사례입니다. 자신이 가진 책을 집에 머무르는 시간과 함께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공개하면, 그것을 보고 이웃이 ‘똑똑’ 문을 두드려 책을 빌려가는 공유형 네트워크 도서관입니다. 책을 공유하는 참여자 모두는 사서가 됩니다. 각자가 가진 책을 돌려보자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지만, 책을 매개로 주민들이 서먹하지 않게 이웃의 집에 노크할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파주에서 시작된 이 활동은 강원 원주와 속초, 서울, 대전, 경기도 고양, 시흥 등 30여 개 지역으로 확산됐습니다.³¹⁾

실천하기

먼저 마을사람들과 공유서가 활동을 하기로 이야기하고, 동의한 사람들이 먼저 인터넷 공간을 개설해 각자의 집주소와 가지고 있는 책, 그리고 방문이 가능한 시간 및 유의사항 등을 올립니다.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주고 내 공간을 공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도서관을 준비하며 친해진 이웃들과 신뢰관계가 생기면 큰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바람이 실현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³²⁾

물품기증

우리는 자선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대가 없이 내놓을 때가 있는데, 내놓는 것이 시간과 노동인 경우 봉사, 돈인 경우 기부, 그리고 물건인 경우 기증이라 흔히 불립니다. 특별히 부유하지 않더라도 자세히 둘러보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는 받는 사람에게 요긴할 만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생활용품을 재사용 매장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기증하면 기증받은 물품은 분류와 세탁 등의 과정을 거쳐 가격이 책정된 후 매장에서 판매됩니다. 기증된 물품은 가격이 책정되면 기부금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같은 행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꽃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한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꽃을 기증받아 손질을 거쳐 꽃을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내는 활동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나면 창고에 그냥 보관해 놓는 문구류나 동화책도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천하기

☑ 생활용품 재사용 매장 ‘아름다운가게’: 2017년 현재 전국에 140여 개 매장이 있습니다. 기증 물품이 3박스 이상일 경우 온라인 및 전화 신청으로 ‘아름다운가게’에서 직접 방문 수거도 합니다.

- ☑ '함께일하는재단'의 '굿윌스토어': 매장 판매 등의 일자리를 장애를 가진 사람과 일 자리를 갖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 꽃 기증·재활용 '플리'(Flry): 한번 사용되고 버려질 꽃을 기증받아 재가공해 소외계층 시설에 전달하거나 원예수업을 진행합니다. 결혼 계획이 있는 신랑·신부, 예식장 및 성당 및 교회, 기업 행사 및 이벤트 주최자, 플라워업계 종사자 등의 꽃 기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³³⁾
- ☑ 비누·크레파스·이면지·동화책 기증 '옴김'(OmKim): 호텔에서 버려지는 비누, 고학년이 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크레파스, 동화책 등을 기증받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를 재가공해 저개발국에 옴기고 있습니다.³⁴⁾

신체일부기증

물품기증의 특별한 형태로 신체의 일부를 기증하는 실천도 있습니다. 사후에 의학 연구를 위해 전신을 기증하는 것도 가능하고, 인체의 일부가 다친 사람들의 치료를 위해 장기를 기증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기증을 약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합의를 통해 신체일부기증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살아 있는 동안에도 머리카락과 같은 신체 일부를 기증하는 실천도 있습니다. 소아암에 걸린 어린이들이 항암치료를 받으면 탈모가 나타나는데, 이들에 대한 정서지원을 위해 모발을 기증받아 가발을 제작해 지원하기도 합니다.

실천하기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로 사후 각막기증, 뇌사 시 장기기증, 인체 조직기증, 생존 시 신장 기증 등이 가능합니다.³⁵⁾

장기기증 서약을 망설이는 당신에게³⁶⁾

질병관리본부의 장기기증 인식조사에 따르면 19~59세 1,000명 중 “기증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413명이었지만, 실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17명에 그쳤습니다. ‘절차가 번거롭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다’는 오해 때문이었는데요, 미등록자 중 30.8%는 ‘등록 방법을 몰라서’, 9.6%는 ‘절차가 복잡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기증서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뇌사에 빠져도 가족들이 반대하면 기증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3만2867명이지만, 장기기증자 수는 3,000명이 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끝내 장기이식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은 계속 증가해, 2016년 현재 1,956명에 이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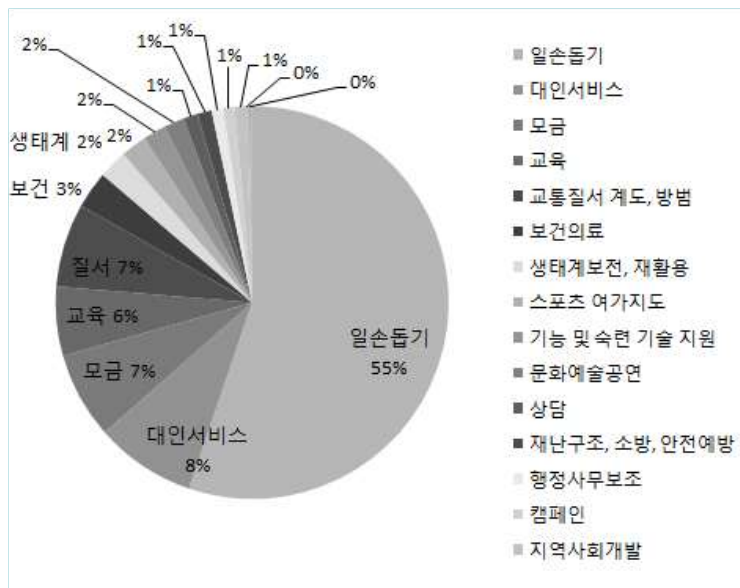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의 모발기증을 위해서는 머리카락을 25cm 이상 길러야 합니다. 25cm 이상이 되어도 가발로 제작하면 조금 짧아지기도 하고, 환자가 원하는 길이의 가발을 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발기증을 할 때에는 머리카락을 고무줄로 묶고, 고무줄 윗부분을 잘라서 포장합니다. 모발기증 사전신청 후 우편송장을 출력해 등기우편을 보냅니다.

모발기증 전 알아둘 것!
한번이라도 파마나 염색을 한 모발은 가발 제작이 안돼요~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동료 시민들을 돕는 활동으로, 오랜 전통을 지닌 활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부터라고 합니다. 당시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 요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원봉사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2007년의 전국민적인 태안 기름띠 제거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 활동이 지닌 힘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자원봉사 활동 말고도 다양한 주제의 자원봉사 활동이 다양한 기관·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돕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시민들의 다양한 실천방법 중 가장 일반화된 종류로, 4명 중 1명의 시민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1년간 주로 참여한 자원봉사 활동분야³⁷⁾



실천하기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데는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 ☑ 이웃도움활동: 일상 속에서 이웃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만났을 때, 자발적으로 도움에 나설 수 있습니다.
- ☑ 자원봉사센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마다 자원봉사센터가 개설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면 해당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과 수요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 자원봉사기관·단체: 종교단체나 사회복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자원봉사학습: 초·중·고 교육과정에 자원봉사 참여를 통한 학습과정이 포함돼 있고, 많은 대학에도 사회봉사단이 설치돼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하기

“사회변화를 위한 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돈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훌륭한 방법입니다.”³⁸⁾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후원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단체마다 편차가 있지만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후원이 더욱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은 관심 있는 활동을 하는 단체를 찾아 매월 정기적인 후원금을 약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최근 또 한 가지 후원하는 방법 중 하나는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소규모 후원을 받거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수의 후원자들이 모금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금전적 보상 이외의 형태—공연, 음악, 영화—로 일정 부분 보상받는 유형입니다.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인 1단체 후원하기 캠페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공동 캠페인

"오늘, 커피 한 잔을 마시겠습니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우리 생활에서 1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일 있을까요? 시민사회단체의 회비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캠페인 참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https://www.wadiz.kr>), 텀블벅(<https://tumbbug.com>)
다음 같이가치: <https://together.kakao.com>



주인되다

생활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하나로 일상적인 식품과 공산품, 서비스를 서로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약칭이지만, 생활협동조합이라는 약칭이 더 친숙합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이라고도 하는데 생활협동조합, 줄여서 생협이라는 말이 널리 쓰입니다. 생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인 생필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소비자생협, 의료공제와 비슷한 의료생협, 대학교 내에서 부대사업을 주로 실시하는 대학생협 등이 있습니다.³⁹⁾

우리나라 생협은 대체로 ‘생활재’(생협에서의 ‘소비재=상품’을 통칭)를 공동구입하는 지역생협이 중심입니다. 지역생협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여 안전한 먹을거리—친환경·유기농산물(식품)—를 직거래하는 협동조합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농촌을 살리고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는 생명운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생산자는 정직으로 소비자는 믿음으로’를 슬로건으로, 도시의 소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제공 받고 농촌의 생산자는 안정적 생산과 경제적 생활을 보장받는 생활공동체를 실천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⁴⁰⁾

실천하기

- ☑ 생활재 사용하기: 먼저 초기 출자금(2~5만원)을 납부하고(출자금은 조합원 탈퇴 시 반환 받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합니다. 필요한 생활재가 있는 경우 매장방문 또는 인터넷 및 전화 주문을 통해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조합원 활동: 많은 경우 조합원들은 생활재 사용 외에도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여기에는 교육, 회의, 간부역할 수행 등 조합 운영을 위한 활동, GMO완전표시제, 바디버든, 탈핵 캠페인 등 사회참여 활동, 식생활 연구 및 실천, 전통양념(된장, 식초, 간장 등) 배우기, 요리대회 등 생활재 이용 프로그램, 관심주제별 동아리 모임, 생산지 견학 등 생산자-소비자 교류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는 1998년 읍·면·동 행정기능 전환을 통해 추진되었습니다.⁴¹⁾ 1998년에는 경제위기 직후라 작은 정부로 개혁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행정기관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개편은 기존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을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

향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읍·면·동 사무소의 여유공간을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위한 것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치구별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고, 이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둡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제도상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구라기보다 읍·면·동의 심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들은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천하기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 직장을 둔 사람이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기가 되면 주민자치위원 모집에 관해 공지를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은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기획과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대체하는 정책이 시범사업 중입니다. 새로이 구성된(될)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그 권한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방법도 기존과 달리 보다 개방적으로 변했습니다. 현재 시범실시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50명 이내로, 60% 이상 또는 위원 전원을 공개모집-공개추천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중앙정부에서도 2017년 말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하는 주민자치회 구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공개모집과 공개추천을 통해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숲이라고 할 만큼 도시는 아파트로 가득합니다. 주거형태가 주택에서 아파트로 전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 공동주택 안에서 다양한 문제와 갈등들이 발생합니다. 투명한 공동주택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구가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주자로 구성됩니다.

최근 입주자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요건들

이 강화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의 경우 후보자들이 공약을 입주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기도 하고, 직접 홍보전단을 나눠주며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몇몇 이해관계자들만의 아파트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실천하기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동대표를 선출한 후 이들로 구성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대표가 돼 관리비 확정과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 및 운영 등에 관한 관리주체의 집행업무를 결정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입주자대표는 해당 아파트단지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더 선출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규약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
2. 아파트 관리방법의 제안
3.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부과기준 결정
4.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5.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아파트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7.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8.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9.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이 따르는 경우)
10.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1.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청소년의회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치단체 교육 및 청소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각 자치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을 통해 보장된 청소년 참여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의회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3년 ‘전국사회교사모임’, ‘정의교육시민연합’,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홍사단교육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가 함께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운영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선거를 통해 전국에서 100명의 청소년의원을 선출하고, 임시회의와 본회의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교육기본법> 개정, 만18세 선거권 인하운동, <학생인권법> 제정운동 등 교육·청소년 관련 입법청원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청소년 목소리 내기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12년 성북구 어린이 청소년의회를 시작으로 자치단체 안에서 청소년의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최근 청소년의회는 서울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청소년자치 영역의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대문구, 동작구, 금천구, 광진구에서 청소년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 모의의회 경험에서 정기적인 활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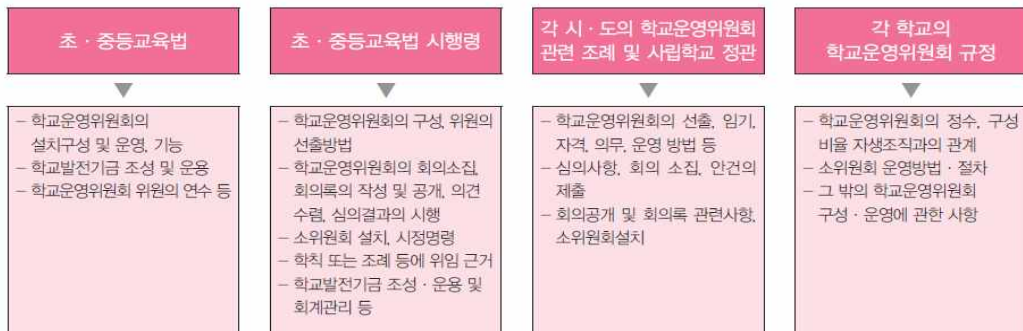
청소년의회는 하루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4개월 이상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각 자치구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개설된 청소년의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청소년의회 담당기관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서대문구청 교육지원과
동작구 청소년의회:	동작구청 혁신교육센터
금천구 청소년의회:	금천구청 혁신교육센터
관악구 청소년의회:	관악구청 혁신교육센터
광진구 청소년의회:	광진구청 혁신교육센터
성북구 청소년의회:	성북구청 교육청소년과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대한 많은 결정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1995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2000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했고, 학교 내 중요한 자치기구가 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2000년도 후반부터 학교자율화 확대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별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해당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해당 학교 교사, 학부모나 교사는 아니지만 해당 학교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입니다. 최근에는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도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 자문한 사항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 보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기

-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구성비율은 학생 수와 학교규모를 고려해 정하고, 세부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정수		구성비율		
학 생 수	위 원 수	구 분	일반학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학교
200명 미만	5~8명	학부모위원	40%~50%	30%~40%
200명~1천명 미만	9~12명	교원위원	30%~40%	20%~30%
1천명 이상	13~15명	지역위원	10%~30%	30%~50%

-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초·중등교육법> 제32조>

국 · 공 립 학 교(심의)	사 립 학 교(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수련활동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국·공립학교의 기능과 같음
· 학교현장, 학칙의 제·개정	· 학교법인 요청 시
· 공모 교장<<교육공무원법> §29조의3⑧>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 제외
· 초빙교원<<교육공무원법> §31②>의 추천	

-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은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 사립학교는 자문기구입니다.
-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실천하기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정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선출방법이 완전한 개방제는 아닙니다만,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취지를 훼손시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관점이 중요한 실천 활동입니다. 운영위원의 선출시기와 절차는 각 시·도의 조례 또는 학교규정으로 정합니다.

위원 구성절차	위원의 선출 방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구분	국·공립 학교	사립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전체회의 직접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및 선거홍보 가정통신문,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 무기명투표 선출	교직원 전체회의 추천자 중 학교장이 위촉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조례 및 학교운영규정 의거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교원위원의 추천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무기명투표 선출	
선거 공고 및 입후보 후보자등록 기한 확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의 경우, 규정 의거)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가능 ↓			
지역위원선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무기명 투표 선출(교원위원 제외) ↓			
선거결과 홍보			

교육희망네트워크: <http://cafe.daum.net/eduhopenet>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http://www.hakbumo.or.kr>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산편성단계에서 참여하는 것을 협의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광의의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는 시민운동 차원의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⁴²⁾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경과

1990년대 중반	예산감시활동 시작(청주, 원주 등)
2000년 3월	‘예산감시네트워크’ 출범: 예산감시를 넘어 편성과정부터 시민참여 필요성 제기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공약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등장함. 이 시기부터 주민참여예산 조례제정운동이 시작됨
2003년	광주광역시 복구 광주의 시민운동단체인 ‘참여자치21’의 제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2004년	울산광역시 동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기도 안산시, 전남 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지방재정법>개정 • 9월 모든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됨 • 개정으로 인해 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구체적인 예로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는 ▲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 시민제안사업을 심의, 조정, 의결하며 ▲ 서울시 주요 재정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300명 이내로 참여예산위원과 추천위원(시장·시의원) 25명을 포함하여 구성합니다. 참여예산위원은 예산학교 회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공고(1개월)를 통해 위원회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연령, 성별, 지역(자치구) 간 균형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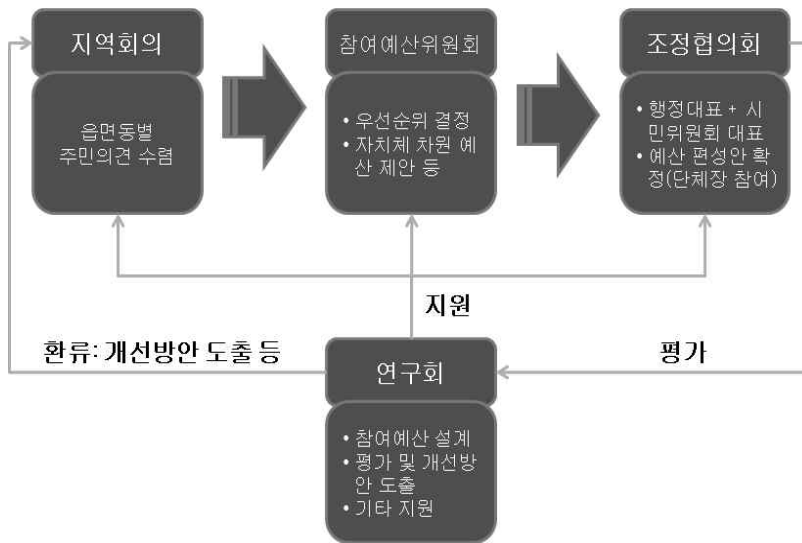
실천하기

앞서 2장에서 간략히 소개했듯이,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싶다면, 필요한 예산 사업을 제안하거나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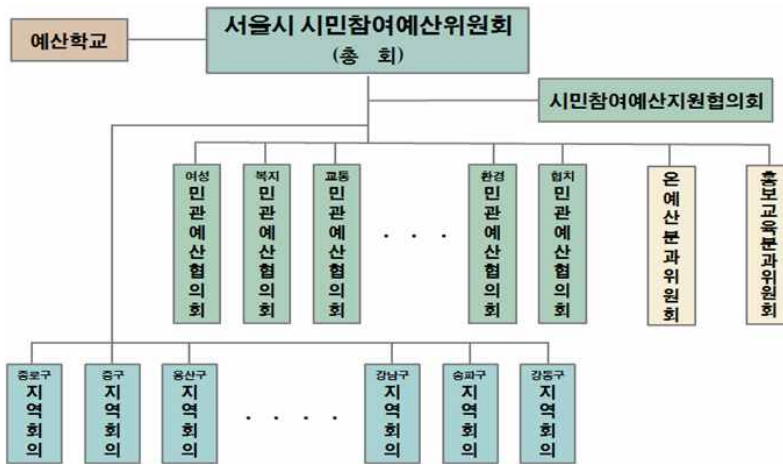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https://yesan.seoul.go.kr>

알아보기

☑ 주민참여예산 작동체계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조직도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구성(2018)

총회	300명 이내
민관예산협의회 (10개/200명 내외)	시민 제안 사업 심의·조정 분야별 27명 내외: 참여예산위원(20), 민간전문가(3), 사업부서팀장(4)
은예산 분과(5개)	시 전체 예산 의견개진 및 모니터링 ※ 분야별 15명 내외(약 75명)
홍보교육분과(25명 내외)	참여예산 홍보, 교육, 모니터링 등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31명)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지원, 연구, 자문, 의견수렴 등 예산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참여예산위원, 협치위원, 시의원, 공무원

주민발의제와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는 법으로 규정된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입니다. 이 법들은 각각 2000년 3월, 2004년 7월, 2007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주민참여제도	시행일	근거법	참여 내용
주민발의제	2000년 3월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
주민투표제	2004년 7월	주민투표법	주민들이 투표 통해 직접 결정
주민소환제	2007년 7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 청구

주민발의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들이 원하지만, 지방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 또는 폐지시켜주지 않을 때,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요건은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받는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단체에서는 총 유권자의 1/100 이상 1/70 이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권자의 1/50 이상 1/2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한 수만큼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투표제는 주민들 자신 직접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거쳐 신청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주민투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도 청구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라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투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청구요건은 해당 지역 유권자의 1/20 이상 1/5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 그 직에서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소환제는 일정한 청구요건을 거쳐 청구가 접수되면,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구요건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15% 이상, 지방의원의 경우 20% 이상 서명을 받는 것입니다. 소환사유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실천하기

법으로 보장된 이 세 가지 주민참여제도는 주민들에게 많은 결정권한을 부여하지만, 그런 만큼 청구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서명 수도 그렇지만, 이 서명에는 서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주소를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명 명부는 선관위에서 이름과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대조해 청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민참여제도는 잘 활용되지 못하는 편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투표제는 사문화된 제도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지금까지 활용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주민소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소환제는 어렵게 청구요건을 충족해도 결국 주민투표를 통해 소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1/3을 넘지 못하면 개표도 없이 청구 내용이 기각됩니다. 평일에 치러지는 주민투표에 33.3% 이상의 투표율을 기대하는 것은 이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민소환이 성공한 사례는 지금까지 딱 한 번입니다. 지난 2007년 경기도 하남시에서 광역화장장 문제로 당시 하남시장과 3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이 청구 요건을 거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방의원 두 명만 실제 소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주민투표 투표율 미달로 결국 소환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사례들에서도 모두 주민투표 투표율 미달로 개표도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그나마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이 주민발의제입니다. 하지만, 주민발의제의 경우에는 최종 결정권이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의된 건수에 비해 실제 조례 제·개정 및 폐지에 성공한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 실제 청구요건을 통해 발의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주로 주민들의 생활문제와 밀접한 사안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1년 유흥가와 학교의 이격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광명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민발의, 2003년 전라남도와 그 뒤를 이어 여러 자치단체에서 청구된 <학교급식 지원조례>, 2014년 경기도 군포시의 <방사능 안전 급식조례>, 2015년 대전 유성구의 연구단지 내 소규모 원자로 관련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조례> 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주민들의 이해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발의제가 활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문제와 관련해 조례를 제·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나 특정한 정책을 주민들이 수립하거나 결정하고자 할 때,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을 그 직에서 해임하고자 할 때는 여러 주민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관련 절차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된 시민운동단체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용합니다.



감시하다

행정·의정감시

행정·의정감시활동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및 국회의원이 선거 공약에 충실한지, 시민권익에 얼마나 힘쓰는지 시민들이 직접 감시·감독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다음 선거에서 후보 평가의 기준이 되며, 1990년대 초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선거 공약 실행 감시뿐 아니라 국회 임시회·정기회 및 국정감사 모니터링, 의원 법안 발의 모니터링, 정당 모니터링, 정책 및 예산 감시활동 등 세분화된 활동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행·의정감시 활동 등 풀뿌리 주민참여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 활동은 유권자가 선출한 자치단체장 및 의원들이 유권자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유권자 권리행사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활동으로 시민들은 행정과 의회 역할의 중요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실천하기

- ☑ 열려라 국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꾸준히 감시하는 활동을 펼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재산내역, 후원금, 의안발의 및 출석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⁴³⁾
- ☑ 의정감시단 참여: 많은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감시를 위한 의정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행정 감시하기: 많은 지역 시민운동단체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지방의원들과 협력할 때 효과가 좋습니다.

환경감시

환경감시는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환경 요인 조사 활동을 말합니다. 1990년대 들어 시민사회의 환경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물, 토양, 공기, 생활환경의 오염실태를 시민들이 나서서 감시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과거 기적의 물질로 알려지면서 석면을 건축자재로 사용한 건물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 건물들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일이 많아지면

서, 석면과 관련한 환경감시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석면은 질기고 보온, 보습, 흡음 기능까지 있어 다양한 건축자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미량이라도 인체에 유입되면 악성종괴종이라는 치명적인 병을 일으킨다는 게 확인돼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금지 이전에 석면 자재를 쓴 건축물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석면은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석면 가루가 공기중에 날리면서 반경 2km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과천에서는 석면을 사용해 건축됐던 오래된 초등학교들의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먼지 문제를 감시하기 위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참여한 학부모들은 석면감시 활동 교육을 수료한 후, 현장에서 석면시료 채취, 건축물 철거과정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⁴⁴⁾

실천하기: 사례들

- ☑ 서울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환경감시단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적정관리 상태 점검, 맨홀·빗물받이 등 공공환경시설 파손·악취발생 여부 확인, 분뇨수집운반차량 청결상태 점검, 하천오염물질 무단방류 감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또 중랑천, 홍제천, 안양천, 탄천 총 4개 지천별 환경감시망을 구축해 서울시 전역 환경오염을 감시합니다.⁴⁵⁾
- ☑ 생활환경 감시활동: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생활 제품들의 유해물질 성분조사 및 공개되지 않은 전 성분을 공개할 것을 기업에 요구하는 등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과 블로그로 공개됩니다.⁴⁶⁾

미디어감시

1980년대 이후 텔레비전이 대량 보급되면서 미디어는 우리의 삶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영화와 비디오,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들이 보급되면서, 우리의 삶은 미디어와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미디어의 영향에는 긍정적인 것도 많지만, 부정적인 것들도 많습니다. 미디어의 소비자라 할 수 있는 수용자의 정체성을 띤 시민들이 시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콘텐츠들을 감시하는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콘텐츠들을 찾아내고, 해당 제작자나 미디어 관련 사항을 규제하는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건전한 미디어의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칩니다.

실천하기

감시활동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주로 청소년 유해 콘텐츠, 성차별 및 성폭력 콘텐츠,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왜곡된 보도에 대한 감시활동 등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미디어 감시 활동을 펼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통해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감시운동본부: <http://www.womenlink.or.kr>

민주언론시민연합: <http://www.ccdm.or.kr>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매체비평 우리 스스로(매비우스): <http://mabius.tistory.com>



만들다

사회혁신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은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절실한 사회적 필요’가 있는 모든 생활의 현장에서, 신뢰와 협동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접근법에 따라 공동체 기반의 자체적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시민주도의 사회변화 계획과 과정을 말합니다. ‘절실한 시민적 사회적 필요’는 국가와 시장이 이미 해결하는 데 실패했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아 국가가 계속 외면하거나, 수익이 나지 않아 시장이 외면하거나,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만 오히려 문제를 키우거나, 시장이 장악해서 수익을 올리지만 다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국가와 시장이 각각 국지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영역들입니다.⁴⁷⁾



실천하기: 사례들

- ☑ ARTRASH: ART와 TRASH의 합성어로, 사회문제를 예술로 풀어내는 문화예술혁명단체 ‘(작은따옴표)’에서 진행하는 친환경 문화예술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 길거리 쓰레기 문제에 대해 체험을 통해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체험료 대신 시민들이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와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길거리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러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2015년 서울혁신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 ☑ 사각사각 프로젝트: 복지사각지대의 이웃들과 기부자들을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갑니다.⁴⁸⁾
- ☑ 투정(To.정): 게임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해,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입니다.
- ☑ 동물개체인식연구소: 반려견의 비문을 이용한 동물등록 시스템으로, 잃어버린 반려견들이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적정기술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은 주로 개발도상국 지역의 문화적, 정치적, 환경적 면들을 고려하여, 삶의 질 향상과 빈곤 퇴치 등을 위해 적용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첨단기술과 하위기술의 중간 정도 기술이라 해서 중간기술이나, 대안기술, 국경 없

는 과학기술 등으로 일컬어집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저개발국에 적용된 적정기술은 물 부족, 질병, 빈곤, 문맹 등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선진국에서도 적정기술은 소외 계층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유용한 기술 개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적정기술은 친환경적이고 가격이 중요하므로, 사용자 스스로가 제조할 수 있도록 현지의 상황에 맞는 재료와 기술을 사용합니다. 또한 현지 환경에 기반을 두고 개발이 이루어지며, 대규모 사회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⁴⁹⁾

실천하기

- ☑ 적정기술 사례들: 햇빛 건조기, 자연 저장고, 자연채광, 자연 정수기, 태양굴뚝, 기화열 자연냉방, 태양열 온풍기, 태양열 온수기, 축열 벽, 고효율 화목 난방장치,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 디젤, 비전력 펌프 등이 있습니다.⁵⁰⁾
- ☑ 적정기술협동조합: 적정기술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적정기술이 공존과 정신적인 행복추구를 다룬다고 말합니다. 연대와 자립에 기초를 둔 협동조합은 적정기술을 실현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 ☑ 적정기술을 활용한 공익활동: 쉐어 라이트는 촛불 에너지로 작동하는 온열발광다이오드(LED)의자를 개발했습니다. 열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열전소자를 탑재해 별도 전기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촛불을 켜 뒤 제품 안에 넣어두면 200 럭스 밝기 LED 전등 기능뿐만 아니라 약 55도까지 온열기능을 제공합니다.⁵¹⁾

비전화공방

권력과 자본의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속도와 규모를 추구하며 사는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전화공방은 전기와 화학물질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일본에서 시작한 비전화공방은 2017년 서울혁신파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전화공방 서울’은 일본 비전화공방에서 축적한 20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구나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듭니다. 손쉽게 만들고 만든 물건을 직접 사용하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 손을 쓰고 몸을 움직이면서 기술을 익히는 즐거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관계, 풍요로운 일상과 오감으로 느끼는 자연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성하는 힘을 경험합니다.⁵²⁾

실천하기

- ☑ 비전화공방 제작자들의 하루: 태양열 냉장고(솔라프리지) 만들기, 낙엽으로 멀칭⁵³⁾

하기, 태양열 식품건조기 만들기

삶에 필요한 기술을 스스로 쌓는 커뮤니티 활동

자급·자족·자립 기술 익히기

추천 서적

환주숙녀화이보현 지음, 안홍준 그림, 2017, 《안 부르고 혼자 고침 소소한 집수리 안내서》, 휴머니스트
웬디 제하나라 트레메인, 황근하 옮김, 2016, 《좋은 인생 실험실-소비자로 살기를 멈추고 스스로 만들어 살아가기》, 산티

에너지자립마을

‘4.2%.’ 2013년 서울의 에너지 자립률(소비량에서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원자력발전소(원전)를 바닷가에 짓고, 멀리 떨어진 서울 등 대도시와 공장 등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곳곳에 송전탑을 세웁니다. 경남 밀양 초고압 송전탑 갈등은 본질적으로 대도시가 에너지 생산은 않고 소비만 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⁵⁴⁾

에너지자립마을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마을 공동체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려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을 말합니다. 즉, 에너지자립마을은 에너지 위기 회복능력을 가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사람들은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함께 에너지 사용량은 줄이고 생산량은 늘려나갑니다. 즉, 에너지를 절약하기도 하고 모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마을의 일상이 변화되며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합니다.⁵⁵⁾

실천하기⁵⁶⁾

마을 공동체 구성과 유지: 공감대 확산하는 주민교육, 마을과 학교가 만나는 에너지 교육, 공통 관심사 가진 이웃 모임, 에너지 절약 공동체로, 애착 높이는 자체회비, 일상에 지장이 없는 활동시간

살고 싶은 마을, 이사 오고 싶은 아파트 에너지 마을 축제

- ☆ 누구나: 매월 1회 불 끄고 별 보기 프로그램 중 단체 영화 관람, 에코장터, 천체 망원경 달보기, 친환경 음식 만들기, 친환경 비누와 양초 만들기, 멀티탭 꾸미기 체험
- ☆ 경험자: 자전거 발전기 및 적정기술 체험, 미니 태양광,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캠페인, 절약 상품 판매, 에너지 클리닉 행사, 에너지 절약 세대 시상
- ☆ 색다른 축제: 우리 동네 등불 축제, 스스로 집 고치기 함께하는 동네 집수리, 비전력 놀이 활동

- ☑ 공용전기로 절감: 공동시설 소등 순찰, 에너지지킴이 활동, 고효율 시설 교체, 난방 공급시설 교체, 태양광 설치
- ☑ 에코 마일리지: 에코 마일리지 관리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에코 마일리지 운영

에코 마일리지 운영

- 가정: 에코 마일리지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⁵⁷⁾에서 언제든지 자신의 에너지 사용량 확인
- 서울시: 매월 회원별 에너지 사용량 수집·제공, 6개월마다 회원별 에너지 사용량을 직전 2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 절약 우수 회원에게 마일리지 지급

- ☑ 대기전력 제로 도전: 냉장고 설정 온도 변경하기, HDTV 절전모드로 변경하기, 에어컨 코드 뽑아놓기, 인터넷 관련 전원(와이파이, 셋톱박스) 끄기.⁵⁸⁾
- ☑ 에너지 생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의 시작은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설치에 서울시가 실시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용량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에 가입 후 업체에 신청하면 됩니다(옥상태양광, 미니태양광, 소형 열병합발전소).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는 생활의 주체인 주민이 생활세계에서 직접 당사자가 되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 벌이는 활동입니다. 마을만들기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⁵⁹⁾

마을만들기는 대안적 실천운동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이고, 지역순환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협동사회 운동이며, 마을에서 출발하는 대안적인 실천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을만들기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입니다. 마을만들기는 진정한 주민자치와 생활정치의 실현을 위해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를 지향합니다.

마을만들기는 상호부조와 협동의 경제입니다. 우리의 의식주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와 마을 공간을 중심으로 상호부조와 협동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주체를 새롭게 발굴하고 이를 키워가고자 합니다.

마을만들기는 참여하는 생활문화입니다. 마을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개인의 자율적 삶과 공동체의 따뜻한 신뢰관계가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지향합니다.

마을만들기는 사회적 필요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시장과 국

가를 통해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적 필요(보육과 교육, 주거, 안전 등)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마을만들기는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각자의 필요와 창의성으로부터 다양한 활동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천하기

- 마을문화: 마을축제, 마을예술창작소, 음식공유
- 마을모임: 주민모임, 예술동아리(연극, 풍물, 밴드 등)
- 마을경제: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 지역화폐, 마을텃밭
- 마을매체: 마을신문, 마을라디오·TV, 마을 SNS
- 마을교육: 공동육아, 마을대안학교, 마을학교, 독서모임, 학습동아리
- 마을기획: 마을계획, 마을총회
- 마을공간: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공동작업실, 마을사랑방



착한 삶(Fair Life)

공정무역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다국적기업 등이 자유무역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생산이윤을 보장받지 못한 채 빈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한 대안적 형태의 무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⁶⁰⁾ 특히 커피, 차, 초콜릿 등에서 공정무역 라벨을 찾아보기 쉽습니다.

천 원짜리 초콜릿을 사 먹으면, 카카오 농부는 50원, 초콜릿 제조 판매 회사는 700원을 가져갑니다. 다른 상품들도 비슷한데, 면화 농민들은 소비자 가격의 3%도 받지 못하며, 종종 1%보다 적게 받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은 평균 하루 2달러 미만, 세계은행이 정한 빈곤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무역은 생산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생산과 생계를 보장할 만큼 합의된 최저가격을 보장합니다. 시장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합의된 최저가격만큼은 보존해줘, 생산자들의 생활도 안정시키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정무역 생산자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시장에 비해 2배가 넘는 이익을 보장받습니다.

공정무역은 제3세계의 생산 이윤을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의 환경 파괴적인 생산방식, 생산자의 건강권 침해, 아동노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합니다. 이를 위해 유기농 재배, 환경친화적 생산방식, 아동노동 금지, 생산지 마을 교육 시설과 훈련 및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에 재투자, 투명성과 책임성을 원칙으로 무역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들을 함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실천하기

공정무역 제품도 무턱대고 구입하기보다는 생산 환경을 꼼꼼하게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된 공정한 최저가격과 공정무역 공동체 발전 기금을 보장하고, 아동 강제 노동 금지, 차별 금지 및 결사의 자유 보장, 투명하고 장기적인 거래 파트너십, 생산지 환경과 생산자 건강을 해치지 않는 생산 방식 등 공정거래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쉬운 방법은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소속 공정무역 단체 제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발족한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에는 현재 ‘아름다운커피’, ‘기아대책 행복하나눔(비마이프렌드)’, ‘두레생협’, ‘APnet’, ‘아시아공정무역 네트워크’,

‘아이쿱생협’,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 ‘한국 YMCA 피스커피’, ‘더페어스토리’, ‘어스맨’, ‘얼굴 없는 거래’ 등 10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정여행

아름다운 태평양의 섬. 숲을 밀고 해변을 정비하며 대규모 리조트와 호텔이 들어섭니다. 농사 짓고 고기 잡던 주민은 삶의 터전을 잃고, 관광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여행자들이 지불하는 숙박비는 대부분 건물 소유주가 있는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현지인들은 저임금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갈 뿐입니다. 예전보다 수입은 늘었지만, 관광지화되면서 치솟은 물가 때문에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여행자들이 늘어나니 마을에는 물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해변과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게다가 젊은 세대는 여행자들의 소비력과 대중문화를 동경하며 전통문화를 경시하고, 이 섬을 떠나는 것이 꿈이라 말합니다.

여행이 의도치 않게 여행지의 경제와 환경, 문화에 이러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반성’,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이러한 소비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 그렇지만 여행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모여서 대안적인 여행문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여행, 책임 여행, 윤리적 여행 등 그 이름은 다양하지만 사람·자연·문화를 존중하지는 지향점은 모두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정여행’이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⁶¹⁾

실천하기

- ☑ 경제적 원칙: 방문한 지역의 사람들이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합니다. 숙박, 음식점, 렌트카 등은 되도록 현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을 이용해 돈이 현지에 환원되도록 합니다.
- ☑ 환경적 원칙: 탄소배출을 최소화합니다. 석유를 많이 사용하는 교통수단 사용,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현지의 야생생물 보호, 쓰레기 무단투기 하지 않기 등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 ☑ 사회적·문화적 원칙: 여행지의 문화, 역사, 사회, 경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여행합니다.

"우리나라 해외 관광상품은 심각하게 기형적이에요. 현지에 있는 모든 걸 한국사람들이 다 합니다. 심지어 식당, 마사지 숭, 쇼핑센터까지 한국인들이 운영하죠. 모든 한국인 관광객은 같은 동선으로 움직이고요. 패키지 여행을 가보면 황당한 게, 현지인들은 아무도 없는데 한국 사람들만 바글바글한 관광지들이 굉장히 많죠."

- '트래블러스맵' 변형석 대표⁶²⁾

공정여행 사회적기업 트래블러스맵 누리집: <http://www.travelersmap.co.kr/>

유해물질 줄이기

석유화학 제품과 같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런 유해물질들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의 몸과 자연을 위해 유해물질의 사용을 줄이려는 실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나 대안생리대 사용 같은 활동입니다.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남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소트라(Sotra)섬. 최근 이곳에서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무게가 무려 2톤에 달하는 거대한 민부리 고래(Cuvier's beaked whale)가 처참한 모습으로 해안에 쓸려나와 있었던 건데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고래의 몸속에서 각종 빵봉투, 사탕포장지를 포함, 무려 30여 개의 비닐백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플라스틱 쓰레기로 위가 가득찬 고래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소화기관에는 먹이를 먹은 흔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더이상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의 고래는 결국 안락사로 죽음을 맞이합니다.⁶³⁾

한편 한 사람이 평생 약 1만여 개의 생리대를 사용하고,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20억 개 가까운 일회용 생리대가 버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회용 생리대가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려면 100년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은 여성의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회용 생리대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부직포, 고분자 흡수시트, 방수층 등이 쓰이는데, 이중 부직포는 레이온 식물섬유 및 인조섬유를 화학접착제로 혼합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항균성을 높이고자 세제 등에 흔히 쓰이는 합성계면활성제로 생리대 표면을 처리하고 표백제와 인공향료를 첨가합니다.⁶⁴⁾ 일회용 생리대의 화학물질로 인해 극심한 생리통과 질염, 가려움증이 유발됩니다. 이러한 건강과 환경 문제의 대안으로 면생리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리혈이 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사용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친환경 면생리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제품이 보다 좋아지면서 이 같은 불편함도 사라졌습니다.

실천하기

- ☑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일회용 물병 대신 재활용할 수 있는 물병을 사용하기, 비닐 봉지를 사용하는 대신 장바구니 챙기기, 제품의 포장지 줄이기, 재활용 및 생분해가 가능한 원료 사용된 제품 이용하기
- ☑ 대안생리대 사용하기: 인터넷에서 대안생리대 제작방법을 찾아 직접 만들어 보기, 대안생리대 관리·사용방법 배우기, 대안생리대 알리고 함께 사용하기

보론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민주시민교육을 향하여



어떤 시민성인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다. 현재까지 논의된 시민교육의 정의를 정리해보면, 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발전·심화시킬 수 있는 시민적 ‘가치’와 ‘덕성’,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보그스(Boggs, 1991)는 특별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의 개념에 대해 “성인 시민교육(adult civic education)이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나 성인들에게 더 넓은 세계의 시민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⁶⁵⁾ 사실 이것은 시민교육을 정의하기보다 시민교육의 효과를 나열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 시대에 맞는 시민은 누구인가?’라는 한 가지 질문만으로도 상당한 토론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현 시대 시민은 누구인가? 시민이 양성되는 토대인 국가를 우선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가공동체의 정체성인 ‘민주공화국’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민주공화국의 역사적인 배경까지는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 민주공화국의 지향 가치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 양성평등, 지속가능성 등 행복한 삶, 좋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공유가치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법 제도의 형식보다는 어떤 내용,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가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 또한 원론적 가치의 수준이 아닌, 시민들 삶의 현장에서 함께 공유해야 하는 공유가치라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공유가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공공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경제 성장 지상주의 질서에서 주체적 시민들의 연대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질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주체성 회복,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 공공복리적 가치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공공성의 문제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헌법학자 루돌프 스펜트는 공공성에 대체로 다섯 가지의 의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첫째, 공공성은 공공연합, 일반적 이익의 영역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의미한다. 둘째, 공공성은 공개적 토론, 공개절차에서 진리 결백 및 정의가 획득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셋째, 공공성은 단지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고양된 의미를 내포한다. 넷째, 공공성은 집단적 생활영역의 주체, 즉 인민을 의미한다. 다섯째, 공공성은 현대 국가의 가장 고유한 과제의 본질을 의미한다.⁶⁶⁾ 이를 보다 간략히 정리해보면, 공공성을 규정 짓는 중요 요소는 인민(populus), 공공복리(salus publica), 공개성이라 할 수 있다. 즉 공공성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절차를 통해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민중 교육자인 프레이리는 인간화가 모든 일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비인간화는 진정한 인간본성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적절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인간의 자유는 인간을 완성시킬 수 있는 조건이다. 따라서 인간화는 개인의 목표라기보다는 사회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⁶⁷⁾ 결국 시민성(시민적 감성)은 개인이 인간답게 살려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이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성숙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구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안에 일깨워야 하는 것은 협동(상호협력)⁶⁸⁾의 시민성이다. 개인은 사회에서 분리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 서로 공감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즉, 인간에게는 타인이 느끼는 기쁨이나 슬픔, 분노 등 감정에 공감하려는 본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은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마음속 공평한 관찰자(양심)의 인정을 받도록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이 무한 질주를 적절히 제어하여, 외부강제가 없이도 사회질서가 형성된다. 사람의 성장과정을 보면 유아기에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나타나던 이타성이 사회화를 거치면서 점점 상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상호성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한 사회적 규범을 내재화하기 시작한다. 이타성이 협력이라는 형태로 일반화되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인 언어는 협력으로부터 얻어진 산물이다. 특정과제를 위해 여러 개체가 집단으로 일을 할 때 언어가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간의 언어는 협동과 함께 진화했고,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 발전했다. 상호협력의 진화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출발점이다.⁶⁹⁾

다만,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이런 포괄적인 합의조차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시민성을 키운다.’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어떤 시민성인가?’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어떤 활동,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성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가 필요하다. 그에 따른 인간상, 시민상에 대한 해석과 실천프로그램이 연구되고 지역현장에 맞는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실천 중심의 활동만을 고민해서는 안 된다. 민주시민교육을 협소하게 보지 않고 광의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할 때 시민교육은 단순히 민주주의 기술을 전수하는 교실의 차원을 넘어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배우는 시민학습의 공간으로 이해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서울대 한승희 교수는 “시민운동이 풍선의 껍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시민교육은 그 안을 채우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시민운동이 시민사회의 외적 경계를 확장하는 과정이었다면, 시민교육은 그 존재를 정교화하고, 역사적 기억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그 실체를 새로운 문화적 색깔로 칠하는 과정이다. 획득된 시민사회의 광장에 시민의 생각과 삶을 채워가는 과정이다.”⁷⁰⁾라고 말하고 있다.

그간의 민주시민교육운동은 상호간의 업무협조에서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민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정의되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시민교육포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안)〉에서는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그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의식을 함양하고, 각 분야에서 민주적 참여와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등 민주시민의 자질을 철차적으로 학습하는 제 교육”⁷¹⁾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한승희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을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가치, 이념, 사고, 행동 등을 형성함과 아울러 그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교육의 과정”, “국가의 일방적 정치사회화에 대하여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는 비판적 성인교육의 일환”⁷²⁾으로 규정한다. 이외에도 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 교양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 등 더욱 다양하게 정의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국사회 민주시민교육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시민교육

90년대 중반 이후 독일 ‘아데나워재단’으로부터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원칙과 방법이 소개되면서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독일에서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교육과 유사한 개념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이해부터 선거, 투표에 대한 이해와 실천, 정치 현안에 대한 이해 및 분석, 민주적 토론 문화 실현, 사회적 갈등 해결, 주민자치와 시민참여 등에 대한 논의와 실재를 담고 있다. 이런 시민교육을 토대로, 1990년 중반 시작된 마을만들기 운동과 사회적 경제 운동이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학습공동체 사회, 평생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

근대 이후 국가 주도의 학교로 교육이 집중되면서, 지역사회는 더이상 학습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하지만 지식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주변의 교육환경이 변하고 있고, 가장 주목할 것이 모두가 학습자이며 누구도 학습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학습권에 대한 자각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각은 기존의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학습공간으로

보고 있어서, 학령기라는 의미가 무색할 만큼 평생학습이 보편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모든 시민은 교육받을 권리, 학습할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교육은 평생 교육이며, 보편적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보면서, 법제화 이후 평생교육으로 시민교육이 확장되고 있다.

제도권 교육의 변화, 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

2011년부터 진행되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시민교육 실험과 몇몇 인문학습 공동체의 움직임은 제도권 교육에서 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교육청 내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학교 교과 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접목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후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계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와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고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는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교육은 교육 주체나 학습자, 관점에 따라 다양한 주제와 내용,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떠한 것도 시민교육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나름의 방식과 정의를 통해 시민교육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단체에서 강조하는 공통점은 교육 이후의 실천과 활동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와는 달리 교육과정 안에서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주입식 교수법이 아니라 참여와 토론, 활동 등 다양한 쌍방향 교수법과 함께 교육 이후에 배운 것을 나누는 봉사의 과정, 실천하는 참여의 과정, 자신의 판단을 이행하는 운동의 과정 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실천적 과정과 함께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교육이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일 것이다. 콘텐츠와 학습자 모집에 대한 경쟁체제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가진 시민교육 공동체로서 함께 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



어떻게 하는 시민교육인가?

일반적으로 교육이라 하면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를 위한 활동’을 말한다. 즉,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이유로 교육은 때로 이데올로기이며, 한편으론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시민교육은 그 시대가 안고 있는 과제와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이런 개념정리로는 현재의 시민교육을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 사실 교육(教育)이라는 어원부터가 목적의식적이다. 教育이란 한자어를 풀이하면 教는 매를 가지고 아이를 길들인다는 뜻이고, 育은 갓 태어난 아이를 살찌게 한다는 뜻으로 기른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듯 교육이란 개념 자체가 권위적이다. 학습이 학습자의 가치와 선택을 중시한다면,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의 계획과 통제가 중심이 된다. 학습이 가르침과 배움의 대화로 통합된다면, 교육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은 별개의 행위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교육의 쓰임새는 학습과 통합되어야만 온전한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⁷³⁾

결국, 시민교육은 교육과 실천이 분리된 교육이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교육과 실천을 함께하는 학습공동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스웨덴의 학습공동체운동(스터디 서클)을 국내에 소개한 한승희 교수에 의하면, 시민은 ‘시민의 사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시민이 된다고 설명한다. 시민은 개개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 집합성의 존재적 특성을 칭하는 말이다. 뿔뿔이 흩어진 시민은 더이상 시민이 아니다. 내 방안에 홀로 앉아 있는 나는 더이상 시민일 필요가 없다. 시민은 시민사회라는 관계적 맥락 위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시민교육은 시민사회의 맥락을 읽어내는 일에서 시작하고, 그 관점에서 국가와 시장을 읽어내는 문해력이다.⁷⁴⁾ 사회운동가인 황주석은 시민교육에 대해 생활가치를 세우는 것이라 설명한다. 생활가치를 생명가치, 지속가능한 삶 즉 일용할 양식의 가치로 보고, 생활가치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이 밥으로만 살 수 없고, 인정·신뢰·격려·희생·사랑의 영성이 함께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생활가치는 영(靈)과 육(肉)에 모두 관계된 것⁷⁵⁾이라고 말한다.

또한 시민교육은 ‘주장하는 교육에서 스며드는 교육’이다. 현재의 시민교육은 과거 민중교육과 다른 점이 있다. 과거 민중교육에서 교육은 ‘의식화와 조직화’의 관점에서 이해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프레이리 민중교육론의 핵심은 본래 지식의 생산과 분배가 직접 소비자로서의 민중들의 삶과 유리되지 않고, 민중의 생활세계 속에 뿌리내려 그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표현해 내고, 다시 역으로 그들의 삶을 변혁으로 이끌어 가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프레이리의 말과는 달리 한국의 민중교육은 엘리트 중심적 활동에 머물면서, 대중을 대상화하는 오류를 범했다. 결국, 밑으로부터의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이 길러지지 않고, 가르쳐서 변

화시키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⁷⁶⁾

민중교육의 맥락을 이어받은 민주시민교육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역시, 이러한 목적의식의 과잉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민주시민교육은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프레이리는 의식화에 대해 사물의 원인을 파악하는 비판적 반성으로 보았다.⁷⁷⁾ 프레이리의 책 《비판적 의식을 위한 교육》에 담겨 있는 ‘지도인가, 소통인가’는 프레이리의 교육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지식이론을 다루고 있다. 프레이리는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구분한다. 인간의 지식, 삶의 원천을 실천에 두고 있는 변증법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페даго지(프레이리의 민중교육론)의 핵심적 주제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고자 하는 이들이 주체로 바로 서야 하며, 대상화된 객체 즉 사물로 머무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은 피억압자들에 의해 그리고 피억압자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피억압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억압적 상황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실천을 통해 이러한 억압적 상황을 변혁할 수 있다고 프레이리는 말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의식화와 조직화’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그 의미에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 민중교육에 있어서 의식화 및 조직화의 주체 혹은 대상은 모두 개인들이었다. 민주시민교육은 조직, 단체 혹은 공동체를 그 단위로 한다.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조직, 단체, 공동체, 네트워크 등이 스스로 의식화 및 조직화의 단위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시민교육은 시민운동의 거울이라 할 수 있다.⁷⁸⁾

서구의 경우는 오랫동안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주목해 왔다. 민주제의 시작점인 영국은 공공정신을 강조하는 기존 학교교육을 바탕으로 비판적인 사고나 시민성 보다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법의 지배에 대한 존경을 강조해왔다. 그러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좋은 시민(good citizenship)과 적극적인 시민(active citizenship)의 개념을 만들고 학교교육의 변화를 모색했다. 영국 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학교에서의 시민교육과 민주주의 교육》(통칭 크릭 보고서, 1998)를 통해 정치문화의 변화와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생각하는 정치문화 창출을 위해 2002년에 시민교육을 국가공통 교육과정에 포함했다.

독일은 과거 범해졌던 정치적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면서 독일 국가와 시민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전체주의를 택했던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의무화했다. 시민들이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과 비판적으로 대결하고 정치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동기와 능력을 키워내기 위해 연방정치교육원을 설치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단지 교실에서 교사가 수행하는 공교육의 교과목표일 뿐 아니라, 국가가 시민 전체를 상대로 수시로 실시하는 일종의 체제교육 성격을 띤다.

또한 사회 통합적 방식의 민주시민교육을 합의하기 위해서 독일 정치교육 사례는 매우 중요하다. 독일 정치 교육의 3가지 원칙이 담긴 ‘보이텔스바흐 협약’⁷⁹⁾ 같은 최소 원칙을 공론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은 갈등 문제가 첨예한 한국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⁸⁰⁾ 독일은 연방정치교육원을 통해 국가주도의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에 입각한 사회 정치 생활을 영위하는 권리와 의무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국가의 내적 통합에 기여하였다. 이는 독일의 시민적 정치, 문화의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와 공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스웨덴의 민주주의는 스터디 서클 민주주의라고 불린다. 한국에는 2000년대 학습 공동체 운동으로 소개된 스터디서클의 기원은 노동자들의 회합과 교육을 위해 마련된 민중의 집을 거점으로 한 민중교육이다.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노동자와 중산층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 시민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학교교육과 시민대상 교육 전반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시민교육은 사회변화와 정책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저변기제로서 작동해 왔다. 스웨덴에서는 시민교육의 방향과 내용, 형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와 시민사회 주체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한다. 스웨덴 시민교육 거버넌스의 중심에 있는 시민교육위원회 역시 시민사회의 교육 주체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의체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시민교육 주체들에 대해 지원되는 재정도 시민교육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한다. 시민교육위원회는 시민교육을 실행하는 10여 명 규모의 학습동아리에서부터 전국단위 중앙조직까지, 시민사회 주체들이 촘촘하게 엮어진 결사체들의 망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사를 수렴한다. 그리고 이렇게 수렴된 의사는 공공성을 인정 받는다. 이러한 스웨덴 시민교육 거버넌스 체계는 현 한국사회에 시사점이 매우 크다.



한국형 민주시민교육은 가능한가?

여러 변곡점이 있었지만, 또 한 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2016년 촛불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불확실성 시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 향하는 데 민주시민교육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공감대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서구에서 먼저 시행한 민주시민교육의 장점을 우리 사회에 맞게끔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한국형 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

한국형 민주시민교육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한국 상황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영역에 대한 쟁점을 우선 정리해야 한다. 서구에서는 대체로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더라도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과도 따로 구별하지 않는 편이다. 게다가 학교교육도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적 견지 위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서구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자생적·순차적·전방위적으로 발전한 시민교육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했듯이 시민사회의 시민교육, 평생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 학교교육에서의 시민교육이 서로 다른 것처럼 규정되고 구분된다.

이러한 구별의 근거에는 그동안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기본이념으로 천명했을 뿐 실제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이 놓여 있다. 민주주의는 민주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이 있을 때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말처럼,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에 시민성을 일깨울 수 있는 기제가 작동하도록 합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영역을 뛰어넘는 융합적 관점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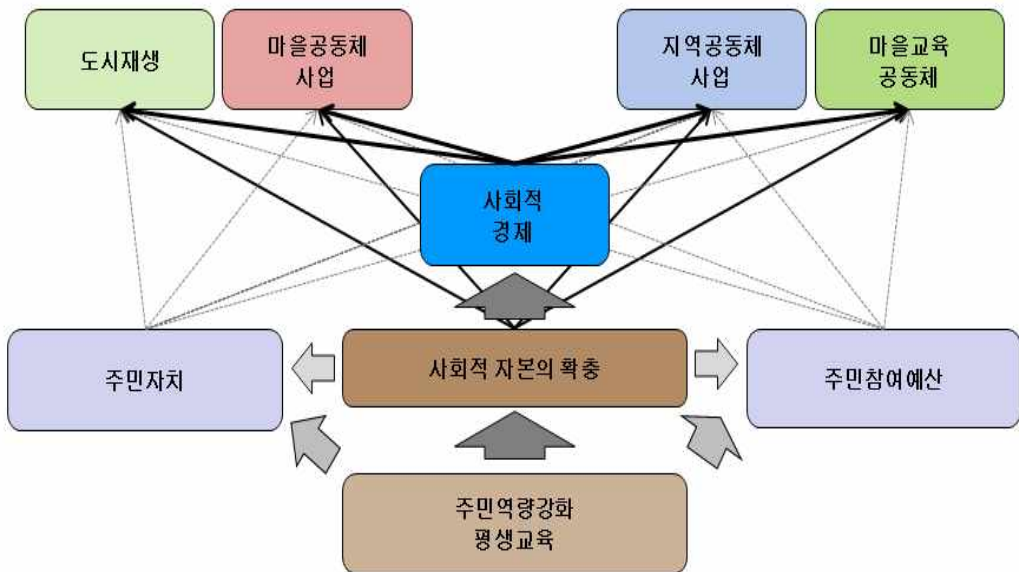
한편 시민사회에서 진행된 민주시민교육은 두 가지 쟁점이 있다. 하나는 정부차원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를 억압한 사회체제를 오래 겪은 특성상 우리 시민사회는 자원의 한계가 분명하고, 일반 시민대중과 유리된 경향이 있다. 압축적 발전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서도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당연한 의무라는 주장이다. 여기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다른 하나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정 내용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의 다종·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은 각 의제별 자체 교육에 집중된 경향이 있고, 시민의 기본소양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지식·기술·태도에 대한 본질적인 교육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새로운 영역으로 차별화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즉 민주주의 제도와 헌법 등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분류하고, 시민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분화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고 분화하는 것보다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꽃 피우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상황이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16년 촛불 이후 새 정부 들어 국정과제 전반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모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가 <중앙 중심 ⇒ 지역 중심>으로, <정부 중심 ⇒ 민간 중심>으로, <행정 중심 ⇒ 거버넌스 중심>, <보조금 지원중심 ⇒ 생태계 조성 중심>으로 제시되면서, 이 흐름에 맞는 틀과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런 기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치분권이라 할 수 있다. 올바른 자치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주민자치, 교육자치라는 관점에서 각각의 영역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유기적,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와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다음의 그림을 보면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참여예산제, 평생교육과 연계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시민사회 토대를 구상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 연계



마을운동 쪽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현재 어려움은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혁신읍면동 사업⁸¹⁾ 역시, 동을 기반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상하고 있고, 이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마을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마을중심정책으로 정리되는 정책방향은 동을 중심으로 복지와 자치 시스템을 주민들과 함께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해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치분권의 방

향을 담고 있다. 2017년 현재 마을운동진영은 마을비전, 마을계획, 마을재생의 단계를 세우고, 이를 주민참여예산제와 연동하는 구상도 갖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는, 도시라는 큰 틀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의 비전을 갖고 이를 실현할 주민 주체를 구체적으로 발굴하며, 추진과정에서 주민에게 주도권과 권한을 줄 때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학습체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최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사회적 실험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종합예술, 연결과 통합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종합예술’과 같다. 그리고 어느 한 단체나 운동영역이나 의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여러 영역에 산재된 민주시민교육의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통합시켜야 한다. 다양한 영역의 구분은 어디까지나 행정, 시민단체 혹은 학계의 관점일 뿐이다. 시민의 일상생활은 다양한 문제들의 종합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영역별 교육 간 연결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간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정리하고, 교육방법을 통합해 가는 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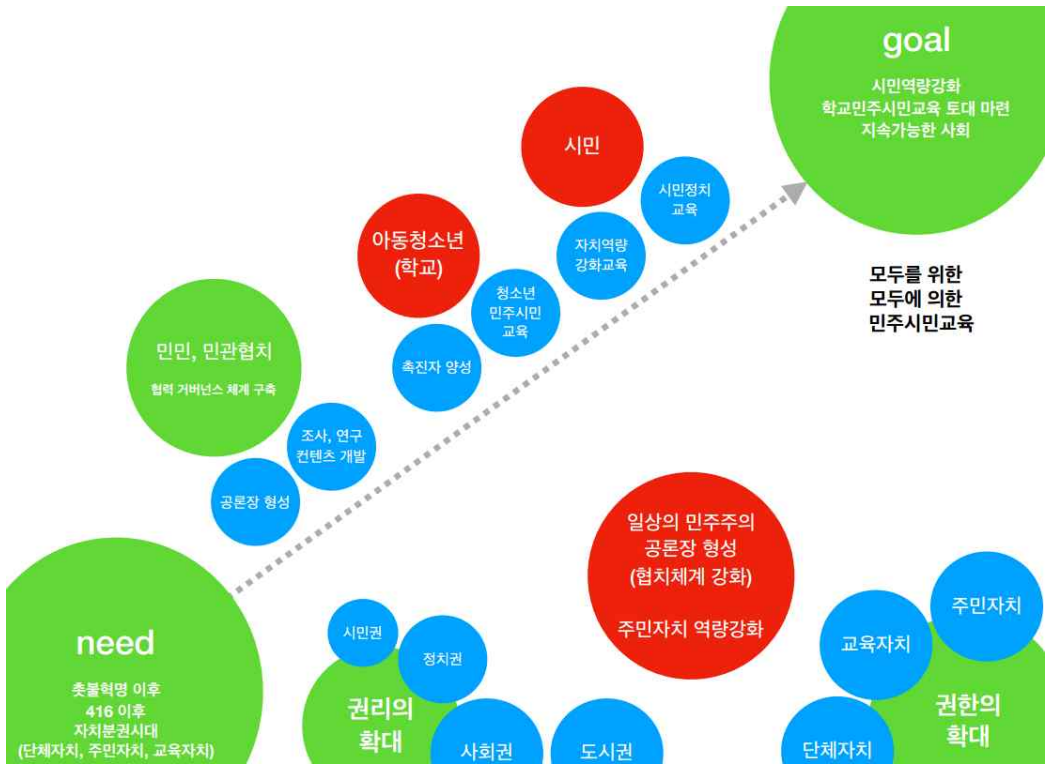
최근 교육부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학생 자치, 학생 인권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운동영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상을 갖고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시도를 꾸준히 진행하였다. 여수시에서는 교육자치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협치를 통한 지역교육문제를 모두의 과제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천인문의 관점에서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시민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하는 전통적 방식의 민주시민교육도 필요하지만,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시민교육의 명확한 꼭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아카데미교육, 학습공동체 방식의 시민교육은 지속적인 지원과 주체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시행되어야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을 이런 활동으로만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아카데미 방식은 명확한 대상을 정하고 이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행정공무원, 지역 오피니언 리더(주민자치위원, 통장, 입주자회 등)를 대상으로 시민의 권리를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 시민은 교육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닌 참여해서 능동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생산하는 생산자(생활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촛불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이 자치와 분권의 시대라고 규정

할 수 있다면, 다음의 그림처럼 하나의 방향으로 모두를 위한, 그리고 모두에 의한 민주시민교육은 가능해 보인다.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와 ‘시민’ 그리고 ‘교육’이라는 세 단어가 융합된 용어이다. 민주주의는 공공사회라는 지향, 시민은 이런 사회를 운영할 시민의 역량을, 교육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후변화, 세계화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시대에 공공성은 무엇이며, 이런 판단을 내릴 시민은 어떤 교육으로 양성될까?”는 모두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모두의 과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민주시민교육은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때 실현될 수 있다.

이런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큰 숙제이다. 거버넌스 체계 안에 행정과 시민사회는 시누이와 며느리 같은 묘한 긴장 관계와도 같다.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민에 기반한 중간지원조직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위상이 사회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을 견인하면서 주민 주도성을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이 주도하고 중간지원조직이 이를 수행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중복된 행정처리 체계를 하나 더 만드는 결과여서, 이를 넘어서야 변화의 과정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시민사회 간 신뢰를 쌓기 위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은 단기간의 성과중심으로 평가 할 수가 없다. 잘되는 듯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없어지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긴 호흡으로 축적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만 계속 물을 붓는 것이 중요하고, 왜 물을 부어야 하는지에 대해 민관이 납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납득의 과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라는 두 축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적, 국가적, 지역적 흐름을 읽고, 지역현실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정책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융합적 관점도 필요하다.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과제가 독립된 독자적 영역이 아닌, 연결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점과 점이 연결되어 선이 되듯, 현재는 선과 선을 연결해 그물망을 만드는 추세이다. 주민들의 성장을 돕는 것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한을 가지고 직접 그 일을 하는데 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될 때 지역 내 다양한 거점이 형성되고 거점간의 연결을 통해 운동 모델이 만들어진다. 한국 민중교육의 산증인인 허병섭 목사의 “그들을 위해 외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게 하라”는 외침을 다시 곱씹어 볼 때이다.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행동할 때 주체가 형성되고 결국, 그 주체가 있을 때 실질적 변화는 일어난다.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민주제를 운영할 시민은 누구인가? 어떻게 양성되는가? 정답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듯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논의가 확산되고 축적되길 기대한다.

부록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프랑스)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프랑스)

프랑스의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라는 책⁸²⁾인데, ‘프랑스 아동 민주시민 독본’으로 널리 알려진 글귀를 여기에 소개합니다. 이 자료는 ‘민주시민’의 모습을 구체적인 언어로 풀어, 민주적으로 살아가는 시민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질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쉬운 우리말로 ‘민주시민’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만들기 전까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1) 선택한다는 것

인생은 선택의 순간들로 점철되어 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 거절할 때와 수락할 때, 떠날 때와 머무를 때를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나 저것이나의 ‘이냐’야말로 두 개의 사물을 항상 서로 분리시킨다. 선택이 너무 어렵거나 선택이 망설여질 때,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서로 충돌할 때, 그리고 무엇이 최선의 것인지를 알지 못하거나 선택 자체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흔히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말하자면 기권을 하는 것이다.

기권은 선택의 권리를 다음 순간을 위해 유보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부모를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선택의 권리를 넘겨주는 때도 가끔 있는데, 나의 선택이 아닌 그들의 선택은 거의 예외 없이 나에게 최악의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선택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2) 수락한다는 것

인생은 무엇을 수락하고 싶으나 수락하고자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이냐가 확실하지 않은 순간들로 점철되어 있다. 무엇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수락할 그 무엇이 무엇인가가 확실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친구들의 의견이 나의 의견과 다르다 하더라도 친구들에게 내가 수락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해서, 또는 명백한 일인데도 우리 자신이 너무 소심해서 무엇을 수락하지 못하는 때가 가끔 있다. 우리가 무엇을 수락해야 하며, 무엇을 수락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수락 이후의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수락에 따른 미래가 행복할 것으로 느낀다면 과감하게 수락을 해야 한다.

3) 거절한다는 것

인생은 하고 싶지 않거나 자기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불분명한데도 타인으로부터 무엇을 끊임없이 요구받는 순간들로 점철되어 있다. 그런데 거절할 경우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우리에게 수락을 요구하는 자가 위협적인 존재일 때 특히 그러하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살 수는 없으며, 따라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무엇을 수락하고는 곧바로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후회의 병을 얼마나 오랫동안 앓느냐에 달려 있다.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이에 따른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 그럴 용기가 없을 때는 평소 자기가 믿고 있는 사람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4) 지켜야 한다는 것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에는 우리의 선택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우선 우리의 의회대표들이 투표로 제정한 법률들이 있다. 말하자면 어른들이 만든 법인데, 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런 법들을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를 감시하기 위해 경찰이 있다. 그리고 법관들은 법을 어겼다고 경찰이 고발한 자들의 유죄와 무죄를 판결한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도둑질할 권리와 폭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만약 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어느 누구든 이 같은 선택을 둘러싸고 옹고그름의 토론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선택 자체를 비난할 권리는 갖고 있지 못하다.

5) 관용한다는 것

인생에는 타자의 선택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 신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신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들도 무엇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용한다는 것은 타인의 삶의 방식이 나의 그것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관용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토론할 수 있어야만 관용의 정신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토론 자체를 거부한다든가

폭력에 의존한다든가 무조건 강요를 하거나 암살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관용은 무가치한 것이다.

6) 저항한다는 것

인생에는 흠어진 개인이 아니라 그룹을 지어야만 대처가 가능한 순간들이 있다. 어떤 그룹은 자기들의 신앙을 강요하기 위해 억압과 폭력을 행사한다. 또 가끔 있는 일이지만, 사회가 병들었을 때 그 사회는 희생자를 찾아 나선다. 그 사회는 모든 잘못을 뒤집어쓰려고 ‘희생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희생양을 찾아 나설 뿐만 아니라 희생양을 살해해서 제단에 바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이 같은 폭력 상황 아래에서 공공연한 저항은 아주 위험해질 때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비밀리에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귀중한 것은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자기의 처음 견해를 꺾지 않는 일이다.

7) 뛰어든다는 것

인생에는 텔레비전 영화를 감상할 때처럼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는 순간들이 있다. 뛰어들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혼자 힘만으로 여기에 뛰어 들 수 없다면 어른들에게 달려가야 한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 구조요청이 늦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자주 있다. 더군다나 프랑스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가끔 위험 상황 자체가 더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위험에 빠진 사람을 고통 속에 놓아두거나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더 심각한 것인지를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8) 위험을 남에게 알린다는 것

인생에는 못 본 척 외면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순간들이 있다. 친구가 부모에게 매를 맞거나 상급생이 하급생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것을 볼 때나, 어른들이 그들 스스로는 하기 싫어하거나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아이들에게 대신 시키는 것을 볼 때가 그런 순간이다. 이럴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은 어른들에게 이를 알려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큰일이다. 그리고 희생자가 두려움 때문에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알릴 경우 상황이 좋아지기보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9) 의심을 갖는다는 것

인생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는 순간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말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던데’라고 전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때 누가 처음 ‘그러던데’의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느 누구도 아닐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루머인데, 루머의 대부분은 사실상 거짓말일 때가 많다. ‘사람들이 그러던데’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일단 여기에 의심을 가져야 한다.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머에 대해 약간은 진실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런 뜬소문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10) 아는 것과 믿는 것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혼동할 때가 가끔 있다. 싸움도 그렇지만 어떤 사태를 목격하게 될 때,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사태의 처음을 보지 못했을 경우 우리는 누가 싸움을 먼저 걸었는지 상상을 하게 되고, 이 상상을 현실인 것처럼 믿게 된다. 자기가 믿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확실하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널리스트들이 사건의 표면만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저널리스트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 논평하기 전에 먼저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도 믿는다고 할 때는 여기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한다.

11) 참여한다는 것

민주사회에서는 어른들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관계자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선거이고, 국민투표이다. 그리고 학교에서든 지방의회든 놀이시설이든 어린이들과 관계가 있는 계획이라면 어린이들의 의견을 모아야 할 때가 자주 있다. 이럴 경우 어린이들은 스스로 자기의견을 밝혀서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생각은 조용하게 하고, 발언은 분명하고 높은 목소리로 해야 한다. 자기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기 의견을 밝히려고 하지 않거나 토론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서야 사물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12) 대화를 한다는 것

인생에는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할 때가 있다. 남이 하는 말이 잘못된 것인지, 일리가 있는 것인지, 남의 말에 동의하는지 않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 보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자기성찰이 가능하다. 남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여기에 응답하는 것이 대화이다.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 일부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처음 생각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의 견해와 일치하는 문제의 해답을 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말하는 것은 귀머거리의 대화이다. 남의 이야기에 귀기울이지 않고 혼자 떠드는 것은 공동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13) 자기 의견을 밝힌다는 것

인생에는 남의 말을 듣는 것 이상으로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 가끔 우리는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수줍어하거나 자기 의견을 밝히지 못하는 때가 있다. 또 나의 말이 어느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남의 말을 들어보면 남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남과 다른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면 되는 것이다. 나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도록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분명하다면 말도 분명해지고, 남에게도 분명하게 들린다.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기 의견을 드러내 놓고 분명하게 밝혀라.

14) 자기 통제를 한다는 것

인생에는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의견을 완전히 달리할 때가 있다. 이때 우리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고함을 치며, 화를 내게 된다. 그리고 고약한 말을 입에 담게 되고, 자기 통제력을 잃어 곧바로 후회하게 될 말과 행동을 한다. 남으로 하여금 나를 존경하게 하고 싶다면 남을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통제되지 않는 반사 신경에 자동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 남의 말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흐릿하지 않고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토론을 위한 쟁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자기 통제는 폭발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다.

15) 항거한다는 것

인생에서 우리는 불의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개인도 불의의 희생자가 될 수 있고, 단체와 국가도 불의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잘못의 책임을 나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 불의이다. 예를 들어 독재자나 전체주의 국가가 국민에게 강요하는 게임의 법칙이 그런 것들이다. 이럴 경우 우리는 정의를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불의에 항거하고 투쟁을 하며, 동맹자를 찾아 나설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내가 동의하지 않은 게임의 법칙이라고 하더라도, 이 게임의 법칙이 사회 구성원 다수가 민주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면, 그것은 불의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의 차이일 뿐이다.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645호, 2014.1.9. 제정/시행] 서울특별시(평생교육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자치구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자치구 내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2.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5조(이수현황의 파악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의 통·반장 및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등의 민주시민교육 이수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표창)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645호, 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만나다

영유아 환경 여성 어린이
갈등해결 네트워킹
아동 청소년 민주 시민 교육
재정 민주주의 헌법 청년 성평등
마을 민주주의 헌법 노동 갈등해결
역량 강화 양심 사회적 경제 소통과 협업
평화 인권
정치 참여 통일 장애인 권리

사회참여
 사회문제에 관심 가지기
 우리 동네 문제 해결하기
 ...

정치참여
 주민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
 ...

경제참여
 직장내 민주주의
 착한 소비
 ...

삶터

우리 삶의 터전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시민으로서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입니다

- 2014. 1.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 2014~2016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 2017. 4.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설립



서울시와 시민사회가 함께
'더 성숙한 시민되기'를 지원합니다.

흥사단은 그동안 펼쳐온 민주시민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민주주의 학습과 실천을 지원하는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를 수탁하였습니다.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 경험을 모으고
시민과 함께 지라나기 위해, 시민·시민사회·서울시와
손잡고 센터의 사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협약단체: 사단법인 시민, 시민과 미래, 한국YMCA전국연맹)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보고는 시민이 함께
약진하여 보다 나은 삶의 터전과 환경을 만드는 풍성한
민주사회의 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03086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22 흥사단 3층 | 02-747-2020
seoulminjucenter.kr | smc@seoulminjucenter.kr
www.facebook.com/seoulminjucenter (페이스북)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소개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배움

내 주변을 바꾸는 실천



01 시민 학습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주제로 모든 계층을 위한
여러 방식의 민주주의 학습

강의형 프로그램 헌법 등 법과 제도, 정책, 이슈, 민주주의 이론 등
참여형 프로그램 월드카페, JETTS, 사람책, 디베이트, 원탁토론 등
실습형 프로그램 갈등해결, 퍼실리테이터, 강사양성과정 등
실천형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 학교시민교육, 계층·지역문제 해결 등

지원내용 :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는 단체, 협동조합 등의 프로그램 사업비



읽고 듣고 배우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기

02 민주시민교육 과정 개발 및 확산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학습에서
실천까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확산도도록 하는 기획사업

교육과정 개발 중점분야에서 필요한 교육과정 만들기
교재, 교안 개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교재와 교안 만들기
강사양성과정 개발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 있는 강사 교육과정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양성된 강사와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 진행 후 피드백
주요대상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활동가 등

지원내용 :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사업비
교재 및 교안 공유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자치구 협력사업 전개



03 시민 학습·사회참여 모임 지원

서울에 거주·재학·재직하는 시민 누구나 5명 이상이 모여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동아리 만들기

다양한 관심사로 나에 대한 관심 : 성장, 이론 학습, 인문학 등
우리에 대한 관심 : 마을과 학교, 우리 일터 등
사회에 대한 관심 : 정치참여, 경제정의 등

시민을 만나 함께 이야기하고 배우고 행동하고
호혜와 환대 속에서 연대로 나아가기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모임

지원내용 : 서울시민 5인 이상 모임의 활동비 (도서 구입, 워크숍, 캠페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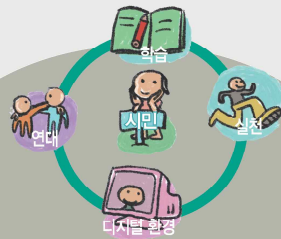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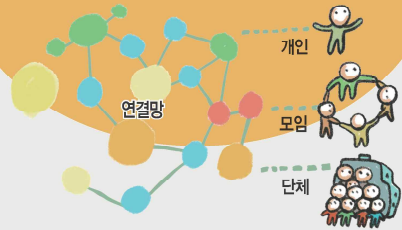


04 네트워크 확산과 시민 역량강화

민주주의를 학습하고자 하는 개인·모임·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네트워크가 풍부해지도록 지원합니다.

민주시민교육 포럼 민주시민교육의 이론, 기술, 제도화 등을 논의하며 연결망을 만드는 프로그램

시민 정책가 워크숍 사례공유와 민주적 의사소통 실습을 통해 관계망을 만드는 프로그램



민주주의를 학습하고자 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배우고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 프로그램 공유,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산합니다.

05 민주시민교육 환경 조성

미주

- 1) 카를-알브레히트 이멜, 2009, 《세계화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현실문화연구, 20쪽
- 2) 윤순진, 2008, 〈기후변화가 요구하는 시대적 성찰〉 (기독교환경운동 정책세미나 발제문)
- 3) 토크빌은 자신의 저서인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사회 대다수의 행복과 평등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의롭지만,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불러와 공적 영역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고 다수에 예측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다수에 의한 전제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와 가치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그렸고, 공적 영역의 필요성을 말했다.
- 4) 로버트 달, 김왕식 옮김, 2009, 《민주주의》, 동명사
- 5)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6) 한국NGO학회, 2014, 〈서울시 시민참여행정의 성과와 과제〉
- 7) 신영복, 2015, 《더불어 숲: 신영복의 세계기행》, 돌베개
- 8) 철학사전편찬위원회, 2012, 《철학사전》, 증원문화
- 9)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 10) [네이버 지식백과] 정치 (두산백과)
- 11) 엘리스 존스·브렛 존스·로스 헨플러, 장상미 옮김, 2012,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꼼꼼한 안내서: 참여하고 행동해서 우리가 세상 만들기》, 동녘
- 12) 1968년. 독일 연방 정치교육원 홈페이지(<http://www.bpb.de>) 참조.
- 13)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olkbildningsradet.se>) 참조.
- 14) 영국 시민교육자문위원회, 2008, 〈학교 시민교육과 민주주의 수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15)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5, 〈시민사회의 시민교육 체계 구축과정 연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 16) 정상호, 2013, 《시민의 탄생과 진화: 한국인들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나》, 한림대학교출판부
- 17) 주성수, 2017, 《한국시민사회사: 민주화기 1987~2017》, 학민사
- 18) 엘머 에릭 샤프슈나이더, 박수형·현재호 옮김, 2008, 《절반의 인민주권》, 후마니타스
- 19) 한나 아렌트, 이진우 옮김, 2017, 《인간의 조건》, 한길사
- 20) (사)시민, 2016, 〈어서와, NGO는 처음이지?〉
- 21) 하승우, 2014, 《공공성》, 책세상
- 22)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작동원리를 각각 재분배, 교환, 호혜로 설명하는 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칼 플라니, 홍기빈 옮김, 2009,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 길
- 23) 조희연, 2016, 《투 트랙 민주주의 1: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병행 접근》, 서강대학교출판부
- 24)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5, 〈시민사회의 시민교육 체계 구축과정 연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 25) 존 듀이, 김성숙·이귀학 옮김, 2016, 《민주주의와 교육: 철학의 개조》, 동서문화사
- 26) <https://www.open.go.kr> 참조
- 27) [네이버 지식백과] 공익제보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28) [네이버 지식백과] 셰어 하우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29) '그래서 만났다, 07 우리동네 사람들'. 김지선, 2015, 《적당히 별고 잘살기》, 슬로비
- 30) <https://www.facebook.com/page.minsnailunion>
- 31) <http://www.knocklibrary.org/>
- 32) 네이버 캐스트 [피플] 샘터 “씨 뿌리는 사람들-똑똑도서관 김승수 관장”, 똑똑도서관 누리집
- 33) <https://www.flry.k>
- 34) <https://www.facebook.com/omkim2012/>
- 35) www.donor.or.kr
- 36) 브릿지경제, “장기기증 서약을 망설이는 당신에게” 2017. 11. 28
- 37) (사)한국자원봉사문화, 2017, <2017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 38) 엘리스 존스·브렛 존스·로스 헨플러, 장삼미 옮김, 2012,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꼼꼼한 안내서: 참여하고 행동해서 우리가 세상 만들기》, 동녘
- 39) [나무위키] 생활협동조합
- 40) 《에코뷰 함께 사는 길》, [특집] “역사에서 찾는 생협운동의 미래-장건”, 2005. 9. 25.
- 41) 김찬동 외, 2014,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의 혁신방안>, 서울연구원
- 42) 이호, 2016,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와 활성화 방안>
- 43) <http://watch.peoplepower21.org>
- 44) 《프레시안》, “석면이 검출됐다! [함께 사는 길] 학교 석면 문제 공론화시킨 두 엄마 이야기”, 2017. 11. 4
- 45) 《뉴시스》, “서울 시민자율환경감시단 꾸려져…2년간 위반행위 적발”, 2017. 9. 12.
- 46) 페이스북 [facebook.com/kfem.factcheck](https://www.facebook.com/kfem.factcheck), 블로그 <http://kfem-factcheck.tistory.com>
- 47) 김병권, 2017, <사회혁신>, 서울연구원, 33~38쪽 수정인용.
- 48) 사각사각 프로젝트, 투정, 동물개체인식연구소는 서울시NPO지원센터가 개최한 ‘2017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쇼케이스’에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 49) [네이버 지식백과] 적정기술 (창의융합 프로젝트 아이디어북, 2015. 6. 10, 한빛아카데미(주))
- 50) 《전원주택라이프》, “세상을 바꾸는 기술 ‘적정기술’ ②국내 적정기술 현황과 다양한 적정기술”,

2015. 2. 25.

- 51) 《전자신문》, “쉐어라이트, 취약계층에 온열LED 의자 개발…노점상에 무상제공한다”, 2017. 9. 24.
- 52) <http://noplug.tistory.com/>
- 53) 농작물을 재배할 때, 흙이 마르는 것과 비료가 유실되는 것, 병충해, 잡초 따위를 막기 위해서 벚짚, 보릿짚, 비닐 등으로 땅의 표면을 덮어 주는 일
- 54) 《한겨레》, “‘에너지 절전소’ 성대골…평범한 동네가 ‘절약 메카’로”, 2015. 2. 8.
- 55) “에너지 자립마을을 찾아서” 한국가스공사 블로그 <http://blog.kogas.or.kr/221141954555>
- 56) 서울시, 2016, 〈누구나 따라하는 우리 마을 에너지 절약 레시피〉 요약 인용
- 57)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ecomileage.seoul.go.kr, 모바일 웹사이트 m.eco.seoul.go.kr
- 58) 자세한 내용은 원전하나줄이기 <http://energy.seoul.go.kr> 참조
- 59)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정책연구위원회, 2015, 〈2015 전국 마을선언(초안)〉
- 60) [네이버 지식백과] 공정무역 (두산백과)
- 61) 《시사IN》, “공정여행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발췌), 2011. 8. 11.
- 62) 《비즈니스》, “‘패키지 상품’으로 병든 한국 관광문화 ‘공정여행’으로 바로잡다”(발췌), 2017. 3. 8
- 63) 그린피스 누리집 <http://www.greenpeace.org>, “플라스틱 없는 바다를 위해 우리가 함께 만든 작지만 큰 파동”, 2017. 2. 13
- 64) 《오마이뉴스》, “일회용 생리대, 이 정도로 문제일 줄이야 [서평] 몰랐던 사실 알게 해주는 <세계 따라하는 핸드메이드 생리대>”, 2010. 11. 29
- 6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시민교육현장지침서〉 28-29쪽
- 66) 조한상, 2009,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1쪽
- 67) 존 엘리야스,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김석규·김연순 옮김, 2004, 《플레이리와 교육: 해방의 교육자》, 살림터, 92쪽
- 68) 협동의 의미는 단순히 협력한다거나 도덕적으로 돕는다는 의미가 아닌 로버트 데이비드 퍼트남(Robert David Putnam)이 말한 결합(Bonding)과 연결(Bridging), 즉 사회적 자본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결합 사회적 자본은 또래, 같은 인종, 같은 종교와 같은 사회화 과정에 동일한 특성들 사이에 생겨나는 사회적 자본을 말한다. 다인종 사회에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적 자본, 즉 연결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고 그는 주장한다. 연결 사회적 자본은 다른 축구팀의 팬클럽과 같은 이질적인 집단 사이에 생기는 사회적 자본을 말한다. 퍼트남에 의하면 두 사회적 자본은 상보적으로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 69) KBS사회적자본 제작팀, 2011, 《사회적 자본》, 문예춘추사, 263~264쪽
- 70) 한승희, 〈2013 시민교육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시민교육의 이론과 현실’
- 71) 한승희, 〈2013 시민교육 심포지엄 자료집〉, 25쪽

- 72) 한승희, 2002, <민주시민교육길라잡이> ‘서문: 민주시민교육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7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시민교육활동길잡이, 우리 시민교육 해볼래요?> 22-23쪽
- 74) 한승희, <2013 시민교육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시민교육의 이론과 현실’
- 75) 황주석, 2015, 《마을이 보인다 사람이 보인다》, 한국YMCA전국연맹
- 76) 미국의 민중교육자 마일스 호튼은 주민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민중들이 우리에게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도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민중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중의 언어는 대부분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비전이다. 상황이 스스로 발전되도록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 스스로 성장하도록 해야지 하면서도 정작 실제 하는 일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였다.
- 77) 존 엘리야스,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김석규·김연순 옮김, 2004, 《플레이리와 교육: 해방의 교육자》, 살림터, 26쪽
- 78) 한승희, 2002, <민주시민교육길라잡이> ‘서문: 민주시민교육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79) ‘보이텔스바흐 합의’란 정치교육에 대한 합의사항으로, ▲ 교화 및 주입식 교육의 금지, ▲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교육에서도 논쟁 중인 것으로 소개, ▲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당면한 정치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자율적으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말한다.
- 80) 2005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무총리자문 시민발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상을 보편성, 공익성, 민주성, 자발성으로 정리한 바 있다.
- 81) 이 명칭은 현재 폐기됐고, 대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란 명칭이 사용된다.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 82) ‘프랑스 아동 민주시민독본’으로 널리 알려진 이 글귀는 《대안은 열린 애국주의다》(최병권, 1999, 열린책들) 206~216쪽에 인용되어있다. 저자가 파리에 살 때, 옆집의 장난꾸러기 아이 폴이 공원벤치에 앉아 꺼내어 읽은 작은 책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책은 문고판으로 한쪽에는 만화가, 다른 쪽에 스무 줄 남짓의 글귀가 적혔는데, 글귀만을 인용한 것이 널리 퍼져 ‘프랑스 아동 민주시민독본’으로 회자되고 있었다. 책 정보를 찾을 수 없었지만, 원문의 책제목으로 재인용한다.

더불어 사는
삶

현장을 담은 안내서입니다.

본 안내서의 집필진은 시민교육활동가들입니다.
수년의 현장경험 속에서 정리한 내용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민주주의가 최고의 제도가 아닐 수 있듯이 본
안내서 역시 표준전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세대마다 다시 태어난다’
는 존 듀이의 말처럼,

이 안내서 역시 또 다른 경험을 가진
분들에 의해 새로운 내용들이 담기길
기대합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

학습하고 실천하는
삶



서울특별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기구입니다. 본 센터는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하여,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든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서울시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센터의 로고는 시민이 함께 약진하여 보다 나은 삶의 터전과 환경을 만드는 풍성한 민주사회의 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